



인권교육사랑방

110-522 서울시 중로구 명륜2가 8-29 (4층) 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인권하루소식

합본 12호

1999년
1월 ~ 6월

R1.1.12



인권교육사랑방

R1.1.12

인권하루소식

합본 12호
(1999년 1월 ~ 6월)

인권하루소식

참고 문헌
#제거하지 아시오

 인권교육사랑방

<인권하루소식> 99년 4월분 총목차(1339-1359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349	4/16	1	"정형근, 감히 인권을 팔아?" - 유엔인권위 참석 결정...인권단체, 분노·경악/〈만화사랑방〉 정형근
		2	노·농·빈 연대투쟁 결의, 재벌체제 및 정치권 개혁 촉구/〈인터뷰〉 양연수(전빈민 의장), 소희주(전농 총무부장), 정성희(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불심검문 취재기자 강제연행, 한총련 대의원대회 전날 경찰 불법행위 기승/이적표현물 기준이 됩니까? 기획사 직원들 체포 이틀만에 석방
1350	4/17	1	'인권정부'? 실은 '폭력정부' - 불심검문 항의 대학생 무조건 연행/정형근 유엔참가 지지 행동 잇따라, 고문피해자 방양균 씨 제네바행/지하철 사태, 정부가 초대 - 민변, '노동자와 교섭' 촉구
		2	〈제네바소식〉 ⑥ 코소보사태 결의안 통과 - '국익'에 밀린 '인권'/〈인터뷰〉 로라 조이스(남아공 대표) - "유고와 나토는 무력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1351	4/20	1	지하철 선봉, 공공연맹 총파업 - 노동시간 단축 등 요구...한국통신도 참여 예정/〈현장〉 명동성당 천막농성장 - "어떤 마음가짐이냐고요? 죽기 아니면 살기죠"
		2	경찰, '영남위 디스켓' 손댔다 - 재판부 증거능력 인정 여부 관심/주간인권호름(4월 12일-4월 18일)
1352	4/21	1	대우캐리어, 노동시간 단축 - 99년 입단협서 주 40시간 타결/레드 헌트 이적표현물 아니다 - 강릉법원, 대학생에 무죄선고/울산시민대책위 기자회견, "디스켓 증거채택 불가"
		2	〈인권시평〉 때도독 이야기, 그리고 그 위상(채만수 한국노동정책이론연구소 부소장)
1353	4/22	1	"세상을 바꾸자" 투쟁 고조 - 과기노조, '과학의 날'에 총파업 합류/한라중공업 하청노동자 노숙농성, "1천3백여 노동자 생존권 위협" 주장
		2	〈파업노동자가 말한다〉 "우리 함께 살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묵이 묶인다는데 발이야 잠시 묶어도..."(어느 시민의 글)
1354	4/23	1	검찰의 헛바다, 조선일보 - '지하철 파업' 왜곡편파 보도/전국 교수 83명 성명발표, "노동자총파업 지지"/〈만화사랑방〉 지하철 파업
		2	"민민생존권 스스로 지킨다", 전국민민연합 출범/대학생 3백명 단식농성, 명동성당에서 노숙/한총련, 복지령 받는 조직 아니다 - 황선 씨, 특수집입탈출혐의 무죄/〈인터뷰〉 명동성당 농성 대학생
1355	4/24	1	현행 노동법, 파업권 원천봉쇄 -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 단체행동권 박탈/성직자 62명 "파업지지" - 국제엠네스티 "파업권 보장" 촉구/경찰, 시민단체 활동가 폭행 - 군산미군기지 항의집회 도중/민청노회 정역 2-4년 구형,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혐의
		2	〈제네바소식〉 ⑦ 국가인권기구 논의 - 호주 인권위 대표 "정부 간섭" 비판/여야 의원, 인권법안 비판 - 인권법안 국회법사위 상정
1356	4/27	1	노동자들, 울분을 뒤로 한 채...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중단 선언
		2	대한변협, 법률구조사업 확대 - 소송비, 경우에 따라 변협이 부담/명예회복·진상규명 외침 꼬박 1년 - 정치권, '특별법 제정' 아직도 외면/주간인권호름(4월 19일-4월 25일)
1357	4/28	1	분신노동자에 방화혐의 씌워, 조폐공사 강승희 노조위원장 구속/멈추지 않는 투쟁 예고 - 파업중단 노동자, 연행/〈기자의 눈〉 파업권을 '왕따'시키는 사회
		2	'이적규정', 속내는 '학생운동 말살' - 각 대학 학생회 간부 줄줄이 구속/충북여성노조, 경찰폭력 고소 - "파출소장이 폭력행사" 주장/대경연합 집행위원장 체포, 보안관찰 신고 불이행 이유/〈새로나온 책〉 「하원이 학생을 망친다」
1358	4/29	1	집시법 개악 초읽기, 집회금지 사유강화...5월 3일 본회의 상정/〈집시법 개정안〉 주요 신설조항/일본 인권운동가들, 한국 양심수 후원회 결성
		2	〈요약〉 호주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 - 비틀어진 남아선호사상의 대물림/〈기고〉 피의자에게 밥도 맘대로 못사줘(민주노총 서울본부 총무부장 정경화)
1359	4/30	1	인권기구 문제, 범사회적 대응 - 70개 사회단체 '공동대책위' 결집/안되니까 '전투경찰실치법'까지... 경찰 불심검문 새 근거로 제시/제소자 면담요구권 인정 - 법원, 국가배상 판결
		2·3	99년 4월분(1339-1359호) 총목차

인권하루소식

99년 5월

(제1360호 - 제1379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5월 1일(토)

제 136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대학생 인권유린 극에 달해

한총련 불탈퇴 이유, 대학생 검거선풍

대학생들의 인권이 마구 짓밟히고 있다. 한총련 이적규정을 빌미로 진행되는 당국의 대학생 탄압은 영장도 없는 불법연행·구금에서부터 폭력행사에 이르기까지 극을 달리고 있다.

28일 대한예수교장로회신학대학교(장신대) 총학생회장 임영복 씨와 부총학생회장 좌동엽 씨는 "한총련과 상관없다는 사실만 확인해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따라 저녁 7시경 동부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그러나, 두 사람을 데려간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형사들은 경찰서 건물로 들어서자마자 "긴급체포한다"고 밝힌 뒤, 이들을 동부서 보안2계로 넘긴 채 돌아갔다. 이후 보안2계 형사들은 "한총련 탈퇴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며 이튿날 저녁 7시까지 24시간 동안 두 사람을 강제 구금했다. 이날 동부서 형사들은 영장제시를 요구하는 두 학생에게 끝내 영장을 보여주지 못했다.

만 하루만에 풀려난 좌동엽 씨는 "한총련에 가입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탈퇴서를 쓸 이유도 없었다"며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다 풀려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보안수사대 형사들이 보여준 한총련 대의원 목록은 각 대학을 'NL' 'PD' '건진' 등으로 분류하고 있었고, 장신대는 '건진'으로 분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우리에게 '탈퇴'를 계속 요구했다"고 말했다.

좌동엽 씨와 임영복 씨는 경찰의 불법연행 및 불법구금 행위와 관련,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27일엔 명지대생들이 버스 안에서 강제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버스에 타고 있던 명지대생 6명을 끌어내고 그 가운데 이태희(경상

대 학생회장) 씨등 3명을 서부경찰서로 연행했다. 명지대 총학생회는 "연행과정에서 영장제시도 없었으며, 팔을 꺾고 구타하고 수갑을 채우는 등 경찰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서부경찰서를 함의방문한 명지대생 25명을 모두 연행한 뒤, 일부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이밖에 27일 동아대 부총학생회장, 28일 성신여대 사회대 학생회장, 한남대 사범대 학생회장, 경신대 총여학생

회장 등도 잇따라 연행되는 등 한총련 불탈퇴를 이유로 대학생 검거선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오늘 노동절 109주년

민주노총, 서울역 앞 집회

세계노동절 109주년을 맞는 오늘, 민주노총은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갖는다.

전국에서 약 5만명의 노동자가 참여할 오늘 대회에서 민주노총은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중단 △노동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구축 △임금단협 안정 및 산별교섭 보장 등 4대 요구사항의 수용을 거듭 촉구하며 대정부 총력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다.

운동권 기사·사회단체 기고문도 삭제

효성카톨릭대 대학신문 '잃어버린 표현의 자유'

대구 효성카톨릭대 대학신문 <대학정론>이 한 달 가까이 발행중단 사태를 겪고 있다. 원인은 신문사 주간교수의 전횡과 취재 및 편집권 침해.

신문사 주간교수인 소병우(신하부, 신부) 교수는 기자들에게 △한총련 관련 기사 △학교운영에 비판적인 기사 △사회운동권 관련 기사 및 사회운동단체 기고문 등을 신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사의 한 기자는 "소 교수가 '한총련은 유물론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학교 이념에 위배된다'며 관련 기사를 신지 못하게 하고, '민주노총 등 사회운동단체의 활동은 불법' '양심수는 간첩'이라는 이유 등으로 기사를 신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또 "국민연금 문제와 관련해, 시민단체의 기고문을 연속 게재할 계획이었는데, '기고자가 운동권 성향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역시 중단됐다"고 밝혔다. 특히 발행중단 사태의 발단이 됐던 것은 학부제 및 복수전공제 도입에 관한 비판기사였으며, 이에 대해 소 교수는 '학교발전에 저해된다' '윗분들에게 사랑받는 신문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대며 기사 삭제와 수정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 교수는 "해명할 생각이 없다"고 전제하며 "신문기사가 학교의 건학이념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수정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집시법 개악안 철회 촉구 집회

때: 5월 3일(월) 오전 10시

곳: 여의도 국회앞 국민은행

(옛 장기신용은행)

참석: 시민·사회·종교단체

<제네바소식> ⑧(끝) 유엔인권위 폐막 경제적 권리 등 82개 결의안 채택

제55차 유엔 인권위원회가 30일 82개의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6주간의 긴 일정에 막을 내렸다. 정부 대표들로 이뤄진 인권위원회의 속성상 자국의 이해관계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한계는 이번 회기에서도 확인되었다. 특히 회의 기간 내내 폭격과 난민의 행렬이 계속된 유고 사태를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인권위원회의 모습은 민간 인권단체들의 회의적인 시각을 더욱 부추기는 이유가 됐다.

①...이목을 집중시켰던 것 중 하나는 중국에 대한 결의안 제출이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불처리 동의안(no action motion)이 다수 투표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찬성 22, 반대 17, 기권 14. 이같은 결과는 결의안을 제출한 미국에 대한 반발감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중국 정부를 상대로 기본적 자유 보장을 요구하며 20여 일째 계속되는 티베트인들의 단식농성은 이같은 투표 결과를 반길 수 없게 만들었다.

②...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침해한 이들에 대한 불처벌의 문제는 또 하나의 논쟁거리를 제공했다. 이 결의안은 독일, 미국 등이 법적 개념화의 어려움을 들어 반대의 입장을 밝힘에 따라 논쟁 끝에 투표를 거쳐 통과됐다. 이는 '불처벌'에 대한 개념의 확장과 더불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지구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의안도 통과됐다. 이 결의안은 "지구화는 단지 경제활동만이 아니라 사회·정치·환경·문화 그리고 법적 변화를 동반한다"며 지구화의 혜택을 증진시키면서 그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자간 기구의 강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덧붙여 결의안은 인권소위에 '지구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보고서

를 다음 회기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내년 제56차 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신장과 보호'라는 의제 아래 이 문제가 정식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미국, 사사건건 반대표

③...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결의안 또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독일이 제출한 이 결의안은 시민·정치적 권리 조약과 아동권 조약에 따라 임신한 여성과 청소년은 절대 사형선고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여전히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장기적으로 사형제도의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이는 국제 엠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이 요구하는 바와 일치하는 것으로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도 사형선고를 내리는 미국을 겨냥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은 결의안을 투표에 부칠 것을 요청하며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결국 이 결의안은 찬성 27, 반대 13, 기권 13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투표가 끝난 후,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은 공동 발언문을 통해 "사형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여론이 아직 국제사회에 무르익지 않았고 사형제도의 시행 여부는 각 국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반발했다. 한국 정부는 반대표를 던졌다.

④...인권위원회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관련해 8개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결의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외채 탕감 △인권과 경제봉쇄정책 △유해 물질의 불법적 운반과 폐기 △구조조정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될 때는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해 인권에 대한 이중적 시각을 보였다. 이들 반대 주장의 핵심적 근거는 ①인권위원회는 이같은 문제를 다룰 적절한 공간이 아니다 ②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것은 국가 내부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다 ③인권 향유의 주체는 개인인데 이들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권을 침해당하는 개인을 정의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이들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개의 결의안 모두는 투표를 거쳐 통과됐다. 하지만 세계경제질서를 좌우하는 강대국 대부분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실제 결의안들이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제네바: 이주영)

만화사랑방

이동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5월 4일(화)

제 13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파업노동자에 '전향' 강제 지하철공사 '소명서' 요구...조합원 '자괴감'

파업철회 후 현장에 복귀한 서울지하철 노조 조합원에 대해 지하철공사측이 반인간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 지하철공사측은 양심수에 대한 '사상전향서' '준법서약서'를 방불케 하는 '직권면직 소명서'를 파업참가 조합원에게 요구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심한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지하철공사측은 소명 기회를 준다는 명분 아래 직권면직 대상자 4천여 명에게 '직권면직 소명서'를 제출케 하고 있으며, "본인의 의사가 아닌 타인의 강압에 따라 불가피하게 복귀하지 못한 점 등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작태는 '양심'에 따라 파업에 참가했던 다수 조합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부인하게 만들고, 나아가 자발적 의지로 참여한 파업조치 지도부의 폭력적 강제에 의한 참여로 매도하게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양심'과 '신념'을 파괴시키고 있다.

특히 공사측은 소명서를 개별적으로 우편송부하게 함으로 조합원들 사이에 강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동료가 소명서를 제출했는지, 자신만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혹시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은 없는지" 등에 대한 강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파업에 참가했던 한 조합원은 "간부들이 파업참가 조합원들을 자극해 충동을 유발시키고, 마찰이 발생하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를 해 잡아가지도 록 하고 있다"며 "일단 경찰서로 불려 간 조합원들이 무혐의로 풀려나도 그것을 빌미로 징계를 받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까지 직위해제를 당한 조합원이 144명, 직권면직 43명, 고소고발 256명, 체포 영장발부자 66명, 구속 9명에 달하는 등 지하철공사와 정부는 이번 파업을 계기로 '노조를 깨뜨리겠다'는 심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정형근 '반격'?

<말>지 '명예훼손' 고소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월간<말>지와 방양균(전 서경원 의원 비서관)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3

집시법 개악안 슬쩍 통과 사회단체 '개악안 철회' 시위

집시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본지 4월 29일자). 당초 5월 3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던 집시법 개정안은 27일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절차를 밟았다.

그런데, '집회시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는 내용의 이번 개정안이 국민들에게 홍보되지 않은 것은 물론, 국회에서도 무관심 속에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당 당직자를 포함해, 국회 행사에 소속 일부 의원측은 집시법이 본회의 상정된 사실조차 몰랐으며, 이같은 상황에서 집시법 개정안은 27일 밤 10시경 "이의없습니까?"라는 박준규 의장의 말 한 마디에 이어

일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정형근 씨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98년 3월호 <말>지에 실린 "빨갱이 김대중 만들기 위해 정형근은 나를 이렇게 고문했다"는 방양균 씨 증언 기사. 당시 방 씨는 "정형근은 재빨리 머리를 감기면서, '김대중 빨갱이 새끼는 이미 고정간첩으로 구속돼서 다 붙었어. 김대중이 지만 살려 달라고 애원하더라. 김대중이 느그 대장(서 전 의원)한테 편지 전한 거 알아. 몰라'. 내가 모른다고 하면 다시 주먹이 날아와요"라는 내용으로 인터뷰했다.

정 씨의 고소에 대해 <말>지측은 "정의원은 당시 확인취재를 위한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며 "당시엔 언론중재신청이나 다른 법적인 수단을 쓰지 않다가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기사를 문제삼는 것은 최근 유엔인권위에 참석했다가 망신당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너무도 손쉽게 가결된 것이다.

한편 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집시법 개악안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가졌던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경찰에 강제 연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집회가 끝난 뒤, 대학생 10여명이 기습적으로 국회를 향해 진출하려 전원 경찰서로 연행됐으며, 버스를 타고 돌아가려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고근에(27) 씨등 3명도 경찰에 몰린 대학생들과 버스정류장에서 뒤섞인 채 함께 영등포경찰서로 연행됐다. 연행과정에서 전투경찰들은 활동가의 양손을 잡고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엉덩이를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들을 다섯 시간 동안 강제구금했다. 경찰은 부당한 연행에 항의하는 인권활동가들에게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시간을 끌다가 오후 4시경 참고인 진술서를 받은 뒤 오후 5시경 돌려보냈다.

“인권교육, 인권실현의 첫걸음”

민변 등 주최, 인권교육 토론회 열려

“인권에 대해서 아는 것은 모든 국민의 존엄성과 자유가 존중되고 실현되는 인간적·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첫걸음이다.”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의 기초발제에 나선 토 슈인 교수(캐나다 알버타 대학)의 주장이다.

지난 4월 30일, 민변과 한신대 민중교육연구소 주최로 열린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토 교수는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대응원칙과 준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토 교수는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정치적 민주화추진 속에서 인권에 대한 논의와 인권활동의 공간, 인권교육을 위한 토대가 확장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태지역이 △부의 양극화 △아동·여성차별 △서구로부터의 문화적 생존 △개발에 따른 생태위기 △군국주의 △보편주의와 문화적 상대주의에 관한 논쟁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인권교육이 이러한 도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원칙과 이슈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 교수의 발제에 이은 2부 토론회에서는 현재 아태지역에서 진행중인 ‘국가적 장치에 의한 인권교육’ 즉, 인권교육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재정비에 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 토론회에서 교육부 최수태 교육정책기획과장은 “인권법 제정으로 교육부가 인권교육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인권교육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 인권교육실장은 “인권교육은 우리나라가 오래 전에 가입한 국제조약에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다”며 “벌써 해야 할 인권교육을 이제서야 계획하는 것은 늦어도 한참 뒤쳐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국가차원의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보할 수 있도록 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정부에서 진행중인 인권법은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나정훈(피씨통신 학생복지회) 군은 “인권교육은 도덕 시간처럼 선생님이 설명하고 아이들은 즐기고 있는 교육이 되거나 시험을 준비하는 교육이 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80여 명의 교사, 인권활동가, 학생들이 참가해, 최근의 국가인권기구 설치 움직임과 함께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광주민중항쟁 19주년 기념 특별상영회
<칠레전투> <칠레, 지울 수 없는 기억>

- ◆ 일시 : 5월 8일(토) 15일(토) 오후 3시부터
- ◆ 장소 : 연세대 장기원기념관(5월 8일) 서울의대 학생회관 제1강의실(5월 15일)
- ◆ 상영시간 : 오후 3시-9시30분(전 4편)
- ◆ 입장료 : 5천원(전편)/문의 : 김정아(741-5363)

주간인권호름

(99년 4월 26일-5월 2일)

1. '왕따'에 쫓긴 파업권
서울지하철 노조, 언론의 못매와 정부의 강경대응 속에 8일만에 파업중단 선언(4/26)

2. 프아악, 진짜 '반인권' 대통령이네!
집시법 개악안 국회 통과... '사생활 침해' 등 이유로 집회 금지·제한 가능(4/27)

3. 다시 부는 '북한동포 지원' 바람
우리민중서로돕기운동 등 14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 '북한의 농업·식량·의료 지원을 위한 공동모금운동' 벌이기로(공동모금운동 사무처 02-734-7070)/전세계 60여개 민간기구들도 다음달 3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인도주의 대북지원 국제 민간단체 대회' 열기로

4. 정부 속셈, '노조 씨발리기'
서울지하철 근무현장에 경찰, 군인 1천7백여명 상주해 감압 분위기 조성, 파업참가자 직위해제 144명, 직권면직 43명, 고소고발 256명(4/27-30)

5. '면담요구, 제소자 권리'
서울지법 민사9단독(윤준 판사), 교도관이 제소자의 소장 면담요구를 묵살한 사건에 대해 "국가가 3백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4/28)

6. '인권법 투쟁', 범사회적으로
종교·언론·교육·환경·빈민·청년·노동·여성·장애인 등 각계 70여개 사회단체,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4/29)

7. '경찰'로 안되니까 이젠 '전경'으로
경찰, 흥익대 앞 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대신 '전투경찰대설치법'을 근거법률로 제시(4/29)

8. 국가정보원, 이젠 여성차별까지?
국가정보원, 간호사 채용공고에서 응시자격을 '키 154센티 이상의 미혼 여성'으로 제한(4/28)

9. 잇줄만 했더니, 또...수용시설 인권유린
부산 남구 구세군여성복지관 원생 15명 비인간적 처우에 불만 품고 탈출/충남 연기군 사회복지시설 은해기도원에서 원생 17명 집단탈출(5/1)

10. 부패방지, '내부고발자 보호'로부터
참여연대, 서울시 공무원 588명과 시민 514명 상대로 설문조사, 공무원의 68.1%와 시민 90.1%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찬성(4/30)

◆ 수지로 본 인권 ◆

<김철은 못 믿어...헌법소원 청구 급증>
김철은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건수가 지난 3월말까지 월평균 42건으로 지난해 평균치인 26건에 비해 1.6배 가량 증가(5/2 헌법재판소 발표)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5월 5일(수)

제 136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나?

기독교방송, 쟁의지도부 '불법 해고'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조건 '불법' 행위로 몰고 가는 사용자측의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을 정부와 지하철공사측이 '불법'으로 낙인찍고 언론마저 이에 가세해 파업을 좌초시킨 데 이어, 한달째 파업사태를 겪고 있는 기독교방송사측도 노조의 파업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쟁의 지도부 전원 해고라는 초유의 강경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용자측의 '불법' 주장은 파업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라는 것이 이번 기독교방송 사태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기독교방송은 지난 3일 이열법 노조 위원장(광주 엔지니어), 박호진 노조 사무국장(서울 기자) 등 쟁의 지도부 21명 전원에게 해고 통보했다. 해고의 근거는 노조의 파업이 '권호경 사장 퇴진 및 재단 혁신'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경영권을 침해해 불법이라는 것.

그러나 기독교방송측은 최근 몇 년간의 경영난으로 총 35억(조합원 1인당 1천9백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임단협 협상에서 '상여금 전액 반납 및 수당 50% 반납'을 고집했다. 이에 노조측은 "계속되는 경영난의 부담이 조합원

들에게만 전가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경영정상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권호경 사장의 퇴진과 재단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노조측의 설명이다. 더욱이 기독교방송 노조의 파업은 2월 임단협 협상이 결렬된 이후, 노동위원회의 중재, 냉각기간 등을 모두 거친 뒤 시작된 것으로 절차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기독교방송사측은 또 파업 지도부가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는 것을 해고사유 가운데 하나로 들고 있지만, 노조관계자는 "출근저지는 파업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마찰"이라며 "회사측이 억지로 트집을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독교방송 노조는 쟁의지도부에 대해 대량해고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투쟁의 의지를 더욱 다지고 있으며,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파업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5월 6일자는 휴일 관계로 쉽니다.

국정원, 첨단 인터넷에 구태의연 발상

홈페이지, '좌익사범 식별요령' 광고

옛 안기부에서 이름을 바꾼 국가정보원이 여전히 국민들에게 '획일화되고 반인권적인' 의식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일반인들에게도 개방된 국가정보원의 홈페이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 △북한의 통일노선을 찬양하는 사람 △공산주의 사상화습을 주동하는 사람 △노학연대를 주장하는 사람 △계급의식을 고취하는 사람 등을 이른바 '좌익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이들에 대한 신고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의 이같은 선전은 사상표현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아말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다.

<좌익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민중혁명을 선동하거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사람
- 북한의 통일노선, 주체사상을 찬양, 선전하는 사람
- 공산주의 사상화습 등 불순모임을 주동하거나 폭력투쟁 선동 등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사람
- 불온유인물을 제작, 소지, 배포하거나 화염병, 폭발물을 제조, 소지한 사람
- 노학연대를 주장하며 폭력 노사분규를 조장하는 사람
- 계급의식을 고취하며 민중,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사람

-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

광주항쟁 19주년 기념 특별상영회
<칠레전투> <칠레, 지울 수 없는 기억>
 때 : 5월 8일, 15일 오후 3시부터
 곳 : 연세대 장기원기념관(5월 8일) 서울의대 학생회관(5월 15일)

학생운동 중단 협박, 이성 잃은 대학사회

한총련 활동 제적생 "집단폭행 당했다" 주장

비운동권 계열의 총학생회 간부들이 운동권 학생들을 강제 금금한 상태에서 학생운동 중단을 강요하며 이에 대한 각서를 제출받는가 하면, 학교측에서도 이를 방조, 묵인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한총련 활동과 관련해 제적당한 한 학생은 총학생회 간부들에게 집단구타까지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대학사회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대학의 존재가치마저 의심케 하는 일이다.

광주 송원대학 총학생회 간부들은 지난 4월 21일 이 학교 제적생 서보라(경영 96) 씨와 재학생 10여 명을 총학생회 사무실로 끌고 가 "앞으로는 서로 만나지 않겠다"는 요지의 각서를 제출받았으며, 이들로부터 디스켓과 유인물 등을 압수해 학생처에 맡겼다. 총학생회의 한 간부는 "서보라 씨가 한총련 출범식에 참석했던 운동권 학생인데다 유인물을 통해 '김대중 독재 정권 물러가라'는 등의 불온한 내용을 후배들에게 유포시켰기 때문에 '학교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다"고 밝혔다. 이 학생은 또 "학내에서 유인물을 나눠주려면 총학생회의 도장을 받아야 한다"며 "학생회의 허락없이 유인물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학교 학생처장도 "운동권 학생들이 1학년을 규합해 농활을 가려한다는 소식과 후배들에게 교육을 한 사실이 총학생회에 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생회측이 수거한 유인물을 학생처로 가져왔다"고 말했다.

한편, 서보라 씨는 당시 총학생회 사무실로 끌려가는 과정과 금금된 상태에서 학생회 간부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 씨에 따르면, 학생회 간부들은 돌아가면서 서 씨와 후배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정강이와 복부를 걷어치는 등 집단폭행을 가했으며, 불들려온 학생들의 소지품을 강제로 검사하고 피해 학생들의 전신과

얼굴을 비디오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4월 26일 등교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총학생회의 집단폭행 사건을 알리던 재학생들이 다시 총학생회 간부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서 씨는 주장했다.

서보라 씨는 이어 "피해가 계속되면 서 재학생들이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을 입어 서로 연락도 주고받기도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반면, 학생회측과 학생처는 "유인물을 뺏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을 뿐, 집단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주 송원대학은 서보라 씨가 96년 연세대에서 열린 범청학련 집회에 참여했다 구속되자 제적시켰으며, 학내에서 일체 한총련 관련 활동을 못하게

하고 있다. 학교측은 또 한총련 관련 활동을 막기 위해 각과 교수들로 하여금 학생지도활동을 벌이도록 하고 있다. 총학생회측도 "운동권 세력이 학교에 발을 붙이는 것을 묵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보라 씨는 자신을 폭행한 학생회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전북 국보법 연대회의 결성

전북 15개 사회단체 참여

4일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시민운동연합 등 전북지역의 15개 사회단체들은 전주 가톨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 해결을 위한 전북 연대회의(연대회의)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전북지역 '1999인 선언'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구청 총무과도 정보 수집처?

사회단체에 전화 걸어 '동향 파악'

지난 3일 전주시에 소재한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을 전주시 완산구청 총무과 소속 이 주임이라고 소개한 전화 속의 남자는 "4일 열리는 국보법철폐연대회의에 누가 모이나?" "몇 명이 오는가?" 등 수사기관원 같은 이상한 질문을 집요하게 던졌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문만식 씨는 완산구청 이근용 총무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왜? 구청에서 이런 사항을 알고 하느냐"고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이근용 총무과장은 "아마도 전화를 걸었던 사람은 이석재 주임일 것"이라며 "이석재 주임이 동양파약 담당자"라고 답했다. 이 총무부장은 또 "관할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파악해 타 기관과 협의하기도 하고 시청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잠시 후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사무실에는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처음 전화를 걸었던 이석재 주임이었다.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과를 표시했다.

그러나 이튿날 이석재 주임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어울하다. 시민들의 불편에 관한 여론파악만 하고 있고 사회단체에 대한 정보수집은 하지 않는다"며 동향파악 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자신은 "사과 전화를 비롯해 일체 전화도 걸지 않았고 완산구청에 자주 출입하는 전주경찰서 정보과 소속 형사가 정보를 얻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서도 그는 끝내 자신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정보과 형사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경찰 등 정보기관도 모자라 일선 구청까지 사회단체 동향파악에 나선다는 사실이 씁쓸함을 더해준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choll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5월 7일(금)

제 136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양심수 최호경을 석방하라

준법서약 불구 미석방... '석방추진위' 출범

6일 저녁 6시 30분, 서울 명동 전진상 교육관에서 뜻깊은 모임 하나가 출범했다. 92년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민족해방에국전선)에 연루돼 구속된 후, 7년째 감옥에 갇혀 있는 최호경(43·전주교도소) 씨의 석방을 위한 모임이다.

노동자 출신의 양심수로 남한조선노동당사건 연루자 가운데 조덕원 씨와 함께 단 둘만 감옥에 갇혀 있는 최호경 씨는 지난 2월 25일 특별사면 때 준법서약서를 제출했지만 석방되지 못했다(무기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 지난해 8월 준법서약서가 처음 도입될 당시 준법서약 제출을 거부했던 최호경 씨가 이번에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것은 하나뿐인 아들 민혁(14)의 간절 한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 그

리나, 정부는 강용주, 조상록 씨등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양심수를 석방하고도 최 씨만은 고집스럽게 감옥에 남겨두었던 것이다. '최호경 석방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를 맡은 이해학 목사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면 석방한다고 했던 국가가 결국 사기를 친 것"이라고 이를 비난했다.

최호경 씨와 함께 구속돼 3년간의 옥고를 치렀던 최진섭(전 말지 기자) 씨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도 석방되지 못한 것은 법 앞의 평등에 어긋나며 △최호경 씨의 행동은 사상·양심·신앙의 자유에 따른 것이었고 △그와 가족들이 겪은 고통은 7년의 세월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제 최호경 씨는 석방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사건의 핵심인

물인 김낙중(전 민중당 공동대표), 황인오 씨는 이미 석방된 상태다.

가족의 고통, 이제 그만

이날 석방추진위 출범식에는 누구보다도 몸고생 마음고생을 겪어온 최 씨의 아내 황선희 씨가 참석, 7년간의 아픔을 털어놓았다.

"날씨가 좋을 때도 날씨가 나쁠 때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해마다 사면 때가 되면 뉴스를 보지 않으려고 애썼고, 아들하고도 서로 눈치만 보며 하루가 빨리 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황 씨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문득 남편이 어떤 말을 하게될지 상상하게 된다"는 황 씨는 "다음 사면 때 남편을 꼭 만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봉제공장 미싱 일로 근근이 아들과의 생계를 꾸려온 황 씨는 요즘 일감마저 떨어져 더욱 곤궁한 형편에 처해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줄곧 노동운동에 투신해왔고, 90년대 들어 통일운동에 앞장섰던 최호경 씨는 98년 8월 한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유롭고 싶은가? 그렇다면 너는 조국의 자유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자신을 향해 묻고 있다고 밝혔다. 신광수·손성모 씨(이상 남파사건)를 제외하고 최정기 양심수에 해당하는 최호경 씨. 그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각계의 도움이 절실하다.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이란?

9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이라는 대규모 조직사건이 발표된다. 그해 8월 김낙중 씨의 구속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건으로 모두 65명이 구속(95-6년 추가구속 31명)됐다. 안기부는 그해 10월 6일 "북한이 남한 내에 공작지도부를 구축하고 남로당 이후 최대 규모의 간첩조직을 결성한 사건"이라고 발표했으며, 이 사건에 북한의 고위급 인물인 이선실이 개입되었다고 발표해 국민의 비상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재판도 하기 전부터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된 이 사건은 결국 대통령선거를 두달 앞둔 시점에서 김대중 후보에게 커다란 타격을 입힌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안기부가 처음 발표했던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 아니라 '민족해방에국전선'이라는 명칭의 조직이었음이 밝혀졌고, △북한에서 지파했다는 10여명의 간첩이 단 한 명도 잡히지 않은 점 △법원에서 이선실이 북한의 고위급 인물과 동일인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점 △4백여 명의 간첩조직이라면 구속자가 65명에 불과했고, 구속자 중 34%에 달하는 22명이 1실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점 등을 통해, 안기부가 사건을 부풀리고 왜곡했다는 의혹은 더욱 불거져 왔다.

최호경 석방추진위원회

- ◆ 문의: 02-2265-7940(정인숙) 0342-733-1694(황선희)
- ◆ 후원계좌: 농협 169-02-607764 국민은행 824-21-0423-735 (이상 예금주: 황선희)
- ◆ 격려편지: 전주시 전주우체국 사서함 72호(수번 2150번) 최호경

공공의료 구조조정, 국민 건강권 위협

현행 의료인력, 법정 기준에도 못 미쳐

신자유주의 기초 아래 진행되었던 정부의 공공의료부분 구조조정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 가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과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주최한 '의료서비스와 병원인력문제'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주조를 이뤘다.

우선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최경숙 씨는 "입원환자의 경우 의료비를 다 내고도 병원이 환자간호를 가족에게 떠넘겨 '보호자 간호행위'가 일반화 되어 있으며, 주사액을 갈아주거나 소변량을 재는 등의 굵은 일을 가족들이 도맡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환자와 가족 모두 병상에서 낙초가 되는 것이 당연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인력 감축 일변도의 정책을 내놓아 가족이나 부족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의료사고의 위험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임상간호사회(회장 박혜자)가 발표한 '98년도 전국병원 간호사 배치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기준은 입원환자 5인당 간호사 2명을 두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간호사 1명 당 10명의 환자를 간호해야 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4월 20일 "경영실적에 따라 대학병원장의 책임을 묻는 책임경영제와 총정원제를 도입해 병원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국립대병원 경영혁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정부가 공공의료부분 구조조정의 이유로 들고 있는 국립병원의 적자문제와 관련, 보건의료노조 병원경영담당 전문위원 전동환 씨는 "IMF 한파 속에도 98년 한해 서울대병원과 전남

대병원이 1백억 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하는 등, 국립대병원 가운데 7개 대학병원이 총 3백26억7천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는데도 교육부는 전남대병원을 제외한 모든 국립대병원이 적자였다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의 공공의료부분 구조조정 정책을 꾸준히 비판해온 '공공의료연대회의 준비위원회'도 "강화되어야 할 공공의료부분이 오히려 시장논리에 밀려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실사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과 끝없는 출혈경쟁에서 살아남는다 해도 사고 파는 의료행위는 결국 돈 없는 민중의 건강을 후퇴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형근 사퇴" 여론 확산

부산 사회단체 기자회견

정형근(한나라당, 부산 북구·감서갑)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전국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오전 10시, 부산에서는 서

울·부산·광주지역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고문조작 사건 진상규명과 고문국회의원 정형근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 의원을 둘러싼 고문조작 의혹은 최근 '정 의원을 심판하는 시민모임'이 결성된 이후 불거져, 지난달 정 의원의 유엔인권위원회 참석에 따른 국내의 비난여론 등으로 확산되어 왔다. 이처럼 비난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정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에서도 그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았다.

부산과 서울, 광주의 30여개 인권·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과거 안기부 재직시 은갖 고문과 정치공작으로 정 권유지에 공헌하게 급급했던 반인륜적, 반역사적 존재가 사죄도 없이 국회로 진출했다"며 "정 의원을 심판하고 고문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40여명의 참석자들은 오후 2시, 정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부산 북구 덕천로타리에서 갖고 정 의원의 부산 지구당사 앞으로 몰려가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지역주민들도 점점 관심을 갖고 정 의원의 고문행각을 설문을 하면 동조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정 의원의 고문조작 행각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내 결국 의원직을 사퇴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만화사랑방

이동수



전세계 학살자 처벌을 촉구하는 '광주민중항쟁 19주년 기념 특별상영'

<칠레전투> <칠레, 지을 수 없는 기억>

1973년 9월 11일 칠레.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는 육해공군을 동원해 라 모네다 대통령궁을 초토화시킨다. 피노체트의 공격 대상은 세계 역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해 사회주의 국가를 이룩한 살바도르 아옌데의 민중연합정부. 아옌데 대통령은 피노체트의 망명 제안도 거부하고 민중연합정부의 최후를 위해 무장했지만 칠레의 '평등한 세상'을 완성시키고 못한 채 끝내 죽음을 맞는다.

이후 피노체트의 폭압적 군정 17년이 시작된다. 피노체트는 아옌데 정권말기 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된 지 19일 만에 쿠데타를 일으킨 것. 그는 1976년부터 1983년까지 '콘도르 작전'이란 이름으로 좌익소탕작전을 실시했다.

3,197명이 정치적 이유로 살해되고 1,102명이 실종되었으며, 고문받거나 10만명, 국외추방자 100만명이라는 사실은 그의 통치가 바로 살육이었음을 보여준다. 피노체트는 1998년 말까지 군총사령관직을 맡아 독재의 영속을 기도하기도 했다.

<칠레전투>는 아옌데의 민중연합정부가 피노체트 쿠데타에 의해 전복되기 전 아옌데 동안 촬영된, 흔들리는 칠레의 모든 기억을 담아놓은 역사적인 다큐멘터리다. 1970년 말 대통령에 당선된 아옌데는 의회민주주의를 기반해 칠레에 사회주의 개혁을 추진한다. 농지개혁을 단행하고 칠레의 젓줄인 구리광산, 은행 등 국가기간산업을 국유화시킨다. 이에 대한 기독교총과 미국의 역공으로 칠레는 기독교총과 민중, 좌파와 우파의 치열한 공방전으로 빠져든다.

어떤 제작 경험도 없던 감독 파트리시오 구즈만과 그의 동료 5명은 16미리 카메라 한 대와 구식 녹음기, 코닥 필름 42,000피트와 자연조명으로 무장하고 혁명과 반혁명의 치열한 공방전을 누비며 날 것 그대로의 칠레 역사를 채록했다. 카메라는 역사의 현장을 냉정한 시선으로 분석하려는 듯 '통테이크' 기법으로 화면을 채우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민중연합정부에 대한 가없는 애정을 드러내는 가장 설득력있는 표현이 되고 만다.

촬영된 필름은 민중연합정부가 막을 내린 뒤 6개월의 밀반출 끝에 쿠바로 옮겨진다. 그곳에서 3년 동안 편집되어 칸느 영화제를 통해 <칠레전투>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구즈만과 그의 동료들은 아옌데와 함께 일한 셈이었고, 그의 개혁을 카메라에 담았고, 그의 최후를 기록했으며 그의 죽음과 함께 칠레를 떠났다. 이후 카메라맨 호르헤 플라 실바는 실종되었고 구즈만은 망명객으로 국외를 떠돈다.

민정이 실시된 1998년 구즈만은 처음으로 칠레에서 <칠레전투>를 상영하게 된다. 20여년 동안 35개국을 돌아다니며 귀환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칠레, 지을 수 없는 기억>으로 되살아난다. <칠레전투>의 에필로그 씬인 이 영화는 민중연합정부에 대한 정치적 기억을 되살리는 동시에 쿠데타를 경험하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지을 수 없는 '역사 체험'이 되었다.

제1부 부르주아지 붕괴
1973년 3월 총선에서 아옌데의 민중연합은 우파 야당을 누르고 압도적으로 승리한다. 승리를 장담했던 우파 기독교총은 총선후 아옌데 정권을

더욱 노골적으로 공격한다. 민중연합정권의 3월 총선과정과 의회의 보이콧 전개, 학생소요, 구리광산 파업, 6월 쿠데타의 서장을 다루고 있다.

제2부 쿠데타
6월 쿠데타부터 11월 라 모네다 대통령궁의 폭격까지를 담았다. 아옌데를 살해하고 TV방송을 통해 자신의 집권을 알리는 피노체트의 발표와 연결된 아옌데의 마지막 라디오 메시지는 정의로운 역사의 부활을 알리는 간절한 염원.

제3부 민중의 힘
3부는 아옌데 정권 말기 노동자들을 중심으로한 자생적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리포트이다. 민중들은 이러한 개혁을 발판으로 삼아 자생적 사회주의를 실험한다. 그러나 정치불안과 더불어 기독교총과 미국의 반혁명 공세가 혁명을 강하게 좌어움에 따라 칠레 민중들의 자생적 사회주의 실험은 마지막 참호의 외로운 싸움이 되어 간다.

◆ 비디오 배급 ◆
<칠레전투> 1.3부
<칠레 : 지을 수 없는 기억>
가격 : 각 30,000원

<칠레전투> 관람 안내

- 일시 : 5월 8일(토), 15일(토)
- 장소 : 연세대 장기원기념관(5/8)/서울의대(대학로) 학생회관(5/15)
- 상영시간 : 오후 3시 : <칠레전투 제1부> 96분
오후 4시 50분 : <칠레전투 제2부> 88분
오후 6시 50분 : <칠레전투 제3부> 78분
오후 8시 20분 : <칠레 : 지을 수 없는 기억> 58분
- 입장료 : 오천원(전편)
- 주최 : 인권운동사랑방(741-5363/741-2407)
- 주관 : 연세대 교육동아리 열음·목하/서울의대간호대 인권동아리
- 후원 : 연세대 총학생회·서울의대 학생회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a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5월 8일(토)

제 136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철저히 짓밟히는 지하철 노동자

파업중단 후 조합원 인권유린 계속돼

7일 서울 지하철 노조가 재파업을 결의했다. 지난달 26일 파업중단을 선언하고 현업에 복귀했던 지하철 노조가 다시 파업을 결의한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 "선박귀 후협상"을 내세우며 현장복귀를 종용해왔던 서울시와 지하철공사측이 파업중단 후에도 일체의 교섭을 거부한 채 '노조 깨뜨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파업 중단 후 현업에 복귀한 지하철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마구잡이 징계와 고소고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행중인 기관사 '업무방해' 고발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에 위치한 승무지부 상계지회 소속 노조간부 15명은 지난 4월 27일 무더기로 고발을 당했다. 이유는 두 가지. 27일 고건 시장이 당고개역을 방문했을 때, 30분간 집회를 열어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하나며, 또 하나는 파업불참자(이른바 '반조직자')들에 대해 폭행과 폭언을 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 시장 방문 당시 열린 집회는 일상적인 조합활동의 하나였으며, 전투경찰이 집회장소와 고 시장의 업무보고 장소 사이를 겹겹이 차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 적용은 억지에 불과한 것이었다. 특히 고발된 조합 간부 가운데 정양선, 김정규, 오인희 씨 등은 집회 당시 지하철 운행중이었으며, 이강희 씨는 집에서 쉬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됐던 박 아무개 씨는 "파업 불참자의 목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고발됐는데, 성작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도 승무소장이 직접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징계 기준, '찍힌 놈'

무차별적인 고발 외에 조합원에 대한 징계 역시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다. 승무지부 성수지회의 경우, '무단결근 7일'을 이유로 직권면직 대상에 오른 1백15명의 조합원 가운데 대의원 2명과 부서장 1명이 직권면직을 당했다. 그러나, 이들만 직권면직을 당한

이유는 뚜렷하지 않다. 또 상계지회의 경우, 무단결근 7일의 기간 사이에 비번 또는 휴무가 끼어있던 평조합원들은 직권면직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조합 간부들에겐 휴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게다가 징계를 당한 조합원들은 징계위 소집 등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징계 결정만을 통보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철공사측의 고발 및 징계조치는 조합간부들을 제거·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지하철공사측이 직권면직 대상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소명서'도 조합원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기관사는 '소명서를 제출한 뒤, '살기 위해 변명을 했다'는 생각에 피해의식과 패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포승·수갑 찬 채 조사받아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들은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월 28일 노원경찰서에 자진출두했던 조합원들은 밤샘조사를 받았다. 또 30일 은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기관사와 28일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기관사는 포승과 수갑을 찬 채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른바 '왕따 신고'에 의해 고발된 한 기관사(대의원)는 "명동성당 농성에서 이탈한 조합원에게 내 이름을 밝히고 '외출과 외박이 자연스러운 데 왜 동참하지 않냐'는 전화를 걸었던 사실은 있지만, 협박은 하지 않았다"며 '왕따 가해자'란 이유로 행사들에게 폭언과 인간적 모욕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 기관사는 연행된 지 이틀만에 석방됐다.

한편, 지하철 노조는 인권운동사랑방과 함께 파업참가 조합원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을 계속 조사중이며, 다음주 중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안관찰 처분' 법적 대응 계속돼

올 들어 두 번째 "보안관찰처분취소" 공동소송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6명의 양심수 출신 출소자들이 공동으로 보안관찰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5년에서 15년까지 복역하고 지난해 8월 15일 사면된 이후 올해 3월 2일 법무부로부터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바 있다.

7일 오전 10시, 정화려(구국전위 사건), 양홍관, 함정희(이상 민족해방에 국전선 사건), 유재선(방북), 박동운(고정간첩단 사건), 함주명(월남자 사건) 씨 등 보안관찰 처분자 6명은 법원 기자회견에서 보안관찰 처분의 부당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이들이 범죄 사실이 조작되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다는 점과 과거경력, 범죄 사실에 비춰 볼 때 재범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보안관찰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박동운(54) 씨는 "과거경력과 범죄사실만으로, 형을 다 살고 나온 사람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조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함주명(68) 씨도 "법무부는 준법서약서를 받아 놓고 출소를 시킨 다음에 또 다시 보안관찰 처분을 내려 감시하고 있다"며, "보안관찰은 창살없는 감옥이나 마찬가지로"라고 밝혔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한결 같이 시도 때도 없이 직장과 집으로 찾아오는 경찰 때문에 일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보안관찰은 국가보안법을 비롯 형법, 군형법 상의 반란죄 등으로 3년 이상의 금고나 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람을 대상으로,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이에 보안관찰 처분자는 개인적인 만남, 여행, 모임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보고해야 하며 2년으로 정해져 있는 보안관찰 기간은 법무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무제한으로 갱신이 가능하다.

한편, 올해 들어 대법원이 두 건의 보안관찰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는 등 사법부에서 법무부의 결정을 뒤집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으며, 지난 2월에도 김삼석, 이혜정 씨들이 보안관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노조사무실 출입문 용접·봉쇄 경기 성남 택시회사

경기도 성남의 택시회사 경남기업(사업주 김갑순)에서 직원을 동원해 노동조합 사무실 문을 용접, 봉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기업 측은 6일 오후 9시 경 노조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전무·상무·배차부장·정비사 등 5명의 직원을 동원해 노조 출입문 3개를 봉쇄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은 노조에 채용돼 풀무선 업무를 보던 변경옥(20세) 씨를 감금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노조 사무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한다고 공고하기도 했다. 민주택시연맹 소속인 경남기업 노동조합은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따라 김갑순 씨 등은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7일 새벽 4시경에 풀려났다. 그러나 경찰이 이 사건을 가볍게 처리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연맹 강승규 위원장은 "경남기업은 전국 1,800여개 택시업체 중 최초로 월급제를 쟁취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며 "지난 2월부터 월급제 시행을 무산시키려는 사업주의 탄압 속에서도 월급제와 노조 사수를 위해 노력하는 모범사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7일 오후 2시 한양대학교에서 집회를 갖고, 택시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악덕 기업주들과 맞서 싸울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총력투쟁 거듭 천명 8일-12일 잇따라 집회 계획

민주노총이 정부측에 노동환경 탄압 중단과 교섭을 재촉하며,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계속 묵살할 경우 5월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거듭 천명했다.

7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갑용 위원장은 "책임있는 노·정 교섭을 일체 거부한 채, 오직 공권력에 의존해 초강경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이같은 반노동자적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8, 10, 11일 3일간 낮 12시 덕수궁에서 '지하철탄압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며, 12일 금속산업연맹 등의 상경투쟁, 14일 모든 연맹의 거리행진을 갖기로 했으며, 15일엔 농민·빈민·학생·교수·종교인 등 각계 민중들과 연대한 민중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행사의 동정

-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토론회
 - 5월 8일(토) 오후 2시 / 남산직접자사 강당 4층
 - 주최: 국제법학회
- <정책포럼> "국제 금융자본은 세계를 어떻게 지배하는가"
 - 5월 11일(화) 오후 6시 30분 -8시 30분 / 백주년기념관(종로5가 소재)
 - 발제: 카발릿 싱(인도) / 박승호(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 주최: 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문의: 김낙경 간사 / 02-763-9563)
- 키발릿 싱 초청 토론회
 - 5월 13일(목) 오후 6시 30분 / 참여연대 강당
 - 대상: 시민단체 실무자 및 시민 운동가(문의: 02-763-9563)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a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5월 11일(화)

제 136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막 나가는 '왕따 수사'

'왕따 행동수칙' 누명 씌워 구속

파업에 참가했던 지하철 노조원에 대해 이른바 '왕따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있지도 않은 '왕따 행동수칙'을 만들어가며 파업참가자들에게 '왕따 가해자'라는 누명까지 씌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서울 수사경찰서는 지하철공사 수사승무직회 소속 조합원 김춘식(수서지회장 직무대행) 씨등 2명이 '비노조원을 '왕따'시키는 행동수칙을 작성, 노조 사무실 부근에 부착하고 이를 노조원들에게 교육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행동수칙은 파업 전날인 지난달 18일부터 최근까지 부착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왕따 행동수칙'으로 △인사 안하기 △말 안하기 △근무 바꿔주지 않기 △시비걸기 △제러보기 △밥 같이 안먹기 등 13개 항목의 왕따 행동수칙이 있다고 공개했다.

그러나 경찰의 주장과 달리, 구속된 김춘식 직무대행 등은 왕따 행동수칙을 부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노조관계자 및 관리자측의 일관된 증언이다. 오히려 승무소장 등 관리자측에서 '왕따 예방'이라는 취지 아래 '왕따 사례' 10여 가지를 지난 4월 28일 게시물로 부착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석선 승무소장은 "파업전날인 18일부터 부착됐다는 행동수칙을 본 일이 없으며, 조합원들이 왕따 행동수칙을 교육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 승무소장은 또 "파업이 끝난 뒤 언론에서 왕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보고, 비참여 노조원 보호 차원에서 왕따 사례 10여가지를 게시판에 부착한 사실이 있지만, 김춘식 지회장이 철거를 요구해서 곧바로 뜯어

버렸다'고 밝혔다.

김춘식 씨등 구속된 조합원 2명은 지난달 30일 운행중인 3호선 전동차 기관사실에서 기관사 정 아무개 씨에게 '왜 특전사 오원에게 핸들을 맡기느냐'며 항의했다가 수서역에서 내리자마자 경찰에 연행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느닷없이 왕따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철도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신 승무소장은 "철도법상 '열차운행 방해' 죄가 있지만, 이번 일은 차를 세웠다거나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것도 아닌 일"이라며 "크게 업무방해된 것도 아닌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 승무소장은 또 "파업이 끝난 뒤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은 왕따라기 보다 사소한 갈등"이라며 언론의 과장 보도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증폭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체포 만능주의 물의

노조간부 영장없이 체포

경찰관이 영장 없이 노조간부를 체포한 뒤 2시간만에 풀어 쥐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 노조간부를 체포하면서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엄마의 팔을 비트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지난 9일 오후 9시 경 평택시 오성면 소재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조직정의실장 김선동(33세) 씨 자택에서 평택경찰서 수사2계장과 경찰관 1명이 영장 없이 김 씨를 체포했다가 2시간만에 풀어줬다. 이날 김 씨와 부인 방명숙

씨가 영장제시를 요구하며 완강하게 저항하자, 경찰은 집 근처의 오성파출소로 연락해 경찰관 2명의 지원을 받아 김 씨를 강제 연행했다. 경찰은 연행 과정에서 김 씨의 7,8살 난 두 아이가 보는 앞에서 20분간 실랑이를 벌였고 부인의 팔을 비틀고 김 씨의 팔을 뒤로하여 수갑을 채우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평택경찰서로 김 씨를 연행하던 중 김 씨가 영장발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김 씨를 다시 집에 내려주고 돌아갔다.

쌍용노동조합은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일련의 노동조합 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일선경찰서의 과잉충성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10일 평택경찰서를 항의방문했고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12일 평택역 가두집회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KNCC, "박상천 퇴진" 요구

정부 인권법안 반대 입장 표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KNCC, 위원장 이재정 신부)는 지난 6-7일 1박2일간 가진 '1999년 인권선교정책협의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KNCC는 "현재의 인권법안은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법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기구의 위상이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취급될 소지가 충분히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구제를 감당할 수 없다"며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인권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어 "박상천 장관은 인권단체의 의견과 국민적 관심을 의면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고> 체벌의 원인부터 생각해보자

한효석(부천정보산업고 교사)

지난 3월 각 학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육벌'이라는 이름으로 체벌 기준을 만들었다. 어떤 도구로 어디를 몇 대 이상 못 때리며 때위를 규정하는 식이었다. 물론 학부모 단체는 이런 기준조차 부정하고 있다. 교사들이 좀더 노력하면 학생들을 충분히 이성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데, 교사들이 너무 손쉽게 체벌에 의존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 단체의 주장은 체벌을 교사 개인이 지닌 폭력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체벌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기 쉽다. 체벌이 생활의 일부가 된 것은 교사와 학생에게 문제가 많고 과거보다 심성이 폭력적으로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에서 그동안 교육분야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아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이들 심신이 옛날과 같지 않은데도 학교 여건과 구조가 몇십 년 전 상황과 거의 다름없다. '19세기 교육 여건' 속에서 '20세기 교사들'은 한 교실에 '21세기 학생' 50여명을 얹어 놓고 나라에서 정해진 수업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이 50명이란 숫자는 교사 한사람이 자기 능력을 제아무리 힘껏 발휘한다 해도 '인성교육'은커녕 학생 50명을 떠들지 못하도록 제압하며 '획일적인 지식' 하나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숫자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교실을 더 짓고, 교사를 더 뽑아 서구 선진국처럼 교사와 학생이 이성적으로 만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 50명의 인격을 존중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획기적이고 특수한 수업 기술을 일러주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가가 해야 할 이런 뒷일을 국가에서 제대로 실천한 적이 없었다. 교사들이 각자 알아서 지도하며 방치해 왔을 뿐이다. 오히려 오늘날 교사들은 '영어교육강화, 정보교육 강화' 같은 정부 지시에 가르쳐야 할 학습량이 더욱 늘었으며, 쏟아지는 공문에 파묻혀 상급 관청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살고 있다. 그래서 옛날보다 학생들과 만나는 시간이 오히려 더 적어지고, 학생 문제로 고민하기는커녕 전문 서적 한 권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날그날을 겨우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교육 여건과 구조를 개선하려 하지 않고 학생들을 인간적으로 잘 가르치는 교사에게 '성과급'이란 이름으로 돈을 더 주겠다고 체벌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교사가 이를 악물고 대들어도 안 되는 상황을 정부가 잘 알면서 교사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왜 때리는가'를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지금까지 '어떻게 때리지'만 논의하고 있어서는 체벌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 더구나 정부가 교육 여건과 구조를 개선하려 하지 않으면서 체벌 교사를 문책하겠다는 식으로 나간다면, 교사들은 이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떠들거나 말거나, 알아듣거나, 말썽을 부리거나 말거나 학생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

주간인권호름

(99년 5월 3일-5월 9일)

1. 검찰, '영남위 사건' 조작 자인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디스크의 '변조' 의혹이 커져가는 가운데, 검찰이 선고를 앞에 둔 시점에서 구속자들의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를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공소장 변경(8일)
2. 짓밟히는 대학내 '언론의 자유'
<계명대 신문>, 비판적 기사와 논조를 문제삼은 학교 측이 기자 6명을 전격 해임함에 따라 한달째 파행 운영...효성카톨릭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인제대 등 10개 대학에서도 편집권 둘러싼 마찰 계속(6일)
3. 지하철 탄압 "해도해도 너무하네"
파업중단 후 복귀한 지하철 노조원 상대로 부당징계 및 고소고발 계속...사상전환제와 다른 '소명서' 제출요구
4. 청소년 권리 찾기 움직임
청소년의 권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청소년 연대 구성하고 선거권을 18살로 낮추는 운동 시작...청소년들의 놀이공간 확보와 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 할 예정
5. 법원, 회사 핑포에 제동
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용을 취소한 데 대해 '노동자 지위 인정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자, 법원이 '임용 취소자에 대한 회사측의 부당해고를 인정, 임용일자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 내려(3일)

◆ 수지로 본 인권 ◆

<환자 보호자, 간호사 겸업?>
지난 4월 전국 16개 대형병원과 12개 중소병원 환자 992명을 조사한 결과, 병상의 환자자세 바꾸기 94.1%, 소변주머니 비우기 89.8%, 이불갈기 86.4% 등 의료비에 포함된 곳은 일들을 대부분 보호자가 하는 상황

주요공판안내

- ▶ 5월 11일(화)
신대영/도영경(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403호, 합의10부, 속행
- ▶ 5월 12일(수)
김문수(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유성철(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3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김희정(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 ▶ 5월 14일(금)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사건(국보법 이적단체 구성 등) 오전 9시30분, 인천지방법원 103호, 선고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5월 12일(수)

제 136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수배자' 단속 핑계, 경찰 횡포

목사 강제연행 시도...폭력 행사 물의

기소종지자 일제단속이라는 구실 아래 경찰이 교회에 무단침입하고 폭력을 행사해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12시 경 서울 영등포1동에 위치한 '예수복음 약물상담치유 선교센터'(소장 민호기, 이하 선교센터)에 영등포 역전파출소 소속 순경들이 기소종지자를 찾는다며 명목으로 무단침입한 뒤 선교센터의 목사를 강제연행하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폭력까지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역전파출소 소속 강진호 순경 등은 선교센터를 방문, 수배 전단지들 들어대며 선교센터 장성환 목사에게 '이런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다. 이에 장 목사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했고, 곧바로 돌아갔던 순경들은 5분 후 다시 선교센터를 찾아와 장 목사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다. 이에 장 목사가 "구인장이냐 영장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자, 경찰은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며 장 목사를 계속 물고 늘어졌다.

이에 대해 장 목사는 "집집마다 다니며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느냐"고 따지며 경찰들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했으나 경찰은 이를 무시한 채 주민증을 보여 줄 때까지 떠나지 않고 근무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어 순경들은 장 목사에 대한 강제연행을 시도해 장 목사를 20미터 정도 끌고 갔으며, 이를 말리던 민호기 소장 등을 밀쳐 민 소장이 철문에 부딪혀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장 목사도 이 과정에서 허리와 우측 팔, 어깨를 다쳤다. 장 목사는 "백주대낮에 영장도 없이 3시간 20분 정도 선교센터의 업무를 방해하고 협박·폭행한 경찰의 만행을 좌시할 수 없다"며 역전파출소

소속 순경들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운동, 안팎으로 '봉'

인제대, 선출된 총학생회장 제적

학생운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안팎으로 시련을 겪고 있다. 한총련 활동을 빌미로 한 당국의 탄압과 더불어 학교당국마저 학생회 자치활동을 탄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제대학교에서는 최근 학교측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 학생회 간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학칙이 정한 간부 자격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제적 또는 무기정학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려 학생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인제대학교에서는 지난 4월 28, 29일 학생회 선거가 치러졌으며, 이를 통해 김해제(보건관리학과) 씨가 총학생회장으로, 이승현(법학과) 씨가 인문사회대 학생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학교측은 "학칙에 어긋나는 비자격 후보들인 만큼 학생회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선출된 학생회장 등을 제적하고 학생회 간부 4명과 선거관리 위원들에 대해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학교측은 앞서 선관위 학생들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운동권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는 등 선관위 활동을 방해하는 활동도 서슴지 않았다.

인제대학교는 97년 교수회의를 거쳐 수정한 학생회칙을 통해 △출마직전 학점 2.5 이상 △학사경고를 받지 않은 자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및 형

사처벌을 받지 않은 자 등으로 학생회 간부 출마자격을 제한한 바 있다.

인제대측은 이외에도 97년 3월 대학신문사 기자들이 IMF 관련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명의의 광고 및 학생회가 운영하는 새로배움터에 관한 기사 삭제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신문 발행을 중단시키고, 기자들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려 물의를 빚어왔다.

영남위 선거공판 연기

검찰 공소변경

10일 부산지방법원 214호 법정에서 열린 소위 '영남위원회' 관련자들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선고가 연기되었다.

이날 검찰 측은 구속자들에 대해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를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공소를 변경하는 공소변경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검찰 측은 공소장 변경은 영남위원회 사건의 증거물인 디스켓에 대해 조작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 4월 20일자 참조)

이날 영남위원회사건 관련 구속자 15명 전원은 재판이 끝난 뒤 법정입구에서 검사의 공소변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구속자들은 "이번 사건에 있어 무죄가 드디어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한 뒤 "반국가단체"가 안되면 '이적단체'로라도 처벌해달라는 검찰의 주장은 논쟁할 가치도 없는 비열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한편 박경순 씨 등 6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12일 오전 9시30분 부산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며, 김창현(울산동구청장) 씨 등 9명에 대해서는 13일 오후 2시 추가심리 이후 17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인권
시평

지하철 파업과 프랑스의 철도 파업

차미경(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사무국장)

한국의 지하철 파업이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 정리되었다는 소식을 런던에서 들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충분한 대화와 명분 속에 파업이 수습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접하고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파리에 잠시 머물게 되었다. 프랑스 공항에 도착해 약속장소에 전화를 하니 철도노동자들이 파업 중이라 불편한 것이라며 버스를 탈 것을 권했다.

하루사용권을 이미 끊어놓은 입장에서 철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니 당장에 손해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밖에 없었지만 또 하나의 관심은 노동자 파업이라는 상황을 같이 겪고 있는 프랑스 시민들은 파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한국에서 언론의 지하철 파업 죽이기와 시민들의 불평이 높았다는 이야기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왜 파업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도 파업에 대한 사회의 반응이 더 궁금할 수밖에 없었다.

공항역 주변을 돌아보니 모든 철도는 잠자고 있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나의 시선은 철로에서 있는 열차들로부터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림처럼 명동과 서울대학에서 싸우던 한국의 지하철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시내에 들어서도 경찰은 보이지 않았다. 지하철 부근에서 약속이 있어서 지나가다 우연히 3명의 경찰을 보았다. 함께 있던 프랑스 활동가에게 파업 때문에 경찰이 배치되었냐고 물었더니 상시적으로 순찰하는 경찰이라고 말했다. 파업에 공권력 개입이라는 사실은 프랑스 파리에서는 낯선 이야기 같아 보였다. 파리는 모든 도시들이 연결되어 있는 소위 방사형 도시다. 그래서 한 번 파업이 일어나면 그 불편함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내가 잠시 있던 파리의 신문 어디에서도 파업을 비난하는 기사는 찾아

보기가 어려웠다. 물론 이는 현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신문을 펼치고 대화를 하면서 확인된 사실이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 죽이기에 언론이 나서고 시민의 비난으로 머리 숙인 파업을 해야 했던 노동자들이 있는가 하면, 사회의 정의로서 파업을 받아들이는 프랑스 시민들의 의식의 차이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이 대답을 거리에서 찾기로 작정을 하고 나는 비행기 출발 전 약 5시간을 현지어를 하는 친구를 쫓아서 거리 인터뷰를 하였다. 철도노동자들의 파업

자기 밥그릇만 챙기기 위해 파업을 했다는 비난의 목소리 속에 공존을 위한 대안의 소리를 내주는 가슴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 것이 하나의 이유였다.

중년 아주머니부터 젊은 청년들까지 만나보았다. 질문 역시 아주 단순했다. 현재 파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파업을 지지하는가 반대하는가? 그리고 불편하지 않은지 등등.

99% 정도의 사람들이 모두 파업을 왜 하는지 이야기 했다. 그리고 대부분은 질문이 무색할 정도로 Support(지지)와 Solidaritas(연대)를 이야기 했다.

불편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에 내가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은 불편하지만 감수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표정은 담담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한국으로 돌아온 지금도 오랫동안 머리에 남아있다. 파업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세계화에 의해 권리를 보호할 수 없는 시대로부터 우리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

지막 한마디, "파업이 없어도 점점 힘든 상황이 이미 초래된 것이 아닌가요?"

상호 권리의 주장에 대해 정의로 이해해주는 사회적 역사와 분위기가 우리의 상황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부러웠다. 거리에서의 인터뷰에서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얻고 나는 바빠 비행장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

택시 운전사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같았다. 마지막으로 다시 물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운전사였기에 조금 길게 이야기 할 수 있었다. 운전사는 "함께 공존하기 위해 나는 파업을 100% 지지한다"고 말했다. 공존의 의미가 남긴 여운은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깨졌다. 자기 밥그릇만 챙기느라 파업을 했다는 비난의 목소리 속에 공존을 위한 대안의 소리를 내주는 가슴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돌아와서 나는 이번 파업을 지켜본 하버드 대학 노동조합 연구소 대표 Dr. Elaine Bernard를 만났다. 노동조합 운동가로서 그녀는 지하철 파업과 관련 제3자이지만 노동자 대표로서 절실한 한 마디를 했다. "한 번을 해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파업 이유를 잘 모르는 시민들을 교육하고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전술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파업을 승리로 이끈 UPA 노동조합의 파업은 무려 1년을 준비해서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물리적인 저항의 모습만으로는 자본주의에 기생한 언론이 우리들을 이해해줄 것이라고 할 수 없지요. 이런 점에서 한국의 강력한 노동조합은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지 못한 파업이 사회적으로 어떤 후유증을 남길 것인지 다각도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절실한 노력이 이제 노동조합과 사회단체에 남아있는 몫이 아닐까 싶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a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군산경찰서 유치장 피의자 변사

사체에 명자국 발견...경찰, '호흡장애' 발표

군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피의자가 갑자기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진상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폭행 혐의로 구속된 두홍균(37) 씨가 12일 새벽 1시경 유치장 내에서 갑자기 호흡장애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기던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두 씨가 몸을 웅크린 채 잠을 자고 있다가 몸을 펴는 순간 호흡장애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두 씨 사체의 왼쪽 팔 부위와 오른쪽 옆구리 부분 등에서 명자국이 발견됨에 따라 유족들은 구타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 사체의 목 앞부분에 혈흔이 묻혀있는 것이 발견됐으며, 이는 단순한 시반 현상이 아닌 것으로 지적됐다.

사건 발생 후 두 씨의 사체를 살피본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되찾기 모임'의 김종섭 사무국장은 "폭행이 직접적인 사인인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두 씨가 구타를 당했다는 의심은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또 유족들은 10일, 11일 이틀간 두 씨를 면회했으나, 당시엔 두 씨의 몸이 건강함 상태였다고 밝혔다.

현재 두 씨의 시신은 시내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으며, 유족들은 변호

사 선임 후 부검에 응할 계획이다.

"금속연맹 파업 정당"

민변, 현행 '노조법' 개정 촉구

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이경우 변호사)는 12일 '금속연맹 파업투쟁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 "금속연맹의 7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5.12 파업투쟁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산업적 정치파업이므로 이를 불법파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자체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대부분의 쟁의행위가 불법이 되어 파업지도부가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태에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범죄시하는 사법기관과 노동부 등의 잘못된 시각도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위원회는 또 "금속연맹의 총파업은 법정노동시간 단축, 사회복지제도의 확충, 정리해고제의 철폐 등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쟁의행위인 만큼, 이는 '산업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단체행동권 행사의 하나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변은 "현행 노조법의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하며, 사법기관도 사용자 편향의 법 해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긴급체포' 남용에 배상신청

근질긴 민원제기, 보복성 체포

한 시민이 검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국가배상을 신청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1일 시민 조인준(62) 씨가 검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2천만원의 국가배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지난 96년 6월 15일 집속사고를 낸 후 상대차량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조 씨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다며 재수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거듭 제기했고, 99년 2월 18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부장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대기하던 중 조기선 담당검사에 의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조 씨는 긴급체포 후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28시간만에 석방되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당시 조 씨가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증거인멸의 사유나 도주의 우려가 없었으며, 특히 검찰청 사내에 있었기 때문에 긴급체포의 사유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검사가 조 씨를 긴급체포한 것은 끈질긴 민원제기에 대한 감정 섞인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① 희생자 피해구제

금전 보상 불구, 상처 치유 안돼

다음주면 5·18 광주민중항쟁이 19주년을 맞는다. '폭도들의 반란이 '민중항쟁'으로 재규정되고, 학살의 수괴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이뤄지는 등 5·18의 진실과 의미를 복원하는 작업은 그동안 많은 진전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5·18 문제는 다 끝났다'는 시각이 팽배해지고 기념과 추모행사 일색의 5·18로 변모하는 듯한 흐름은 깊은 우려를 낳게 한다. 5·18과 관련해 풀려야 할 과제가 아직도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권하루소식>은 5·18과 관련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앞으로 4회에 걸쳐 짚어볼 예정이다. <편집자주>

- ◆ 5.18 - 5.27 사망자 166명
- ◆ 5.27 이후 현재까지 부상·고문 후유증 등에 의한 사망자 162명
- ◆ 행방불명자 64명
- ◆ 부상자 2656명
- ◆ 구속기소자 357명
- ◆ 단순 연행·구금자 6백여 명

이상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5·18 관련 희생자들의 숫자다. 이들에 대해 정부는 지난 90년 이후 세 차례(93년, 98년)에 걸쳐 금전적 보상을 실시했다. 아직 자신 또는 가족의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하곤 5·18 희생자에 대한 물질적 보상조치가 거의 마무리된 셈이다.

그러나,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를 넘어서는 금전 보상만으로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구제 및 복원조치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거듭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악몽은 계속되고...

19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80년 5월의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고문피해자들이다. 5·18 당시 군 부대와 수사기관에 끌려가 심한 고초를 겪었던 사람은 줄잡아 2천여

명(신고되지 않은 단순 연행자 포함)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조사과정에서 구타와 고문을 당했으며,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을 떠안고 살아가고 있다.

황창욱(42) 씨는 벌써 7년이 넘게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다. 80년 5월 27일 귀가하던 길에 연행됐다는 황 씨는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으며 곤봉과 군화발 등으로 개 패듯이 얻어맞았다고 한다. 심지어 물 속에 처박히거나, 자신을 개미집에 묶어둔 채 개미집을 건드려 살을 깨물게 하는 지독한 고문도 당했다. 그때의 고문과 구타로 인해 황 씨는 정신이 들락날락하는 후유증을 줄곧 앓아 왔던 것이다. 황 씨의 누나 순애 씨는 "동생이 잠자다 말고 느닷없이 일어나 머리와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일이 잦고, 특히 5월이 돌아오면 그 증세가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황 씨는 심지어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때리고 기물을 부수는 행동을 하곤 해 벌써 여러 차례 감옥신세도 졌다고 한다. 93년 9천여 만원의 보상금을 댔지만, 병원비도 뭐다 해서 이미 다 써버렸고, 누님의 도움으로 근근히 생활을 유지해 가는 것이 지금 황 씨의 모습이다.

정신이상 후유증 적잖아

5·18 기념재단의 정수만 상임이사는 "당시 불참했던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머리를 많이 얻어맞아 정신이상 증세나 간질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신이상 증세를 보인 피해자가 1백여 명이 넘고 그 가운데 사망한 사람만도 2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밝혔다.

허연식 기념재단 기획부장은 "5·18 이후 사망한 사람 중 60% 이상은 고문에 의한 정신분열증세를 보였던 사람"이라고 밝혔다. 또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는 사람 외에도 지금까지 '물 편'을 투여받으며 고통을 참고 있는

증상해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 5·18 관련자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허연식 기획부장은 "고문 피해자들은 해마다 그날이 되면 똑같은 고통을 체험한다. 이는 일시적인 금전적 보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심리적 차원의 치유가 뒤따라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부상에 따른 경제능력의 상실, 5·18이 왜곡되어 오면서 황폐화된 정서와 정체성의 상실, 피해의식 등을 치유·해소하는 사회적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어야만 희생자 개개인의 '복원'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학살자와 5공 세력이 다시 활개를 치고 다니는 모습 속에서 5·18 희생자들은 또다시 혼돈을 겪고 있다고 허 부장은 지적했다.

구원을 떠도는 행방불명자

고문피해자들 말고도 5·18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행방불명자의 가족들이다.

지금까지 정부에 의해 행방불명자로 공식 인정된 사람은 64명. 그러나 아직도 1백명 이상의 행방불명자 가족들이 자식 또는 형제의 억울한 원혼을 달래지 못하고 있다.

80년 5월 딸(최봉예·당시 18세·직장인)을 잃었지만, 행방불명자로 인정받지 못한 최규환(67·농업·전북 고창) 씨. 그는 딸의 행방불명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까지 내왔지만 소송이 없자 이제 "다른 자식들이 있다는 것을 위한 삼고 딸 문제를 포기"하기로 했다. 최 씨는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지금까지 유골을 찾아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고 전했다.

최 씨와 달리 아들(이창현, 당시 7세)의 행방불명 사실을 인정받은 이귀복(행방불명자 가족회 회장) 씨에게도 안타까움은 마찬가지다.

▶ 3면으로 이어짐

광주민중항쟁 19주년 기념 특별상영회

<칠레전투 1-3부> <칠레, 지울 수 없는 기억>

- ◆ 5월 15일(토) 오후 3시-9시30분(전 4편) / 서울의대(대학로) 학생회관
- ◆ 입장료 : 5천원(전편) / 문의 : 김정아(741-5363)

인권하루소식 독자 및 제3회 인권영화제 특별회원, 민주노총 소속 노조 및 조합원에는 4편을 100,000원 특별가에 드립니다.

영남위 사건, 이적단체 혐의 적용 박경순 씨 징역 7년 선고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재판부가 1심에서 적용된 반국가단체 구성죄 대신 이적단체 구성죄를 적용해 유죄선고를 내렸다.

12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손기식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경순 씨에게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하며 징역 7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6명 모두에게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사건 관련자 15명 가운데 6명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이날 재판에서 김명호 씨는 징역 4년(1심 징역 5년), 방석수 씨는 징역 3년(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홍정연, 이은미, 김이경(1심에서 모두 실형선고) 씨는 각각 집행유예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이 단체가 폭력적으로 정부를 전복하거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낸 북한동포돕기 성금이 검찰의 주장처럼 '북한을 수호하고 김정일을 보위하기 위해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제택된 증거 가운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격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고 밝히며, 경찰이 제출한 전화감청 및 대화녹음자료,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재판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컴퓨터 디스켓의 압수과정 및 출력물의 처리과정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고 결과와 관련, '영남위 사건 부산·울산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가 조작된 디스켓을 증거로 채택해 유죄를 선고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며 "단체구성의 3대항목인 강령과 규약, 자금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이적단체로 처벌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또 "검찰의 공소변경은 국가보안법이 가지고 있는 임의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재판은 검찰과 재판부가 반국가단체에서 이적단체로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타협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창현 울산동구청장 등 나머지 9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17일 열린다.

"언론자유 수호" 집단대응 대학신문 기자단, 공동투쟁 결의

대학 내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전국 각 대학신문사 기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12일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의장 김태훈, 전대기련) 소속 기자 2백여 명은 세종대에서 '대학언론인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대학신문사 탄압 상황을 폭로·규탄했다. 이들은 또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교육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전대기련에 따르면 인제대, 세종대, 서울시립대에서 1년 이상 신문발행이 중지되었고 계명대, 인제대, 순천향대에서는 기자해임과 신문사 폐쇄라는 극단적인 조치가 내려지는 등 각 대학별로 학보사에 대한 노골적인 언론탄압이 벌어지고 있다. 또 대학신문의 건전한 사회비판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한총련, 민주노총, 북과의 교류 활동에 대한 보도를 집중적으로 금지하는 등 탄압이 심해지고 있다고 전대기련은 밝혔다.

이밖에 각 대학들은 대학신문 탄압방면으로 △학점 제한과 징계를 이용해 기사를 해임 또는 협박하는 방법 △사문화된 사치를 통해 각종 '위원회'를 신설해 기자들의 역할을 줄여 나가 고, 급기야 '사상 불순' 등의 이유로

제명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정론사 편집국장 박경진 씨는 "주간교수의 개인적 성향이나 학교 당국의 기호에 따라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마찰이 빚어지는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박 씨는 또 "새로 부임한 주간교수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딸이 문제가 많다'며 만나자고 하는 등 인권침해까지 일삼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러한 대학언론 탄압현상에 대해 응용 전 고려대 신방과 교수는 "대학신문의 주체인 학생이 주간교수에 의해 간섭 당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어떠한 이유든지 학생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대학언론에 끼어 들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2면에서 이어짐. <특집> 5·18

이귀복 씨는 "유가족들은 뼈라도 찾았지만, 행방불명자 가족들은 자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점이 제일 가슴아프다"고 말한다.

행방불명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이들이 암매장된 장소를 찾아내 유골을 발굴해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암매장 장소로 제보된 곳만도 9군데에 달하지만 아직 발굴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그 때문에 의혹만 더욱 무성해지고 있다. 이귀복 씨는 "경기도의 한 시립공동묘지에 시신을 모아 매장했다"는 의혹을 소개했다. 그러나 시립공동묘지에 매장되어 있던 5백여 구의 시신은 이미 화장되어 버려 그 진실을 확인하기도 힘들게 됐다고 한다. 이제 가족들은 누군가가 나서 행방불명자들의 진상을 말해주기만을 예타게 기다리고 있다.

정수만 상임이사는 "물질적 보상과 학살자들에게 대한 사법처리 등을 통해 외형적으로는 5·18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상규명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가 미온적으로 끝나버리고 특히 행방불명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5·18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a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5월 14일(금)

제 136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소명서 제출요구에 굴욕감"

지하철공사측, 노동자간 반목·불신 조장

지하철 공사측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제출받고 있는 '소명서'에 대해, 노동자들은 이를 굴욕적인 반성문 또는 '전향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지난 5월 6일부터 11일까지 민주노총과 인권운동사랑방이 지하철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문에 응답한 798명의 노동자 가운데 79.4% (501명)가 "소명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을 우려"해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응답자 가운데 54.5% (355명)는 "사실상의 감압적 분위기 때문에" 소명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결과, 조합원들 대부분은 소명서 제출 요구가 지하철 공사측의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의도를 △조합원들 간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것 (31.6%) △파업의 정당성을 훼손할 목적 (24.8%) △파업참가자를 조합지도부와 격리시키기 위한 것 (24.7%) 등으로 해석했다. 소명서를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로 생각"한 노동자는 7.3%에 불과했다. 또한 소명서 작성 후 47.5% (309명)는 "공사의 탄압과 힘에 굴복당하는 느낌이 있다"고 털어놓으며 소명서가 조합원들에게 심리적 충격을 많이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설문 결과에 대해 조사팀은 "소명서는 노동운동에 도입된 현대판 전향서"라며 소명서 제출을 강제하는 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지금까지 제출된 소명서를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파업 참여자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지하철 공사측이 노동자들

간의 불신과 반목을 심각하게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측은 현장 내에서 조합원간, 직원간에 서로 풀릴 수 있는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공문을 내려보내 고소·고발을 유도하고 있으며, '비밀 신고'를 현장과 가정으로 보내 동료간의 밀고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집시법 개악반대" 선언

각계 대표인사 속속 참여

법조계, 종교계, 학계, 사회운동계 등의 대표 인사들이 집시법 개악을 반대하는 선언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본지 4월 29일, 5월 4일자 참조).

13일 발표된 1차 '집시법 개악 반대 선언'에는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등 사회단체 대표 43명과 오수성 교수 등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대표 5명, 이명남 목사 등 기독교, 불교, 카톨릭 성직자 13명, 강동진 민중의료연합 대표 등 보건의료계 인사 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자칭 인권상까지 받은 인권대통령이자, 국민의 정부라 하는 김대중 정부가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 농민, 학생, 시민들의 투쟁에 언론조작, 구속·수배 등 폭력적 탄압으로 일관하고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학생, 시민들을 이적단체, 반국가단체 일원으로 만들어 탄압하려니 급기야 국민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 집시법 개악까지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며, "김대중 정부는

집시법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대통령은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 뿐 아니라, 집시법에 대한 올바른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즉각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의 공포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와 관련 사회진보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개정 집시법의 내용과 처리과정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다음주 중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틀루엔 직업병 첫 발생

노동부 감독 소홀 등 원인

10여 년간 테니스 공을 제작하며 틀루엔(유기용제)을 취급해왔던 노동자가 은몸이 굳어지는 직업병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총은 13일 유명 스포츠업체(주)낙소에서 근무해온 장석분(57) 씨가 '전신성 경화증' 등 직업병 환자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국내에 틀루엔 등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사업장은 많지만 전신성 경화증 환자가 보고된 전례는 없다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장 씨는 97년 1월 퇴직하기 수년 전부터 심한 어지러움증과 메스꺼움 증세를 보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받은 적이 없었고, 97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틀루엔의 허용기준이 2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을 때도 노동부에서는 별다른 지도·감독조치가 없었다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민주노총은 "장 씨의 직업병은 노동부의 직무유기와 형식적 작업환경 관리에 따른 예견된 일"이라며, "현재의 형식적인 작업환경측정과 노동자 건강진단제도가 전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약> '영남위 사건' 항소심 판결 요지 "불법 감청·촬영 자료 증거능력 없다"

부산고등법원 선고 99노123

1. 담당재판부: 제2형사부(재판장 손기식, 판사 최인석, 판사 이영동)
2. 피고인: 박경순, 김이경, 김명호, 방석수, 이은미, 홍정현
3. 판결결과

-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활동의 죄는 불인정

- 이적단체 구성의 죄 유죄로 인정
- 통신, 회합 부분에 대한 전화녹음, 대화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와 관련한 통신, 회합, 김일성, 김정일 생일 기념식 장면 녹취 부분 등은 무죄. 북한동포돕기 부분은 처벌대상이라고 볼 수 없어 무죄.

새로운 증거방법의 증거능력 인정 방법과 인정 여부

이 사건에는 전화감청 및 대화녹음(이른바 도청), 비디오 촬영 등의 결과가 수록된 녹음·녹화테이프와 컴퓨터 및 그 디스켓에 담긴 자료가 주된 증거로 제출되었고, 피고인측은 그 증거수집절차의 적법성을 집중적으로 다투었는데, 이들은 종래의 전통적인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던 것들이다.

당원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리한 결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화감청, 대화녹음, 비디오촬영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많으나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 영장에 의하거나, 영장없이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이 사건 공소사실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당시 심리 막바지에 주된 쟁점이 되었던 컴퓨터 디스켓의 압수절차는 위법한 절차에 의한 증거수집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 디스켓에 담긴

내용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으나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김창현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군사법원의 감상규에 대한 판결, 당 법원에서 있었던 혁신위원회에 대한 판결 등과 비교해 보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① 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수사기관에서는 위 피고인들의 전화, PC통신, 대화 등을 감청 또는 녹음하면서 법원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허가 및 기간연장을 받은 바는 있다.

그러나 당초 위 허가서의 내용이나 대상과 범위, 객체 등이 피고인들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어, 일부는 누락된 부분도 있어,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도록 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어긋난 사실이 확인된다(위 법 제4조, 제14조 제2항은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

기통신의 내용 및 불법 대화녹음·청취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잘못이 절차적인 오류나 업무미수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②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피고인 박경순의 주거지에 출입하는 이철현 등의 출입장면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 2개의 녹화내용에 관하여, 위 각 비디오테이프 및 이로부터 촬영한 사진들 중 대부분은 피고인 박경순의 집 밖에서 위 피고인의 집 내부에 있는 위 피고인들을 촬영한 것이다.

그런데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7조), 누구든지 피촬영자의 승낙 없이는 그의 모습자태를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가지므로, 수사기관 등이 범죄혐의가 명백한 경우이거나 사태가 긴박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개인의 주거지 안에 있는 그 개인 또는 다른 개인의 자태를 촬영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디오촬영하기 위하여는 현행 법상 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야 가능한 것이므로 영장없이 촬영한 위 녹화테이프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

만화사랑방

이동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5월 15일(토)

제 136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공안사범은 쓰레기"

교도관들, 노동운동가 등 재소자 폭행

부산교도소 교도관들이 재소자 2명을 집단폭행해 탈출을 빚고 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저지투쟁과 관련해 구속된 현대자동차 전 노조위원장 김광식 씨와 노조대의원 배만수 씨는 지난 12일 부산교도소로 이감된 직후 교도관들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고 14일 접견한 변호사를 통해 밝혔다.

접견을 마친 윤인섭 변호사에 따르면, 김광식 씨 등이 이감 직후 교도소 측에 '사동 배정' 문제 등을 이야기하기 위해 보안과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자, 교도소 당직계장이 교도관 10여 명을 동원해 이들을 강제입방시키며 팔을 비틀고 발로 밟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직계장은 또 김 씨 등에게 "공안사범은 다 쓰레기다. 죽일 놈이다"는 비하 발언과 폭언을 퍼부었으며, 배만수 씨의 옷을 찢은 뒤,

유치장 사망, '돌연사' 결론 부검의, "의상 없다" 소견

지난 12일 군산교도소 유치장 내에서 발생한 피의자 사망사건은 '돌연사'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관련기사 5월 13일자).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사체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으며, 부검의들은 "사체에 의상이 전혀 없고, 사망자의 심장이 보통사람보다 부피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에 비해 돌연사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또 사체에서 나타났던 멍자국 등은 돌연사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배 씨의 얼굴에 옷을 씌우고 목을 조르기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변호사는 "김광식 씨의 오른쪽 손가락이 시퍼렇게 멍들었고, 배만수 씨는 왼쪽 손목이 붓고 목 부위와 정감이에 상처와 멍이 들었다"고 밝혔다. 배 씨는 호흡곤란과 가슴통증도 호소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또 "두 사람이 부상에 대한 치료를 요청했으나, 교도소측은 치료마저 불허했다"고 전했다. 이날 폭행사건과 관련, 윤 변호사는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내기로 했다.

한편, 부산교도소 보안과장은 "소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갑을 1시간 정도 채웠지만 이는 정당한 공무집행이었으며, 재소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 행형법 반입 불허 "제본된 책은 안된다" 주장

교도소측이 재소자에게 우편으로 배달된 '행형법' 서적의 반입을 불허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행형법은 재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될 법률이며, 따라서 법무부는 재소자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교도소마다 행형법전의 비치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구치소측은 재소자 전지운(28·국제사회주의자 사건) 씨에게 배달된 '행형법 시행령'에 대해 "출판된 책의 원본이 아니라 제본된 책이기 때문에 비밀통신이 우려된다"며 반입을 불허했다. 전 씨의 친구는

「수형자 권리와 권리구제제도」라는 서적 가운데 행형법 시행령 부분만을 따로 제본해 지난 4월 20일경 우편으로 보낸 바 있다.

이와 관련, 구속노동자후원회의 이영두 사무국장은 "책의 내용을 문제삼는 게 아니라 '제본'이라는 형식을 문제삼아 책 반입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교정 담당자에 따라 원칙 없이 재소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서울구치소측의 조치는 김대중 정부 들어 '재소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밝힌 법무부와 교정당국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민청노회, 이적단체 낙인 법원, 유죄판결 후 집행유예

법원이 또 하나의 이적단체를 만들어 냈다.

1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3부(재판장 김옥신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민청노회) 회원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의 이적단체 구성·가입 및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등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청노회가 반미자주화와 북한의 통일방안을 지지하고, 범민련을 적극 지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적단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7조와 관련한 법 개폐 논의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한다"며 구속자 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석방된 김판태 민청노회 사무국장은 "우리의 주장은 현 체제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한 것인데 이를 이적행위로 보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② 진상규명

학살의 진상, 여전히 의문으로

97년 4월 광주사회조사연구소는 전국
의 성인남녀 1439명을 표본으로 5·18
진상규명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
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설문응답자의
72.5%가 "5·18 진상규명이 미흡하다"
는 답변을 했다. 바로 한달 전(97. 3.
16)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통해 광주학
살 범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
리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
은 여전히 5·18의 진상이 명확히 드
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렇다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그
리고 반드시 밝혀내야만 하는 5·18의
진상은 무엇인가?

발포책임과 살상경위

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 사이
행된 시민학살과 관련,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발포명령자를 비롯한 살상의
책임자와 경위를 밝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판결에 이르는 과
정에서도 최초의 발포명령자와 발포경
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현장에서
의 살상의 지휘체제와 각 살상자의 구
체적 역할 분담 내용도 규명되지 못했
다. 결국 "공수부대원들이 왜 그토록
잔혹한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누가
그들을 살상과 잔혹행위로 내몰았는
지" 등 시민살상을 둘러싼 핵심적인
의문은 풀리지 않았던 것이다.

시민살상의 책임과 경위를 밝히는 일
은 또다시 발생할지도 모를 유사사건
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되
어야 할 과제다. 사법부의 판결을 통
해 학살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이뤄졌지만, 당시의 현장지휘
관 및 잔혹한 인권유린 행위를 했던
사병들의 책임을 밝히는 문제는 간과
된 것이 사실이다. 공소시효 문제 등
으로 인해 그들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묻기는 힘들더라도 '역사적 단죄' 만큼
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했다. 이를 통
해, 지시에 따르는 하급자는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무조건 면책될 수 있

다는 의식도 뿌리뽑아야 하는 것이다.

헬기에서의 무차별 사격

5·18 현장을 직접 체험한 아널드 피
터슨 목사(54·미국 일리노이)는 "5월
21일 오후 3시 15분쯤 광주 상공에 전
투 헬리콥터 몇 대가 나타났고, 그들
은 도시 상공을 날아다니면서 거리에
있는 군중을 향해 오후 내내 총을 쏘
다"고 증언했다(시사저널 95년 4월 12
일자 참조). 피터슨 목사 외에도 수많
은 목격자들이 헬기사격 사실을 증언
해 왔지만 그 진상 역시 규명되지 못
했다. 헬기에서의 사격은 특히 살상의
무차별성은 물론, 진압작전의 성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로
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다.

집단학살과 암매장

5·18과 관련, 빼놓을 수 없는 과제
가운데 하나가 집단학살과 암매장의
진상을 밝히는 일이다. 5·18 희생자
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분

아니라,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과 해원을 위해서도 이 문제 만큼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광주-화순간 도로 일원(주남마을)의
학살 ▲송암동 양민학살 ▲교도소 학
살 등 세 곳의 학살 사건에서만 최소
89구의 사체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
고 있다. 반면, 망월동에 안치된 무연
고 희생자의 묘는 11기에 불과하다.
사라진 사체는 어디에 묻혀 있는가?

진실에 대한 알 권리는 장차 같은 사
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유엔인권위의 '과거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청산원칙'은 "법적 구
제절차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와 그 가
족은 진실을 알 권리를 갖는다"고 선
언하고 있다. 나아가 진실을 알 권리
는 피해자의 것일 뿐 아니라 전체 국
민의 것이기도 하다.

자료참조

「12·12와 5·18 재판 결과에 대한
법리적 분석」(한인섭 서울대 교수)
「대법원 제출 5·18 사실관계 자료」

행사의 동정

- 광주항쟁 19주년 기념 특별상영 <철레전투> <철레:지울 수 없는 기억>
5월 15일(토) 오후 3시-9시30분 / 서울대 의대 학생회관(대학로)
문의: 인권운동사랑방(02-741-5363)
5·18광주민중항쟁 19돌 기념 민족대회 전야제
5월 17일(월) 오후 7시 / 서울 명동성당
주최: 민권공대위(02-363-7802)
실업장애인 연구조사 발표 및 정책 대안을 위한 공청회
5월 18일(화) 오후 2시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국회복지포럼(문의: 02-788-2485)
양심수 석방 기금 마련을 위한 민가협 장터 및 유가협 장터
5월 18일(화)-21일(금) 오전 10시부터 / 서울대 학생회관 앞
제1회 불교인권문화제
5월 19일(수) 오후 6시 / 조계사
1부: 인권문화제 개막식 / 2부: 종교계 1080인 인권선언 / 3부: 콘서트
주최: 조계종 총무원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a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5월 18일(화)

제 137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집회참가자, 경찰폭력 수난

거리시위·연행과정서 잇따라 폭행 당해

집회 참가자들이 연일 경찰에 의해
집단폭행을 당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6시 30분 경 종로서
적 건너편 상가 앞에서 금속연맹소속
노동자가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는
것을 목격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상
근자 서민갑(27) 씨가 이를 제지하던
중 전투경찰들에 의해 집단구타를 당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4~5명의 전경이 서 씨를 둘러
싸고 얼굴을 10여 차례 가격했으며 양
팔을 비트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서 씨의 안경이 부러지고 이
마에서 피가 흐르자 전경들은 구타를
멈추고 그를 강제로 전경버스에 태워
연행했다. 또한 전경버스 안에서 서
씨가 큰소리로 병원에 보내줄 것을 요
구하였음에도 전경들은 기다리라는 말
만을 반복하다가 40여분이 지난 오후
7시 20분 경 서 씨를 풀어줬다.

한편 서 씨는 피해상태를 촬영한 뒤
서울백병원에서 15일 상해진단서를 끊
었다. 서 씨는 "내가 폭력을 당한 것
이 사소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국가권
력이 개인에게 이렇게 무자비한 방식
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데 분노
를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서라도 폭력
을 가한 경찰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겠
다"고 밝혔다.

또 지난 15일 민주노총 주최로 용산
역 광장에서 열린 민중대회가 끝난 뒤
명동성당까지 진행된 거리행진 도중
신세계백화점 주변의 질서유지선(폴리
스라인)을 경계로 경찰과 집회참여자
간의 충돌이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집회참가자 다수가 연행되는 일이 발
생했다.

유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이번 2심 재판 결과, 피고인
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들쭉날쭉해 관
계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
이고 있다.

17일 선고 결과, 이정희, 김성관 씨
는 이적단체 가입 혐의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를 적용받은 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적단체 가입
혐의' 외에는 공소사실이 없던 김용
규, 천병태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관련자들을 의아하게 했다.
'울산·부산 영남위사건 대책위' 관계
자는 "들쭉날쭉한 형량 선고의 근거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9-8년을 선고받았
던 임동식 씨와 정대연 씨는 징역 4년
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김창현(울
산동구청장)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
았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지난 12일 재판
과 거의 일치된 판결요지를 밝혔다.
다만 비디오촬영을 통해 확보된 증거
물에 대해서는 12일 재판과 달리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디오
촬영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는
있으나, 공공의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간인권호름> 내일자에

들쭉날쭉 영남위 선고
양형기준 알 수 없어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항
소심 재판이 17일 마무리됐다.
1심 재판에서 관련자 전원에게 '반국
가단체 혐의'를 적용했던 것과 달리,
2심 재판부는 관련자 전원에게 '이적
단체' 구성·가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주요공판안내

- 5월 19일(수)
이수영(국보법 간첩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이경재(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유익선(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신건
5월 21일(금)
오봉석(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3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속행
김병진(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신건
강재우 외3(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1시, 서울지법 319호, 합의22부, 속행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③ 미국의 역할

광주학살 '방조·승인'

5·18과 미국.

광주학살의 진실과 관련,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5·18 당시 미국의 역할이었다.

이와 관련, 지난 96년 미국의 유력 일간지 <저널 오브 커머스>지가 공개한 극비문서는 5·18 당시 미국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저널 오브 커머스>지가 입수한 극비 문서에 따르면, 5·18 당시 미국은 특전사의 광주투입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묵인했으며, 광주의 무력진압에 대해 '지지'를 결정하는 등 광주에서의 학살을 '방조·승인'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10·26부터 한국상황 주시

96년 공개된 극비문서에 따르면, 카터 미 대통령은 79년 10·26사태 직후 행정부내 극소수 최고위급 관리들을 모아 '체로키'라는 암호명의 비상대책반을 운영했다. 비상대책반은 한국에서 진행되는 사태를 추적하면서, 서울에 있는 주한 미대사관측과 지속적으로 비밀전문을 교신해왔다. 비상대책반에는 사이러스 밴스 국무장관,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부 차관, 리처드 홀브루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 대사 등이 참여하고 있었다.

군부대 투입 계획 사전 승인

80년 5월 7일, 카터 행정부는 시위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군부대를 투입하려는 한국 정부의 계획을 승인한다. 미 행정부는 이 비상계획이 서울과 광주에 특전사 부대를 배치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96년 공개된 극비문서에 따르면, 군부대 투입을 위한 비상계획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보증은 글라이스틴 대사에 의해 이뤄졌다. 이에 앞서 크리스토퍼 국무차관과 홀브루크 차관

보는 이를 사전 승인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5월 7일 워싱턴에 보낸 비밀전문을 통해 "법질서 회복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한국 정부가 군대를 투입해 경찰력을 강화하려는 비상계획을 미국정부가 반대한다는 암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날 크리스토퍼 차관은 "우리(미국정부)는 법과 질서 유지를 위한 한국정부의 비상계획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낸다.

미국이 특수부대의 이동을 인지도 있었다는 사실은 "한국군이 주한미군 지휘관들에게 '우발적인 목적으로' 또 '만일의 학생대모에 대처하기 위해' 공수부대 2개 여단을 서울과 김포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음을 전해왔다"는 5월 7일 글라이스틴 대사의 보고전문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89년 한국 국회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조사특별위원회'가 보낸 질의서에 대한 공식 답변서에서 "공수부대를 광주에 파견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광주 무력진압 지지

카터 행정부는 5월 22일 백악관 고위 참모회의에서 전두환의 광주 진압을 지지하기로 결정한다.

극비문서에 따르면, 5월 22일(한국시각 23일 새벽) 백악관 상황실에서 열린 백악관정책검토위원회는 "한국당국이 최소한의 병력을 사용해 광주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여기서 브레진스키 안보보좌관은 "한국정부에 단기적으로 지지를 보내되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진전을 이룩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을 요약한다.

그리고 백악관 회의 후 수 시간이 지나 글라이스틴 대사는 박중훈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방문해 미국의 입장을 전달한다. 글라이스틴은 전문을 통해

"두 사람이 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다는데 동의"했으며 "광주에서 사용할 연합사 병력을 잘라내 한국군의 지휘권 아래 두는 문제에 대한 미국의 긍정적인 대답을 박중리 대행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안정" 목표

미국이 광주에서의 무력진압을 지지하는 등 전두환의 신군부에 힘을 실어준 이유에 대해 <저널 오브 커머스>지의 팀 샤록 기사는 "한국에 위기상황이 벌어진 80년은 미국이 이란인질 사건에 휩쓸린 데다, 소련과의 긴장이 심해지던 때였다"며 "미국은 한국이 또 다른 이란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한반도를 또 다른 위기지역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전두환 집권기간의 중요한 정책 목표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오만

5·18 당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그후 남한에서의 반미투쟁을 본격화시키는 주요 계기가 된다.

82년 부산 미문화원방화투쟁, 85년 서울 미문화원점거농성, 그리고 86년 김세진·이재호 열사의 분신투쟁 등 일련의 반미투쟁을 통해 한국 민중들은 5·18 당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리고 96년 공개된 미국 내 극비문서를 통해 5·18 당시 미국이 광주학살을 방조·승인했다는 점은 주장이 아닌 사실로 입증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아직 미국은 5·18 당시의 역할에 대해 명확한 해명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제3세계 민주화투쟁을 사사건건 방해놓고 가로막아왔던 미국의 오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자료: 시사저널 제332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a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5월 19일(수)

제 137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열사 명예회복' 작초

유공자법 폐기·보상특별법 상정 예정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작업이 중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기로 한 여당의 기존 당론이 폐기되고, 보상 중심으로 이 문제가 처리될 것이 확실시되는 것이다. 여권은 보수세력의 반발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결국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부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회의는 지난해 12월 11일 국회에 상정된 이후 5개월째 처리가 미뤄져 오던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 등에 관한 법률안'(유공자법안)을 폐기하는 대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보상특별법안)을 새로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보상특별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보상과 추모사업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게 된다.

국민회의, "보훈단체 반발"

이에 대해 국민회의측 관계자는 소관부처인 국가보훈처의 반대 때문에 당론을 관철시킬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보훈처가 1백40만명에 달하는 상이군경의 반대여론을 앞세워 유공자법안 제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해왔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수구세력의 저항을 돌파하기엔 현 정권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김대중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만 가지고 있었다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여당의 방침과 관련,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추모연대회의, 의장 이창복) 등 25개 사회단체들은 지난 14일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유공자법안의 폐기는 열사들의 죽음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행위"라며 법안 폐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추모단체연대회의의 김학철 집행위원장은 "유공자법 제정의 핵심 취지는 국가유공자 지정을 통한 명예회복이었다"며 "이를 폐기하고 보상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문제로 축소·왜곡하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개혁은 수구세력의 반발을 극복하는 것인데, 결국 김대중 대통령에게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상임의장 배은심)는 국민회의측 대안을 조건부 수용할 방침이다. 유가협은 △기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추모부처를 명시할 것 △국가가 주체임을 명시할 것 △적용시기를 원안(유공자법안, 69년 8월 7일-98년 2월 24일)대로 통과시킬 것 등을 조건으로 보상특별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유가협의 손종필 사무국장은 "현실적으로 힘에서 밀리다보니 국민회의측 대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보상 이후 국가유공자 지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유가족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한권의 책

「법, 정치, 도덕적 맥락 속의 국제인권」

스테이너, 알스턴 편저

(Henry J. Steiner & Philip Alst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Context: Law Politics Morals*,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인권에 관한 연구는 여러 학문 분야에 관계되고 다양한 분야간의 제휴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법 분야에 치우쳐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적인 인권에 대한 논의의 상층을 총망라한 이 책은 법 분야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간의 접목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편저자인 스테이너는 하버드 법대 인권프로그램의 책임자이며, 알스턴은 사회권 이론의 세계적 권위자이다. 두 사람은 민간단체 보고서에서부터 유엔 결의안과 결정문, 법이론, 국제관계, 도덕 및 정치 이론, 인류학에까지 이르는 분야를 섭렵하며 핵심적인 발췌와 예리한 편집을 통해 인권 문제에 대한 통찰을 시도하였다. 또한 이 시도는 대학에서의 인권 강좌를 위한, 즉 인권교육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성을 띤다.

변변한 인권교재 한권 출판되지 않은 국내 상황에서 인권 강좌를 개설한 대학이나 인권문제와 접목을 시도하는 모든 분야의 교수진이 필독해야 할 책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선 아직 번역 출판되지 않았다. 관심 있는 분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로 문의 (741-5363).

사각에 방치된 장애인 실업대책

생계 곤란·장애심화 등 한계상황 처해

IMF이후 장애인들의 87.7%가 원치않은 실업자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실업 장애인 연구조사 발표 및 정책대안을 위한 공청회'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실업 장애인 674명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실직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시에 거주하고 장애가 심한 사람일 수록 실직된 비율이 높았으며,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해고됐다"고 밝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업 장애인의 97.3%는 실직이후 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중 52.2%는 정부보조금에, 20.2%는 친지의 도움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의 86%는 한달 가구 총소득이 5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직 장애인들에게는 실업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악화(44.4%), 장애의 심화(48.1%), 부채의 증가(56.9%) 등의 고통도 따르고 있었다.

실업대책 홍보 부실, 취업기회 제공 안돼

실업 장애인들이 겪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실업대책에 대한 정보와 기회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는 것이었다.

장애인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대부사업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50%를 넘었으며, 결국 대부분 받은 사람은 전체의 4.2%에 그쳤다.

또한 실업장애인 중 71.5%가 일자리를 원하지만 실업대책으로 마련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은 전체의 8.6%,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교육에 참가한 장애인 역시 7.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공청회에 참가한 한 방청객은 "정부가 실업대책을 세웠다고 하지만 27살 난 정신지체자 아들은 지금까지 한번도 취업을 해본 적이 없다"며 "장애인 실업대책에 대한 홍보와 취업 기회가 폭넓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만든 '사랑의 꽃집'에서 일했다던 한 장애인은 "공단측이 '장애인들이 꽃을 팔면 누가 사겠냐'고 하면서 장애인들을 하나 둘씩 몰아내 결국 26명의 장애인 전원이 실직자가 되었다"며 장애인 실업대책의 허구성을 비판했다.

공청회 토론자로 나선 장애인실직자모임터 간사 최홍수 씨는 "실업극복을 위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곳에서도 장애인 실업 문제는 항상 뒷전이였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실태 조사는 기본이며, 이를 통해서 장애인 고용안정대책을 세우는 한편 최소한의 생활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장애인들을 비롯해 장애인단체 회원 등 약 150명이 참가했다.

주간인권호름

(99년 5월 10일-5월 16일)

1. 몸살 앓는 '생역 없는 고발'
PD수첩 '이단파문! 이재록 목사! 목사님 우리 목사님' 편, 신도난입으로 방영중단(11일), 6년간 각종 종교비리를 추적해온 PD수첩 제작진, 갖은 협박·소송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나

2. 제조자 세상 나들이길 열려
법무부는 오는 6월부터 모범수와 10년이상 장기수을 대상으로 교도소에 수감중인 제조자에게도 외출·외박 허용하겠다고 밝혀(12일)

3. 산업보건에 빨간불
볼루엔 중독 직업병환자 국내 첫 발견, 집착체 용제인 볼루엔에 16년간 노출되어 온 여성 노동자가 온몸이 굳어지는 '전신성 경화증'을 나타낸 것으로 인하대병원 산업의학과 밝혀(13일), 대책마련 시급

4. 집시법 개악 반대 운동 포문
사회단체 대표 43인, 교수 5인, 성직자 13인, 법조인 13인등 각계 대표인사가 참여한 '집시법 개악 반대 선언' 발표(13일)

5. 파업노동자 인권무시 여전
원자력병원 파업과 관련, 경찰이 이상춘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영장없이 연행(15일)

6. 파업 분출이, 성이 안찾나?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의 파업에 따른 손실액 보전을 이유로 노조와 석치순 위원장 등 집행부 68명을 상대로 39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16일)

◆ 수지로 본 인권 ◆

<매맞는 청소년>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난해 9월 중·고교 재학생, 소년분류심사원 재소 비행청소년, 편의점 등 고용청소년 등 1095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직장에 고용된 청소년의 58.8%가 월 1-3회팔로, 23.5%는 주 1회 이상 업무한데 탄과 얼굴을 맞는 등 82.3%가 업무한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북 식량난, 북 관리 첫 공식언급>
북한 식량피해복구위원회의 전인천 대외사무국장 대행이 북한을 방문중인 유엔산하 세계식량계획(WFP) 실무대표들에게 북 식량난에 대해 첫 공식언급, 이에 따르면 95년부터 98년까지 인구 1천명당 9.3명으로 사망률 급증, 종전 사망률이 1천명당 6.8명인 것을 고려하면 단순계산으로만 지난 4년 동안에 22만 명이 기근으로 굶어죽은 셈.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④ 국민 앞에 당당한 학살자들

5공일당 자중하라! 심판은 안 끝났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95년 10월 5일 "중국의 문화혁명에 비하면 광주 사태는 아무 것도 아니다" 고 말한 적이 있다. 길 가던 광주시민이 폭도로 몰려서 군인에 의해 맞아 죽었고 그 시체가 어디에 묻혔는지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망발을 할 수 있을까? 더욱이 광주학살의 주역이었던 노 씨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다시 한번 국민의 쓰라린 가슴을 짓밟는 행위였다. 노 씨의 망발은 군부쿠데타 세력을 비호하는 정치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 5공 세력의 행보

· 98년 10월 1일 : 전두환·장세동·허문도 씨 등, 경호원 20여명을 대동하여 성남종합운동장에서 하기 경기관람, 관중들에게 손을 흔드는 여유 과시

· 98년 11월 29일 : 전 씨와 5공 세력 10여명, 목포 보현정사에서 열린 '국난극복과 민족대화합을 위한 범회' 참석

· 99년 1월 31일 : 전 씨, 나가소네 야스히로 일본 전 총리 등 일본 정·재계 인사들의 초청으로 6박7일간 일본 방문

· 99년 3월 17일 : 전 씨, 5공 세력 20여명과 우면산 산행

· 99년 4월 4일 : 전 씨, 국민회의 김상현 고문과 골프회동

· 99년 4월 9일~12일 : 전 씨, 3박4일간 고향방문하고 '전직대통령 문화'의 필요성 제기

· 99년 5월 3일 : 전 씨, 연희동 집으로 기자들 초청해 '5공 세력의 정치 진출을 막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 99년 5월 8일 : 전 씨, 부산 금정산에서 산상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역 감정해소, 5공 인사들의 움직임과 관련한 야당의 비난 등에 대해 자신의 입장 표명

· 99년 5월 10일 : 허문도(전 문공부 장관)씨, 불교텔레비전 대표이사 선임 결정

■ 언론학살 주범 방송사사장?!

5공화국 출범 때 언론인 강제 해직과 언론사 통·폐합을 주도한 허문도(59) 씨가 지난 10일 불교텔레비전 대표이사로 뽑혔다. 이에 대해 언론·학술·시민·종교단체들의 강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는 10일 "허 씨는 퇴진해야하며, 5공 세력의 자금이 불교텔레비전에 흘러들었다는 의혹도 날날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노련(위원장 최문순)은 11일 성명을 통해 "언론 학살의 주범을 불교텔레비전 사장에 앉히는 것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불교텔레비전 이사회는 회의록 다시 열어 허 씨의 대표이사 선임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상임대표 김중배)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성유보)도 "불교방송을 5공 세력의 정치 선전장으로 만들 수 없다"며 "허 씨가 스스로 사장을 지을 내놓거나 허 씨의 사장 선임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불교언론대책위원회(위원장 진관) 또한 "허 씨의 등장을 좌시한다면 불교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전국적인

불교언론살리기 운동에 나설 것을 불교계에 촉구했다.

■ 5공 세력 정계진출 안된다.

전두환 씨는 지난 3일 자신이 직접 정치를 재개할 뜻은 없지만 '5공 세력'의 정치진출을 막아서도 안 된다는 뜻을 밝혀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지난 9일 양산의 천불사 법회에 참가해 감연까지 하는 어저구니 없는 행보를 보였다. 이날 감연을 마친 전 씨는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천불사를 떠났고 그 후 천불사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도시락이 배급되면서 천불사 경내는 시장바닥처럼 소란스러워지고 경내는 쓰레기로 엉망이 되었다고 한다. 전씨는 이제까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참회나 사과의 말을 한 적이 없다. 또한 현실적으로 일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 정치인들이 알아서 '회개'를 요청해 오고, 알아서 모시는 처지가 아닌가? 5공 세력이 버젓이 활보하는 것을 보며 허탈감과 배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5·18 문제가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 버리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진상을 날날이 규명해야 한다. 또한 종교행사 참석을 핑계로 궤변을 늘어놓은 행위를 좌시해서는 안되며, 학살자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회수하고 정치체계를 막아야 한다.

전세계 학살자들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칠레전투> <칠레: 지울 수 없는 기억> 배급

각 3만원, 전편(4편) 12만원

인권하루소식 독자, 제3회 인권영화제 특별회원, 민주노총 소속 노조 및 조합원에게는 4편을 10만원 특별가에 드립니다.

구입방법: 계좌입금→입금확인→택배발송(약 3일)

구좌: 국민 822-21-0276-824 / 농협 033-02-119388

/ 제일 110-20-342272(이상 예금주 서준식)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a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5월 20일(목)

제 137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대통령 강연회서 유가족 연행

서울교대 강연회에 학생들 강제 동원

한 유가족이 대통령 강연회에 참석하려다 경찰에 강제연행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15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강연회에서 박선영 씨(서울교대 85학번, 87년 학원비리 처벌을 요구하며 자결)의 어머니 오영자 씨는 전투경찰에 둘러싸여 강연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했다. 오 씨가 이에 항의하자 전투경찰은 오 씨의 팔을 비틀어 서초파출소로 연행한 뒤 강연이 끝나고서야 풀어줬다. 오 씨는 "대통령을 볼 생각으로 학교를 방문했으나 소란을 피운 적은 결코 없다"며 "웃지 못할 세상"이라고 한탄했다.

한편 서울교대측은 교수들을 통해

"강연회를 수업으로 대체하겠다"며 학생들을 강연회에 강제 동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찰과 학교측은 학교 안에 게시된 5·18 사진들을 철거하도록 압력을 넣었으며 강연회 당일 '대학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의 피켓을 압수했다. 이에 총학생회측은 학교와 경찰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다시 부는 강제철거 바람

갈곳없는 주민들 불안 시달려

날씨가 풀리면서 다시 강제철거 바람

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정릉4동 재개발지역에 사는 세입자들은 최근 구청으로부터 "자진 이주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를 집행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받았다. 정릉4동 재개발지역에는 현재 어린이와 노인 40여 명을 포함해 27세대 70여 명의 세입자들이 살고 있고, 2주전부터는 철거용역회사 직원 20여 명이 현장에 상주한 채 주민들의 동향을 살피고 있다.

세입자 18세대가 참여하는 '희망 세입자대책위원회'의 정덕래 위원장은 "조합측에서 임대아파트 입주를 제시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은 천만원에 달하는 계약금과 다달이 30만원 가까이 내야하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임대아파트 입주를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21일 성북구청 앞에서 '강제철거 중단'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기로 했다. 한편, 성북구청측은 관내 30개동 가운데 15개동에서 재개발을 시행 또는 예고하고 있으며, 예정대로 재개발이 마무리될 경우, 관내의 빈곤층 대다수가 성북구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할 형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경기도 부천시 오쇠동의 세입자들 역시 계속되는 철거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공항 인근에 위치한 오쇠동은 비행기 소음 공해가 심해 주거지를 숲 지대로 바꾸는 공사가 진행중이며, 대다수 주민들이 이미 지역을 떠났다. 그러나, 3개월치의 이주대책비(4인 가족 기준 5백만원)만으로 새 보증자리를 찾기 어려운 세입자 1백여 세대는 새로운 주거공간의 제공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이 지역의 공가(빈집) 철거는 거의 완료됐으며, 곧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생가에 대해서도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철거가 실시될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동티모르 평화와 자치 촉구

ETISG, 22일 '국제연대의 날' 제안

호주의 「동티모르-인도네시아 지원모임(ETISG)」은 오는 22일을 '동티모르-인도네시아를 지원하는 국제연대의 날'로 정하고, 세계인의 참여를 촉구해왔다. 지난해 5월 22일은 민주주의와 수하르토 퇴진을 촉구하는 인도네시아인의 항쟁이 시작된 날로, 수하르토의 퇴진은 동티모르 독립에 청신호가 되었다. 한편, 지난 5월 5일 유엔은 인도네시아의 24년 군사통치를 접고 동티모르인이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그리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인도네시아 군부는 억압과 공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어, 지난달만 해도 동티모르에서는 백여명 이상이 살해당하는 등 살해와 실종은 여전히 일상적인 일이다. 이러한 공포분위기는 동티모르의 독립을 결정할 국민투표를 무효화하고 지속적인 군사적 억압의 가능성을 드리고 있으며, 자카르타는 어찌됐든 동티모르 경제를 통제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

ETISG는 현 시기를 동티모르의 평화와 자치,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에 결정적인 시기로 보고 '국제 연대의 날'을 계획하게 되었다. ETISG는 인도네시아 영사관 앞에서의 촛불시위와 철야농성을 벌일 것이며, 한국의 인권단체들도 이에 동참할 계획이다.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보다 ①

'전쟁'에 대한 반성, '인권의 시대' 모색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대규모 평화회의가 열렸다. 이는 전쟁과 대량학살의 비극을 목도해야 했던 지난 한 세기를 반성하는 한편 전쟁이 없는 21세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데 모으기 위한 것이다. 국제 평화운동단체들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100여 개 나라에서 총 1만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전쟁의 근본 원인/평화의 문화 ②국제 인도주의법·인권법·국제기구 ③무력분쟁의 방지·해결 그리고 (평화적) 이행 ④군축과 인간안보 등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보의 새 개념, '인권'

우리에게 헤이그는 이준 열사를 떠올리게 하는 비극적 장소이기도 하다. 1907년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던 비극의 흔적이 한반도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가운데, 헤이그에서 열린 평화회의의 5일 동안에는 한국과 관련된 행사도 몇 차례 열렸다.

그 중 하나는 아시아-유럽 대안 안보 전략에 관한 워크숍으로 이는 내년 서울에서 열릴 아시아 유럽 정상회담(아셈, ASEM III)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 한국에서는 민족회의의 김창수 씨와 참여연대의 이대훈 씨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워크숍에서는 안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눈에 띄었다. 즉 군사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인권의 가치를 포함시키는 안보 개념, 그리고 국가의 소유물인 양 인식되는 안보 논의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것 등이 제시됐다. 또 필리핀의 진보적 학자 월든 벨로 씨는 "아시아 지역이 군사적으로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아시아 국가들 간의 다자간 안보 협력 체제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진행

됐던 워크숍의 후속작업으로 몇 가지 구체적인 행동이 제안됐는데 이는 ▲ 무기거래·무기판매의 구체적 동향과 이것이 인권과 평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작업 ▲미·일 신 가이드 라인 채택 등이 동북아시아 지역 평화에 불려올 위험성과 관련해 '대안적 안보'에 대한 회의 개최를 검토하는 것 등이었다.

동북아 비핵지대화 논의

이밖에 남한과 북한 그리고 일본의 사회운동 단체들이 함께 모여 '한반도·일본의 비핵지대화'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도 마련됐다. 일본의 평화운동 단체 '평화의 배'가 주최한 이 회의는 최근 미국과 일본 간에 채택한 신 가이드 라인에 대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운동이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서 제기되었다. 하지만 북한 쪽이 회의장 근처를 뚫는다 끝내 참석하지 않아 회의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했다. 회의를 통해 제안된 '한반도·일본의 비핵지대화' 구상은 ▲ 동북아시아 지역의 예상 가능한 핵 군사 경쟁이 초래할 인간적 재앙을 미리 방지하고 ▲ 비핵지대를 동북아 지역에 확대함으로써 전세계적인 핵 군축 운동에 동참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 쪽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남·북한 간 그리고 북·미간에 이미 존재하는 협정들만 당사국들에 의해 준수된다면 별도의 '비핵지대화' 선언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이미 핵을 갖고 있는 강대국들이 핵무기를 폐기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동북아시아 지역의 비핵지대화에 대해, "시민사회와 민중의 힘을 통해 국가를 움직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 다수를 이뤘다.

"미군기지 반대" 연대 과시

군사기지가 발생시키는 인권침해 문제 그리고 여성과 군대폭력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도 여러 차례 열렸다. 한국에서는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의 정유진 씨와 '새움터'의 김현선 씨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들 회의에는 한국 뿐 아니라 필리핀·오키나와 등 미군 기지가 주둔해 있는 지역의 여성들도 함께 참여해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강력한 연대를 과시했다. 또 아시아 지역에서 미군기지가 여성·아동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권의 시각에서 강하게 제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전쟁예방, 시민사회 개입 필수"

한편 이번 회의를 통해 참석자들은 최소한 한가지 중요한 결론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평화와 안보의 문제를 국가에만 맡겨둘 수 없다. 전쟁의 비극을 예방하는데 시민사회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또 유엔이 강대국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진정 전세계 민중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반성적 평가도 그 한 축을 이뤘다.

회의에 참석한 많은 평화·인권단체들은 후속작업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 소형무기의 불법 사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 ▲ 평화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한 국제 캠페인 ▲ 전쟁 방지를 위한 지구적 행동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한국 참가단 중 한 명은 한국이 시위집압 무기·소형 무기 등을 수출하는 국가인 만큼 국내에서도 소형무기가 갖고 있는 위험성을 알리면서 생산·수출을 반대하는 움직임을 만들어 가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인권보호에 큰 진전을 가져다 줄 국제형사재판소 기준을 한국정부에 촉구하는 제안도 있었다. 이들 제안에는 오랜 군사적 긴장을 경험한 입장에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사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와 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바탕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헤이그:이주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5월 21일(금)

제 137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바래구

외교용 인권보고서 이제 그만!

자유권보고서 심의 10월 예정

국내인권상황을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따라 검토할 시기가 다시 오고 있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 조약)'에 따른 한국 정부 제2차 보고서의 유엔 심의가 오는 10월로 예정되어 있다.

지난 90년 4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과 자유권 조약 가입을 시작으로 한국 정부는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인권 실태를 종합한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여 국제인권기준에 의한 검토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그 절차나 준비과정을 홍보하지 않았을뿐더러 관련 전문가와 민간단체의 의견을 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 독단적으로 국내인권상황을 국제무대에 알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자유권 보고서 심의와 아울러 각 인권보고서의 2차 제출시기가 지났거나 다가오는 시점(표 참조)에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드러난다.

자유권 조약에 관한 민간보고서를 준비하는 '민중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찬운 변호사는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비판받을 것은 비판받고 공유할 것

은 공유하여 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할 일"이라며 "사실상 국내비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가운데 정부의 2차 보고서는 1차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법령이나 제도만 홍보했지, 인권의 현실을 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각 정부부처가 앞다투어 마련한 홈페이지에서조차 정부가 제출한 인권보고서를 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사회 인지도가 낮고 관심이 적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인권보고서는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홍보에 그칠 수 밖에 없다.

한편, 사회권조약과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에 따른 2차보고서는 제출시 한마저 놓치고 있다. 사회권조약의 경우 2년 전에,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 보고서는 반년전에 제출돼야 했다.

이에 대해 조약관련 업무를 책임지는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자료 준비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취합하느라 늦어졌다. 꼭 기간에 맞춰야 하는 건 아니다"며 "빠른 시간내에 (보고서를) 내는 건 중요하겠지만 내용이 알찬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마지막 정부 관계자의 말처럼 내용이 알차야 한다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제사회에 인권치적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준비과정을 공개하고 사회 각 분야 전문가와 민간단체에 의견을 묻는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여성고용 불안, 위험수위 비정규직 1년새 2배 증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수가 작년에 비해 두배 이상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여노협)는 99년 1월부터 3월까지 '평등의 전화'와 여성실업대책본부에 접수된 상담사례와 여성고용실태조사 결과를 묶어 '99년 1/4분기 여성고용 동향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개월 간 평등의 전화에 접수된 총 470건의 사례 중 고용불안 상담이 245건으로 전체의 85.3%를 차지하였다. 이는 작년 같은 시기 131건에 비해 급증한 것이다. 또한 고용불안 상담 245건 중 임금금체불 61.6%, 해고 18.4%, 부당노동행위가 5.3%를 차지하였다.

한편 한여노협 선전부장 배진경 씨는 "악화되는 여성고용 현실 개선을 위한 정부계획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하였다.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보다 ②

'나토 폭격' 비난

"전쟁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봅시다. 꿈도 함께 꾸면 곧 현실이 됩니다" 전쟁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수천 명의 평화운동가들이 모인 가운데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평화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가 열린 도시 헤이그는 정확히 100년 전인 1889년 제1차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됐던 장소로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평화 깨는 강대국 무기수출

1차 만국평화회의는 군비 경쟁을 중지하고 특정한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며 국제 분쟁의 방지 및 평화로운 해결을 촉진하는 방안들을 논의할 국제회의의 지속적인 개최를 결의했고 상설중재재판소의 설립을 그 성과물로 남기기로 했다. 하지만 1914년 세계대전 발발로 이러한 노력들은 수포로 돌아가고 지난 한 세기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끊임없는 국지전·대량학살로 얼룩지고 말았다.

백년 전에 열렸던 제1차 만국평화회의와 달리, 이번 회의는 정부가 아닌 평화운동단체들에 의해 준비돼 더욱 주목을 끌었다. 애초에 1989년 비동맹 국가들이 유엔 주최의 국제평화회의를 제안했으나 안전보장이사회의 영구 회원국 중 몇 나라가 이를 반대해 성사되지 못했다. 특히 평화와 안보는 안전보장이사회의 배타적 관할영역이라고 미국이 고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운동 침체 드러나

평화회의를 압도한 주제는 역시 현재 발칸반도에서 진행 중인 전쟁에 대한 것이었다. 나토의 폭격과 밀로소비치 대통령의 인종청소에 대한 비판 간의 비중이 논란의 여지를 남기긴 했지만 당장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였다. 이러한 반응은 7주째 접어든

나토의 공격이 난민과 더불어 시민 희생자만 증가시키고 있는데 따른 당연한 결과다. 개막식에서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호세라모스 오르타 씨는 "나토의 군사행동에 참가하는 나라들 대부분이 인도네시아에 계속해서 무기를 팔았던 나라들이기도 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근본적으로 이번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나토의 공격을 소위 '국제 경찰력'으로 자신의 역할을 재규정하려고 하는 시도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는 시각 또한 두드러졌다. 애초에 나토의 탄생 목적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에 한정돼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토의 최근 움직임은 유일하게 국제법적 중재 권한을 갖는 유엔의 역할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것으로 비난받기도 했다.

5일 동안의 회의에서 나토의 공격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발했던 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반면, 아쉬움을 표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우선 발제자들 중에 유고슬라비아로부터 온 사

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 지적됐다. 나토의 공격을 비난하는 성명서 발표나 집회가 참가단체들 가운데서 산발적으로 이뤄졌을 뿐 전쟁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통일된 행동이 전혀 조직되지 못했다는 점 또한 강한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는 탈냉전 이후 10년간 침체됐던 평화운동의 현재를 반영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가졌다.

'나토공습' 국제법 논란

한편 평화회의와 비슷한 시기에, 헤이그 평화 궁전에 위치한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나토의 국제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전개돼 관심을 모았다. 이는 유고슬라비아의 제소에 따른 것으로 유고슬라비아 측 변호인들은 "나토의 전쟁목적은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있으며 평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영국·독일·캐나다 등 10개국의 변호인들은 이 사례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사법권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이들 주장의 근거는 유고슬라비아가 유엔의 회원국이 아니라는 데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심리결과를 2주 후 발표할 예정이다.

[헤이그: 이주영]

만화사랑방



이동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보안관찰청구에 이례적 기각 법무부 "활동 노출돼 관찰 실익 없다"

법무부가 검사의 보안관찰청구를 기각한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 나왔다. 법무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위원장 최경원)는 지난 4월 19일 광주지검 문찬석 검사가 보안관찰대상자인 방규근 씨에 대해 낸 보안관찰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4월 29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보안관찰청구를 기각했다. 방 씨는 이러한 사실을 지난 20일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심의위원회는 의결문에서 "방 씨가 출소 후 기간이 일천하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지만 인권운동 등과 관련한 활동이 노출돼 따로 관찰할만한 실익이 크지 않고, 99년 2월 25일 사면·복권된 점 등으로 볼 때, 현재로서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방 씨는 89년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7년 동안 복역하고 출소했다. 그후 보안관찰대상자로 지정된 방 씨는 "보안관찰 적용은 부담하다"며 보안관찰대상자 신고를 거부, 지난해 법원에서부터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번 조치를 전향적이라고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 방 씨와 같이 보안관찰청구 심사를 받은 이윤정 씨(94년 구속, 회합통신·기밀누설죄)는 현재 '가족과 성문제 상담소' 대표이사과 조선대 사회교육원 강사를 겸하는 등 공개적인 대중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씨에 대한 보안관찰 청구를 받아들였다. 또한 지난 3월에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정화려, 박동은 씨 역시 대학원에 다니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된 직업을 갖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받았다. 방 씨는 "내가 7년을 살았는데 법무부가 정말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려 한다면 최소한 7년이하의 징역을 산 사람들은 모두 보안관찰에서 제외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번 결정은 보안관찰법이 제법방지를 위한 법이 아닌 한 사람의 인권을 억압하는 수단임을 똑똑히 보여준 실례"라고 말했다.

불법사찰 증거 공개

국보철연대회의, 경찰청 앞 집회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 해결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1일 경찰청 앞에서 '반인권

적 집회·학원 사찰 규탄대회'를 가졌다.

연대회의는 지난 5월 15일 용산역에서 개최된 99년중대회에서 사찰중이던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및 용산경찰서 보안과 소속 형사 4명을 붙잡았으며, 그들에게서 망원렌즈가 부착된 카메라와 사찰 내용을 기록한 수첩, 4개조 12명으로 편성된 체중요원배치표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가 압수한 수첩에는 단국대학교 한총련 대의원들의 사진 및 휴대폰번호, 데이콤 노동조합에 대한 사찰 내용 등이 기록돼 있었으며, 촬영된 필름에는 집회에 참가한 활동가의 얼굴이 확대촬영돼 있었다.

연대회의는 이날 집회에서 "경찰이 사진·비디오 촬영, 도청, 미행 등의 불법적인 방법들을 이용해 노동운동가와 학생운동가 등을 처벌하고 있다"며 "대학과 노동조합, 집회장 등에서 경찰들이 공공연히 활개를 치고 다니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또 "김대중 정부는 모든 사찰행위를 중단하고, 사찰책임자들을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행사와 동정

- 'UR에서 IMF, 밀레니엄라운드까지' 워크숍
 - 5월 25일(화) 오후 2~6시 / 송실대 사회봉사관
 - 주최: 사회진보연대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02-886-2853)
- 해고·실업자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 5월 25일(화) 오후 3시 / 의보노조 지하강당
 - 주최: 전국·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지원대책위원회 / 민주노총
- "일미 신가이드라인과 한반도 위기" 심포지엄
 - 5월 25일(화) 오후 3시~6시 / 세종문화회관 4층 소회의실
 - 강연자: 리영희 교수, 쯔와 게이요(일본부인회 회장)
 - 주최: (사)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02-2275-4860)
- 여성성애 행동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 공청회
 - 5월 26일(수) 오후 2시 /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104호(대강당)
 - 주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2-521-5364)

1999년 5월 22일(토)

제 137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보다 ③

'코스보에만 전쟁이 있는 건 아니다'

발칸 반도에서의 전쟁이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텔레비전 화면을 채우는 요즘, 사람들은 그것이 현재 지구상에 진행 중인 유일한 전쟁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이보다 참혹하다. 현재 진행 중인 무력분쟁은 무려 30여 개를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무력분쟁이 발생하는 지역 대부분은 제 3세계 국가라는 점과 유럽의 옛 식민지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지나치게 낮다.

잊혀진 땅, 죽어간 사람들

이를 반영하듯 아프리카에서 온 평화회의 한 참가자는 호소했다. "아프리카에는 수없이 많은 밀로소비치가, 피노체트가 있습니다. 시에라 리온·콩고 민주공화국·앙골라·이디오피아·메리트리아·수단 ... 하지만 아프리카는 잊혀진 땅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안에 평화와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합니다"라고.

앙골라 한 나라에서 발생한 난민의 숫자만도 전체 1천 150만 인구 중 150만 명, 코스보에서 한 해 동안 2천명이 목숨을 잃은 반면 앙골라에서도 1994년 한 해 동안 20만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확인 시켜준다. 하지만 올해 유엔은 평화유지의 역할을 포기한 채 앙골라로부터 철수를 단행했다.

이렇게 낮은 관심은 냉전 종식 이후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전략적 이해가 사라진데 기인한다고 지역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리고 '알바니아계 소수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목하에 진행된 나토의 군사행동을 우선이라고 꼬집는다.

제 3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력분

쟁에 대한 관심의 결여는 헤이그 평화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 아쉬움을 자아냈다. 대표적인 예로 발칸 지역에 대한 회의가 4개나 잡혔었던 반면, 다른 지역에서 진행중인 무력 분쟁에 대한 회의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또한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평화운동을 하는 제3세계 참가자들의 수도 전체 숫자에 비해 지나치게 적었다. 이와 관련, 회의를 조직한 단체들이 모두 유럽과 미국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총성이 있는 곳에만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다.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주제 중 하나는 전쟁의 근본원인이었다. 이에 많은 이들은 전쟁의 근본원인으로 경제의 세계화를 지적했다.

인도의 운동가 반다나 슈바 씨는 폐막식에서 "다국적 기업에 기반한 경제의 세계화가 민중들의 삶 속에 매일 매일의 전쟁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라틴 아메리카의 한 인권운동가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가 초래한 심각한 불평등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의에 점점 더 익숙해지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전쟁에 대한 보다 넓은 이해를 요구한다. 즉, 총성이 들리는 곳에만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불평등한 무역·높은 실업·열악한 노동조건에 의존하는 수출주도 경제 등, 이 모든 것이 민중들에 대한 전쟁이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과 국제금융기구가 보이지 않는 전쟁의 수행자들이다.

개막식에서 동티모르의 독립운동가 호세 라모스 오르타 씨는 "제3세계에서의 전쟁 위협은 주변 국가들이 아니라 내부의 빈곤으로 온다"며 가난한 국가들의 외채 탕감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나토 회원 국가들이 지출하는 엄청난 군사비를 감안할

때 전혀 무리한 요구로 들리지 않는다. 나토 회원국들이 1997~98년 2년 동안에만 군사비용으로 4천7백억 달러를 지출한데 비해, 유엔이 발전 프로그램에 드는 비용으로 추산한 액수는 90년대 통틀어 1천537억 달러에 불과하다.

위협받는 땅과 물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 또한 전쟁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이는 많은 선주민들(Indigenous Peoples)이 과거 대량학살로부터 현재 문화적 억압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땅과 물 역시 군사화·해지대회에 끊임 없이 시달리고 있다. 뉴질랜드 마우리족의 지도자 겸 평화운동가인 파울린 탄지오라 씨는 폐막식에서 "인민들의 자결권(Peoples' Self-Determination)이 존중되기 전에 진정한 평화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헤이그 : 이주영 >

한총련 체포영장 기각

대구지법 "증거자료 미비"

한총련 미탈퇴 대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대거 기각되거나 반려됐다.

21일 대구지방법원 강태훈(제19민사부) 담지판사는 대구지검 공안부가 김아무개(경북대 사대 학생회장) 씨 등 대구·경북지역 제7기 한총련 대의원 1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로 청구한 체포영장을 모두 기각 또는 반려했다.

강 판사는 영장을 기각, 반려한 이유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한총련의 이적단체 판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총련 미탈퇴 대의원에 대해 법원이 '증거자료 부족'이라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는 법원 내에 무리한 국가보안법 적용에 대한 견제 흐름이 있음을 보여준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a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5월 25일(화)

제 137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불법도청 그냥 당해야 하나

지하철 노조 도청의혹

최근 파업 사태를 겪으며 당국의 집중한 감시대상이 되었던 지하철 노조는 노조에서 사용하는 전화가 도청을 당하고 있다는 심증을 갖고 있지만, 물증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청을 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의혹을 해소하거나 방지할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하철 노조 승무지부의 한 관계자는 "파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전화 통화상태가 안좋아지기 시작했으며, 근래에도 전화를 걸면 1초 정도 전화가 끊어졌다가 다시 신호음이 들리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파업 당시 명동에서 농성중이던 지도부가 '현장으로 몇 명을 보내겠다'고 알려오면 곧바로 경찰병력이 증원돼, 도청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회사 간부에 전화도청 의혹을 제기해왔지만, 회사측으로부터 "우리는 모르는 일이며, 경찰에 알아보라"는 대답을 들었을 뿐이다.

지하철 노조 뿐 아니라, 여러 사회단체 등에서도 도청 의혹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의혹을 해소할 장치가 없는 현실이다. 얼마전 영남위원회 사건에서 보듯 경찰의 불법도청 행위는 법원에 가서야 비로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법도청행위를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재개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다.

조시현(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법원 이외의 방식을 통한 통제장치의 마

련이 질실하다"며 "국회 감사를 통해 감청(법원의 영장에 의한 도청)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국회에서 도·감청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긴급 감청의 허용시간을 줄이는(현행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당시 정부가 제출한 통신비밀보호법안에 대해서도 도청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수단이 없다는 점 등이 지적된 바 있다.

징벌방 그대로 돌건가

광주교도소 단식투쟁

징벌방 개선 등 교도소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광주교도소 양심수들이 11일 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광주전남양심수 후원회(상임의장 기세문)는 지난 14일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오균(98년 순천대 총학생회장) 씨와 채병욱(99년 조선대 부총학생회장) 씨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데 이어, 18일에는 김광훈(98년 전남대 자연대학생회장) 씨 등 3명이, 24일 광주교도소 양심수 20여명 전원이 단식농성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광주교도소 징벌방은 가로, 세로 각각 1.5m로 누울 수 없을 정도로 비좁아 벽에 기대어 잠을 잘 정도이며 창문 또한 이중창으로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로 알려져 있다. 이에 소내

재소자들과 인권단체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아 교도소측은 지난해말 징벌방의 개선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4월말 현재 징벌방이 변함없이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심수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단식 11일째인 정 씨는 탈진증세를 보이는 등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이나 소측에서는 정 씨의 외부진료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소측은 단식중인 양심수들과의 면담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차별 담은 식품위생법

남자 접대부만 안돼

지난 18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성차별 조항이 담겨있어 여성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시행령안 제 42조 5호로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서 '남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자리를 함께 하여 술을 마시거나 술을 마시는 것을 도와주거나 또는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시행령 제 8조에서는 "유형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부녀자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유형접객원을 여성으로 공식화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 사무국장 유경희(43) 씨는 "유형접객원(접대부) 고용금지 조항은 환영하지만 남성으로 국한시키는 것은 명확한 성차별이며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는 남녀평등과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문제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20년 경력교사 자살

교육 황폐 고발 유서 남겨

24일 새벽 전교조 소속 전창수 교사(44)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 교사는 <존경하옵는 대통령 각하>라는 제목의 유서를 남겼다.

"저는 교육현장에서 20년이 넘게 근무하면서 교단의 무사안일을 바로잡고 학생을 위하여 바람직한 일을 해보려고 전교조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지금도 확신을 갖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장경쟁 위주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전초전입니다. 과도한 시장경제 논리에 대비해 나이든 교사 1명을 내보내면 젊은 교사 2-3명을 쓸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정년단축을 실시하였으나, 과연 교원 수급정책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던 일단의 행정관료들의 말을 듣고 정책을 수립한 교육부는 지금 무슨 할 말이 있는지요... 교직은 전문직이라고 하면서도 언제 어느 때 전문직으로 대접해주었는지요. 지금 당국은 언론과 결탁해 교사들을 무능하고 비리의 온상인양 내몰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일부 시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의 교사들은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꼭 그렇게 매도하여야만 정책당국자의 생각대로 교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폭로성 사건 현장들은 이제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교육과 교원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사건적으로만 매도할 것이 아니라 신중한 자세를 취하여 교원전체의 명예와 교원의 실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사와 제자 사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으로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이 신뢰감마저 상실되어 불신이 팽배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존경하옵는 대통령 각하
저희들이 부르짖는 소박한 꿈들을 모른체 하지 말아주시시오.

비현실적인 과도한 경제논리에 의한 시장경쟁위주의 교육정책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전국의 40만 교육자 여러분 우리는 참교육에 힘을 쓰면서 학생들에게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단에서만 죽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한 용기를 보여야 합니다. 제 한 목숨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심어 주었으면 합니다."

전 교사의 죽음을 접한 전교조는 24일 "전창수 선생님을 죽음으로 내몬 교육현실과 사회현실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창수 선생님은 위기에 선 우리의 교육현실과 전교원의 심정을 대변한 것이요, 우리시대 교사로서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죽음으로 응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일부 언론이 교인의 죽음을 두고 마치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처럼 유도하고 있는 보도태도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고 밝혔다.

주간인권호름

(99년 5월 17일-5월 23일)

- 1. 인간 생명은 귀한 것**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지를 중점사업화 하겠다고 밝혀(17일), 서명운동 차원을 벗어나 사형수 무기감형, 사형집행 유예 등 현실적 요구기로
- 2. 광주에 광주에만 머물라**
5·18 민주화운동 19주년, 국가기념일 지정 2년이 지났으나 광주에서만 공식행사, 국가유공자 지정 지연(18일)
- 3. 과거청산 없는 화해 그만둬라**
대구지역 시민단체, "국민적 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기념 사업에 국가 예산 지원 반대" 성명(19일), 4·19 관련 4개 단체와 3개 역사연구단체 성명, "잘못된 과거에 대한 청산 없이 화해란 있을 수 없다"며 박정희 기념관 지원 철회 요구(20일), 12·12 주역 5명 퇴직금 지급판결로 모두 6억6천만원 되돌려 받게 돼(19일)
- 4. 언제 풀려주려나**
석탄일 모범재소자 1240명 가석방, 양심수는 포함되지 않아(21일)
- 5. 북한을 압박하라**
미 하원의 대북 강경파 의원들, '99년 북한위협 감소법안' 제출, 대북 지원 예산집행과 식량지원의 요건 강화 및 탈북자 지원 3천만 달러 요청(19일)
- 6. 또 교내 총기 난사, 참담한 미국**
콜롬비아 고등학교 총기난사로 13명 사망한지 꼭 한 달 만에 미국 조지아주 헤리티지 고등학교에서 2학년생이 권총 발사하여 적어도 6명 부상, 미국 상원 총기규제 강화법안 통과(20일)
- 7. 한총련 체포영장 남발 제동**
대구지방법원 강태훈 판사, 대구지검 공안부가 대구·경북지역 제7기 한총련 대의원 1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체포영장을 '증거자료 부족'을 이유로 모두 기각 또는 반려(21일)
- 8. 보안관찰 청구 이례적 기각**
법무부,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간첩죄로 복역한 방양균(서경원 전 의원의 비서관) 씨에 대해 광주지검이 낸 보안관찰 청구 기각, 방 씨의 인권운동 등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보안관찰 실의 없다고 밝혀(23일)
- 9. 고엽제 피해 미국이 배상하라**
국방부에 따르면 해외참전용사전우회는 지난 1월 18일 미 정부를 상대로 파월 한국인 고엽제 피해자 1만8백여명에 대한 보상요구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23일)

인권
시평

박정희 평가는 인권탄압 전모 밝히기부터

정연순(변호사)

개인적인 용서일 수 있나?

김대중 대통령이 13일 경북도 행정개혁 보고회의 참석을 위해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관계자 40여명과 만찬을 함께 하며 "박정희기념관 건립을 비롯한 기념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의 기부금 모금을 허용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신정권의 최대의 피해자라고 주장되는 사람 중 한명인 김대중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박정희를 용서하는 것은 성직자의 설교에서나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감동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서는 매우 혼란스럽고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김대중 씨는 현직 대통령이다. 개인적인 차원과 공적인 차원에서의 언동이 가지는 의미를 혼동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그가 이를 혼동하였을 리도 없다. 그가 지역감정을 극복하고 내년 총선에서 확실한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지역감정 해소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 역사와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잘못으로 기록될 것이다.

어떤 사람에 대한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하여는 이를 평가하는 사회가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박정희는 비록 죽었지만 우리에게 기념해야 할 대상으로 역사 속에 남아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아직도 현실 속에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존재이다. 박정희 신드롬이라는 말이 보여주듯 박정희의 철학과 인간관을 따르며 이를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집단의 형태로 박정희는 존재한다. 그 집단은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무시무시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사회는 그가 행한 인권탄압의 잔

재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적 원칙을 무시한 독재정치,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해졌던 각종 고문과 언론출판의 자유등 각종 기본권에 대한 탄압, 지역감정의 조장, 천박한 자본만능주의 등의 악습은 지금도 우리 사회구석구석에 은존하여 있다. 박정희는 5공을 통해, 6공을 통해 계속 살아왔으며 우리 사회가 불안정하나마 청산의 역사를 이야기 시작하는 지금도 견고하게 버티고 있다.

살아있는 불의의 세력에 면죄부

박정희 유신정권의 또 다른 이름인 5,6공은 불안정하나마 현실의 법정에서 평가를 받았지만 박정희와 그 시대의 부정의는 현실 속에서 평가되고 부정적인 측면이 청산된 적이 없다. 그러나 박정희 시대는 5,6공에 견주어 볼 때 그 폭력성이나 반민주성 그리고 반인권성에 있어 결코 뒤지지 아니한다. 박정희 시대에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사건은 지금까지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 상당수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박정희가 법을 무기로 각종 인권탄압법률을 제정하여 한쪽은 그 법률의 노예로, 한쪽은 항거자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정신분열증에 가까운 고통을 주고 법을 불신하게 만든 것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 박정희야말로 김대통령의 발목을 대통령이 된 후에도 꼭 잡고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지역감정의 조장자이다. 이러한 박정희의 불의와 인권탄압에 대하여는 단 한번도 사법적 평가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직시된 바가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후의 아무런 원칙도 정한 바 없이 박정희와 화해를 청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청산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시대의 불의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며 박정희와 더불어 인권탄압을 행하였던, 현재에도 살아 있는 불의의 세력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 김 대통령은 박정희 시대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고 하였다. 개인적으로는 그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것 하나하나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굳이 그러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끼리 그 장을 만들도록 내버려두면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이를 하지 못하였겠는가. 역사와 국민의 심판이 엄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를 엄두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며, 박정희의 공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그 인권탄압의 진상을 밝히자는 논의가 함께 있게 됨을 두려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먼저 나서서 정부의 이름으로 긍정적 측면을 이야기하자고 앞선다면 진실은 감추어지고 일방적으로 과장되고 미화된 박정희의 모습만이 언급될 것이다. 반드시 그에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하여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공식적 판단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그가 저지른 더 큰 불의와 인권탄압에 대하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인권 침해역사관부터 세워야

만약 김 대통령이 개인적인 차원이나 정략적 목적에서 박정희와의 어설픈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역사 발전과 인권존중의 시대를 열기 위한 차원에서 박정희 시대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기념관의 설립에 앞서서 할 일이 있다. 정부는 박정희 시대와 그 뒤를 이은 군부독재시대에 정권의 이름으로 저질러졌던 각종 인권탄압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마치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 시대를 반성하는 것처럼 인권탄압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다시 되풀이되어선 안된다는 경고를 담은 인권침해역사관 내지 박물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a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5월 26일(수)

제 137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CCTV카메라 노동감시 악용소지

병원 경영진이 폐쇄회로TV(CCTV)를 무더기로 병동에 설치한데 대해 노조측이 환자와 가족의 사생활 침해와 직원 감시를 이유로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대구 신암동에 위치한 베네딕트 수녀원 소속의 파티마 병원은 병원건물을 증·개축해 지난 15일 축성식을 가졌다. 파티마 병원 노조가 지상 10층, 지하 3층으로 이루어진 신병동의 복도와 접수창구, 식당 출입구 등에 총 33

개의 CCTV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확인한 것은 이즈음. 이에 노조는 단체 교섭기간인 지난 21일, CCTV 감시 문제를 제기했으나 병원 경영진은 환자보호와 도난감시를 이유로 노조의 제거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파티마 병원 노조위원장 장미경(32) 씨는 "CCTV 감시 아래 근무하는 것을 천주교 재단의 병원으로서까지 무감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이후 다른 병원 사업장까지 더욱 확산될 수 있다"

"예술의 전당에 기보고 싶어요"

장애인 횡단보도 설치 서명운동

"여기서 전철역까지요? 최소한으로 잡아도 1시간 30분 정도. 하지만 얼마나 걸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처에 사람이 있으면 괜찮지만 만약 밤이라도 돼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면 하루가 꼬박 걸릴 수도 있거든요."

25일 오후 5시 반, 예술의 전당 앞에서는 '예술의 전당 앞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이 펼쳐졌다. '소외된 약자의 권리 되찾기'란 플래카드 밑에서 "서명하세요"라고 외치던 박성현(32세) 씨. 선천성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휠체어에 몸을 의지해 생활하는 그는, 예술의 전당에서 남부터미널 전철역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예술의 전당에 처음 와본다고 했다. 예술의 전당 앞엔 횡단보도는 없고 지하도 뿐이어서 휠체어를 타고 혼자 지하도를 건너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녹색교통운동의 조사에 따르면 횡단보도대신 지하도와 육교가 설치돼 있어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보행이 불편한 곳은 서울시내만도 21곳. 따라서 지난해 9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경철)와 녹색교통운동 등의 단체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보행권 보장을 위해 '21곳에 횡단보도를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서울시에 접수했다. 거듭된 민원 덕분에 지난 4월 신촌, 광화문 사거리 등 6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됐지만 시청 앞 등 15개 장소는 '교통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횡단보도 설치가 불허됐다. 예술의 전당 앞도 불허된 곳 중 한 곳.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등은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 어느새 받은 서명만도 8000여분. 이들 단체는 1만명의 서명이 모이면 다시 한번 서울시에 민원을 낼 계획이다. 예술의 전당이 장애인들의 전당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며, "이 사실을 인권단체와 언론사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정보화사업단, 사회진보를 위한민주연대 등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작업장 감시모임은 작업장에 도입되는 정보통신기술이 반노동자적 감시와 통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작업장감시모임의 장여경 씨는 "CCTV가 도입될 때 노조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를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미국의 사례

98년 12월, 뉴욕시민권연합(New York Civil Liberties Union)은 비밀감시카메라가 증가하고 있다며 '당신이 어디에 가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뉴욕의 맨하탄 시내에만 2천3백여 개가 넘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 단체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공감시의 남용을 방지할 규제법안을 마련할 것을 당국에 요구했다.

하지만 뉴욕시는 감시카메라의 설치가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를 예방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며 '공공장소에서 사생활의 권리는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카메라 사용에 법원의 명령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카메라가 범죄 예방 도구로 정당하게 사용된다 할지라도 제약 없는 감시의 확산은 사생활의 자유를 위협한다'며 '익명성을 보장받을 권리와 정부에 의해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비판적 견해가 맞서고 있다. 또한 '우리가 기술을 조종해야지, 기술이 우리를 조종하게끔 해서는 안된다'며 '카메라는 이미 여기 있다. 어떠한 공적 논쟁이나 규제가 없다면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가 질식된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미·일 신가이드라인 통과 한반도 전쟁터화 우려

지난 24일 일본 참의원에서 미일방위 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일본 자위대는 이른바 '주변사태' 발생을 빌미로 일본영토 바깥에서 군사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됐고, 일본 내 공항, 항만 등의 시설과 민간기업 등도 전쟁에 가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명시돼 있던 전쟁의 주 전장은 한반도가 될 것이 명백하다.

한반도를 불바다로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는 2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미일신가이드라인과 한반도 위기' 심포지엄에서 "미일신가이드라인은 일본의 군사력이 이제 전세계적 활동범위를 갖고 아시아 최강의 군대로 발돋움하는 법적 보장에

해당한다"며 "미국의 북한 공격시 일본은 그 보조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리 교수는 또한 "미국의 기본적 전략구상은 북한을 완전 고립화시켜 북한을 자극한 뒤 결국 북한이 핵무기 또는 미사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며 북한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려는 미국의 패권주의를 비난했다. 이어 시게토 미야코 일본부인회의 부의장은 "거품경제가 파탄난 90년대 들어 자긍심을 잃어버린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국수주의가 만연하고 있다"며 "한국인에 대한 차별과 멸시를 밀바탕에 깔고 있는 일본 국수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전쟁에로의 길도 막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공동성명

을 통해 "신가이드라인의 실행 여부가 전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이는 한반도를 코소보와 같이 강대국에 의한 전쟁발발지역으로 만들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동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하면서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을 재촉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시민사회의 저항

이러한 일미방위협력지침에 대해 일본 내 민간단체들의 반발과 저항도 잇따르고 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김윤옥 씨는 "최근 일본에서는 일본 항만노조원 등 5만명이 모여 일미방위협력지침에 반대하는 시위를 가졌다"며 "이미 관련법안은 통과됐지만, 일본 시민사회는 앞으로 일미방위협력지침에 대한 시민불복종 운동을 계속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일본 항만노조와 공항노조 등은 '주변사태' 발생을 빌미로 미군이 일본 내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할 때, 항만과 공항 사용을 거부 또는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한반도는 미일의 손에

24일 일본 국회에서 통과된 일미방위 협력지침 관련 법안에 따르면, 일본은 이른바 '주변사태' 발생으로 인해 미군이 출동할 경우, 언제든지 이를 지원하도록 돼있다. 주변사태는 △일본 주변지역에 무력분쟁 발생한 경우 △주변지역에서 무력분쟁 발생이 임박한 경우 △정치체제 혼란 등으로 발생한 피난민이 일본으로 대량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어느 나라의 행동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평화에 대한 위협 또는 침략행위로 간주하고 제재할 경우 △이웃나라 내란, 내전이 순수 국내문제에 머물지 않고 국제적으로 확대될 경우 △주변지역에서 무력분쟁 자체는 멎었지만 여전히 질서 회복 등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 등 6개 유형이다. 결국, 직접적인 무력분쟁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미국, 일본의 판단 여하에 따라 한반도가 언제든지 전쟁터로 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새로나온 책

「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국가보안법 국제캠페인팀/도서출판 사람생각/272쪽/8천원

스스로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이고, 또 '인권대통령'으로 불리길 바라는 김대중 대통령 집권 1년간의 국가보안법 적용과 사상탄압의 실상은 어찌 했을까?

지난해 국가보안법 제정 50주년을 맞아 국내 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국제캠페인팀은 「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펴냈다.

인권단체 활동가와 박사과정의 연구생, 변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4개월 여의 자료수집과 집필, 검토과정을 거쳐 발간된 「국가보안법 보고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입장 변화 △김대중 정부 1년의 국가보안법 적용 및 구속 실태 △준법서약제의 반인권성 △양심수 석방 문제 △보안관찰법 △유엔 자유권조약 위원회와 국가보안법 등의 내용을 통해 일련의 사상탄압체계와 그 실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보고서를 읽고 난 독자라면, 김대중 정부가 지난 1년간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보여준 모습은 지극히 실망스러운 것이었으며,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인권신장을 바랬던 국민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 국제캠페인팀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가협,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이 참여하고 있다. ◆ 구입문의: 사람생각 02-3675-4096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5월 27일(목)

제 137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국민 모두가 범칙자냐?

주민등록·지문날인 계속 강제

우리 국민 모두는 계속 '잠재적 범칙자'로 취급받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정부는 27일부터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작업에 들어간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2000년 3월 31일까지 현 주민증을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대체하는 작업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사회진보연대는 26일 성명을 내 "박정희 군사정권이 도입한 주민등록제는 국가에 의한 국민 감시통제장치로 이용되면서 수많은 인권침해 시비를 일으켰다"며 "정부의 주민등록증 갱신 사업은 기존 제도의 문제를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자화된 형태로 전 국민의 지문을 계속 채취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외국인의 경우 지문날인은 범법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채취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일본은 한일간의 외교분쟁까지 일으켰던 제1한국인 지문날인제를 폐지한 바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또 "새 주민증에서 호주와 병역사항 등이 삭제되긴 했으나, 이 또한 한 가리고 아웅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에서 작성·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표에는 세대번

호 등 141개의 항목이 개인별로 작성되어 있고, 이중 78개 항목이 이미 산화되어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현행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김기중 변호사는 '호적제도를 중심으로 주민등록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즉, 현행 호적제도를 부부 중심으로 편제하고 부부 중심의 호적에 주소를 덧붙이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주민등록제를 폐지하거나 주민등록번호없이 주소신고만으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간소화하자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촉구

종교계 지도자 성명

26일 조계종, 대한성공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7개 종단의 종교지도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사회 불안정의 근본원인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부재에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통해 인간다운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안심사를 미루고 있는 국회가 하루빨리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종전 65세 이상 노인, 18세 미만 아동, 임신부 등으로 제한되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소득이 최저생계 못 미치는 저소득층'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도모하는 법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노동부와 기획예산위원회의 반발 때문에 아직껏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주민등록제'

우리의 주민등록제도는 신분등록제와 주거등록제, 국가신분증제가 혼합된 제도다. '신분등록제'는 가족관계 및 출생, 사망 증명을 목적으로, '주거등록제'는 행정적 통제의 급부 내지 통계를 목적으로 한다. '국가신분증제'는 국민 또는 주민임을 단일한 형태의 증명서를 통해 증명하도록 국가신분증을 발행하는 제도다. 외국의 경우, 우리처럼 위 제도 모두를 통합해 사용하는 예는 드물다. 또, 국민통제 목적보다는 '복지수급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주소와 관련되는 '경력'과 '의무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 독일

신분등록은 신분법에 의해, 주거등록은 각 주법에 의해, 국가신분증은 신분증명법에 의해 규율된다. 각각의 제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고유식별번호는 부여되지 않는다. 1971년 전국민 개인식별번호의 도입과 주거등록전산망 연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이 의회에 상정됐으나, 헌법상 기본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처리되지 않았다.

◆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

신분등록제에 주거등록제를 결합하고 개인식별번호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주민관리체계는 주로 사회복지와 관련해 개인에게 다양한 이익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 개인의 신상자료가 정부의 활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 및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자료인용: 「국가의 국민관리체계와 인권」(김기중 변호사)

<공청회> 민주노총 해고자복지투쟁 특별위원회 해고·실업자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해고실업자 증가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공청회가 전해투 주최로 지난 25일 의료보험노동조합 지하강당에서 열렸다. 정부가 벌이고 있는 실업대책의 문제점과 해고노동자들의 실업 반대투쟁 /복직투쟁 /구조조정중지 투쟁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또한 5월 이후의 조직화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편집자주>

자본의 공세, 구조조정

채만수(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

구조조정은 ▲과도한 부채에 따른 자금 압박 ▲경쟁의 격화 및 과잉생산에 의한 이윤율의 감소 ▲사업 확장 등의 이유와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반성적인 과잉생산이 자본을 압박하기 때문에 자본은 이윤율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동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사회적으로 구조조정, 대량해고, 불안정 고용으로 나타난다. 또 과학기술혁명은 노동배제적 생산방법(공정자동화)과 원거리 생산방법(현지공장)의 발전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밀접하게 연관된 이중의 구조조정을 낳았다.

공장을 폐쇄하고 해외로 이동시켰다는 협박만으로도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조스팽 정권이 주당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하는 입법을 추진했을 당시 자본가의 협박수단도 자본 및 공장의 해외 이전이었다.

실업문제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직접생산자가 생산수단과 어떤 관계도 갖지 못함으로써 생활수단을 획득할 길이 봉쇄 당하는 문제다.

정부가 벌이는 실업자 재취업교육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기능을 다양하게 하여 중복된 노

동력의 과잉을 초래시켜 더욱 경쟁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결국 자본에 대한 지원이다.

고용 확보를 위한 투쟁, 임금인상 등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자 계급 일단의 활발한 투쟁에 모든 형태의 실업자 조직이 취업노동자들의 조직인 노조 속에 결합하여 함께 투쟁하여야 한다.

조직화와 투쟁방향

김태현(민주노총 고용안정센터 소장)

실업극복국민운동이 주체를 세우지 못하고 상층의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머물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국가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실업극복국민운동이 장기적으로 진형됨에 있어서 조직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실업자들이 주체가 되어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형태, 행사가 있어야 한다. 또한 임금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생존권 문제를 집단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실업자 조직화와 투쟁은 전체 노동자 계급의 조직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구조조정의 논리

남구현(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자본가는 지구화·세계화를 얘기하면서 내부의 과잉생산 문제를 외부로 돌리고 있다. 얼마 전 재벌개혁을 언제까지 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재경부장관은 재벌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라고 말했다. 여기서 재벌개혁은 재벌 살리기임을 알 수 있다. 개혁대상인 재벌이 오히려 개혁의 주체로 행세하며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정리해고를 벌이고 있다.

97년 11월부터 98년 10월까지 1년 동안에만 금융권에서 모두 9만1천8백9명이 정리해고 되었는데, 이는 금융노동자 전체의 23%에 해당한다. 구조조정의 핵심은 노동자 죽이기(정리해고)와 재벌 살리기(빅딜, 워크아웃)이다.

공공근로, 노동자 죽인다

백석근(건설일용노동조합 정책위원장)

운동적 발판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사업 속에서 실업자 운동이 '운동'으로 자리 매김되어야 한다.

실업문제의 경우 제도적 차원에서 국민연금을 정부에서 부담하게 하는 것이 구체적인 정치 투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한편 작년 5월과 올 2월에 공공근로 임금이 3천원 씩 두 차례 삭감된 바 있다. 이는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공공근로사업이 자본가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정부의 공공근로는 일자리를 늘리는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자를 줄이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과잉노동공급을 가져와 노동자를 죽이게 된다.

노동조직 복직투쟁으로 결집

조돈희(전해투 전위원장)

민주노총은 임금협상과 구조조정을 막아야 하는 눈앞의 과제에 급급해 실업해고자 투쟁을 전면에서 부각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올 하반기 투쟁에서 현대중장기·이천전기 등 각각의 사업장문제를 실업자·정리해고 문제로 묶어 민주노총이 싸운다면 엄청난 파급력을 발휘할 것이다. 객관적 조건 속에서 민주노총이 어렵다면 진보정당추진위원회를 투쟁의 구심점으로 삼아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싸워나가야 한다. 다른 실업자들의 생존권 사수를 도울 때 나의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5월 28일(금)

제 137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목숨 건 최후통첩

전군협, 국방부 앞 무기한 단식농성

군 의문사 유가족들이 국방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27일 국방부 정문 앞에 스티로폼을 깔고 농성을 시작한 전국군포력희생자 유가족협회(전군협) 소속 유가족 13명은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와 인권위원회를 통한 의문사 진상규명 △군포력 근절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이번 단식농성은 유가족들이 국방부 앞으로 보내는 최후통첩. 그동안 국방부는 몇차례 진상규명을 약속했지만 실제론 진상규명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전군협 이해숙 회장은 "국방부가 의문사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약속해 일말의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고인을 우롱하고 유가족을 기만하는 요식절차에 불과했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유가족들이 국방부에 대한 실낱같은 기대마저 완전히 저버린 때는 지난 4월 24일 발생한 장승완 상병(공군 총주비행장 소속)의 사망사건도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장 씨의 사망 이후 공군측은 수사기록 열람 등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의사를 묵살하는가 하면, 심지어 유가족의 허락없이 시신을 빼돌려 강제부검까지 감행했다. 부검 후 공군측은 장 씨의 사인을 자살로 결론지었고, 유가족들은 이에 반발해 장례를 미룬 채 단식농성에 참여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벌써 6개월 가까이 '진상규명' 투쟁을 벌여온 유가족들은 최근 20여일간 전국의 군부대를 순회하기도 했다. 또 토요일마다 대전국립현충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자식의 원혼을 달래고 있다. 국방부 정문 앞에서 관 한쪽을 놓고 소복차림으로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는 유가족들. 그들의 일념은 '아들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것' 뿐이다.

"지문날인, 인권후퇴"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성명

27일부터 시작된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 작업과 관련, 주민등록 지문날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하나둘 일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5월 27일자>.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 김승환)는 27일 성명을 발표해 "주민등록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서 지문을 강제 채취하는 것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반인권적 행위"라며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작업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디지털 지문 인식기까지 이용해 지문을 전자화하여 관리하겠다는 것은 국민 개개인을 인간바코드로 전락시키는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비판하며 "주민등록 지문강제 채취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등록제도의 합리적 개선 또는 폐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의 눈> 불심검문과 경찰의 배짱

"학생증이 없으면 학교에 못 가나요?"

검문하는 사법경찰이 불량배인줄 알았다는 고교생에 대한 기사를 보고 웃음을 참지 못한 적이 있다. 아마도 실소에 가까운 웃음이었을 것이다. 작년 부터 불심검문의 문제점과 경찰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거부하는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경찰의 잘못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경찰의 태도는 변한 것이 없다. 오히려 더욱 교묘해졌을 뿐이다.

현충원 출범식과 관련해 대학교 앞에서 일제검문이 진행되는 요즘, 26일부로 연세대 앞 불심검문에 나선 경찰은 "검문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 학내로 들여보낼 수 없다"며 "그로 인한 피해는 나중에 고소를 하든지 맘대로 하라"고 말한다. 지난 4월 홍익대 앞에서 불심검문에 거부하거나 항의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강제연행했던 경찰에 비하면 연세대 앞의 경찰들은 정말 양반이라고 칭찬해야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더운날씨에 수고한다며 음료수라도 들려야 하는 건지, 불심검문을 거부하는 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지키겠다는 것인데, "거부는 인정하지만 통행은 할 수 없다"는 경찰의 배짱은 실로 안하무인이다.

얼마전 서울역에 갈 일이 있었다. 5월이 상반기 기소증지자 검거기간이라 서울역은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의 독무대였다. 지나가는 학생, 직장인 심지어는 보따리를 든 고령의 할머니까지 검문하는 것을 보면 월말결산이라 바쁘긴 바쁜 모양인가 보다. 오죽하면 기소증지자 검거기간에는 입원한 환자도 연행한다는 이야기가 들릴까. 법도 상식도 인권도 무시하는 경찰을 검문해야 할 까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대안 마련 공청회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에 관심을"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장애인이 대표적 차별의 피해자라면 여성장애인은 이중의 차별을 받는 대상이 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6일 카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여성장애인의 평등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재가 여성장애인 719명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전국실태 조사(97년)와 여성장애인 12명의 심층 면접 결과(98년) 등 장기간의 연구에 기초하여 여성장애인이 겪는 차별 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대표적인 차별유형은 가족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의 편견으로 나타났다. 조사과정에서 한 소녀장애인은 "장애인을 벌레 보듯 하는 것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편견은 대인 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주위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결국 사회 적응 및 통합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능력이냐 역할을 보지 않고 '여성'은 어떠해야 한다'고 하는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다. 특히 '미'에 대한 가치기준은 여성장애인에게 높은 벽으로 작용해 '고객에게 호감을 주지 못할 것 같아서 여성 장애인을 고용할 수 없다'는 등의 왜곡된 의식을 낳고 있다.

결국 여성장애인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여성에 대한 차별을 동시에 받게 된다. 그러나 기존의 장애인 지원 정책이나 서비스는 여성장애인의 이중적 차별의 문제를 배려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육아와 가사노동, 자녀양육 문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직종개발과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나 정책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여성장애인 차별 실태에 대한 관심의 확대와 일관성있는 여성장애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존 장애인 복지 관련법을 바탕으로 한 정책과 서비스

에 여성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는 서비스 전달 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산업연수생제도 누굴 위한 것인가?

외국인노동자 임금 착복당해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국내 악덕 사후관리업체에 의해 부당하게 임금을 착복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열린 '사후관리업체의 비리를 폭로하는 집회'에는 인도네시아인 수파르토(27)씨 등 외국인 산업연수생 10여 명이 참석해 자신들이 겪은 임금착취 현실을 알렸다.

수파르토 씨 등은 우선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부터 부당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밝혔다. 내용조차 모르는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만 했는데, 이 계약서

근거로 연수생 사후관리업체(내외인력개발)측이 강제로 임금지급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것. 사후관리업체측이 '저금'이라는 명목으로 강제관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연수생들은 알지 못했다. 심지어 취업알선과 편의제공이라는 명목으로 출국 때까지 매달 2만4천원의 액수를 사후관리업체측에 떼이기도 했다. 이들은 또 고국에서 떠날 때 항공료 마련 등을 위해 송출업체로부터 1백만원의 빚을 지고 왔지만, 사후관리업체측은 자신이 그 빚을 갚겠다며 당초 채무액보다 30-40만원 이상의 액수를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관리업체에 의해 임금을 강제로 빼앗긴 후 본국으로 돌아간 타림(인도네시아) 씨는 국내 외국인노동자상담소를 통해 자신이 임금 41만원을 착복당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박천은 목사는 "서울경찰청과 중소기업청 등에 이 문제를 진정하고 내외인력개발을 항의방문 했지만 관계당국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정부가 산업연수생제도의 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고치지 않는 것은 결국, 이 제도를 통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만화 사랑방

이동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5월 29일(토)

제 137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미결수 수의착용 위헌

헌재, "무죄추정, 행복추구권 위배"

지난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미결수용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받을 때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히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미결수가 사복을 입고 시설 밖으로 나오면 도주를 생각할 수 있고, 도주시 일반인과 구별이 어려워 체포가 어렵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 재소자용 의류로 인한 모욕감이나 수

치심 △수사단계부터 고지·변해·방어의 권리 보장 △재판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음으로써 느끼는 심리적인 위축 등을 고려한 것이다.

구치소내 수의 착용 합당

반면, 재판부는 "구치소 등 수용시설 안에서의 재소자용 의류 착용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합당한 행위"라는 결정을 동시에 내려 아쉬움을 남겼다. 재판부는 △일반인의 눈에 띄지 않는 점 △수사 또는 재판에서의 방어권 행

사에 지장이 없다는 점 △미결수에게 사복을 입히면 면회객과 구별되지 않는 점 △의복 수선, 세탁 및 의복교환 과정에서 증거인멸과 도주기도, 흥기, 담배, 약품 등의 반입 염려 △사회적 신분이나 빈부 차이가 의복을 통해 드러나 수용자간에 위화감을 조성하여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구치소 안이든 밖이든 미결수용자는 동일하게 무죄추정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수의착용에 따른 재소자 인권침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97년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던 강기현(폭력 등) 씨와 같은 해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됐던 서준식(국가보안법 등) 씨가 각각 낸 헌법소원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올 4월부터 5개 구치소에서 시범적으로 재판시 미결수용자에게 사복착용을 허용해왔다.

행사와 동정

- 〈토론회〉 인간의 존엄성과 사형제도 폐지
 - 5월 31일(월) 오후 2시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신관 대강당
 - 주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02-460-7622)
- 군 의문사 유가족 단식농성 지지 시민사회단체 연합집회
 - 6월 1일(화) 오전 11시 / 국방부 정문 앞(4호선 삼각지역 도보 2분)
-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6월 1일(화) 오후 2시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 민중생존권 쟁취·사회개혁·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
- 문익환 목사 방북 10주년 기념 통일한마당 "그대 오르는 부활의 언덕"
 - 6월 1일(화) 오후 7시 / 고려대학교 4.18기념관
 - 주최: 민족화해추진위원회 (02-3273-2890)
- 매춘여성 사회복지를 위한 바로보기, 함께걷기
 - 6월 3일-25일 오후 6시 / 정대협 교육관 / 참가비 1만원
 - 주최: 매춘촌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02-3147-1505)
- 〈국제심포지엄〉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 법정」
 - 6월 4일(금)-5일(토) 오전 9시 30분 / 이화삼성교육문화관
 - 주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국회 일본군 '위안부'문제 연구모임
 - 문의: 02-3277-3386

삼성, 악랄한 해고자 탄압 단식농성 도중 구속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앞에서 15일간 단식 투쟁을 벌이던 전혜투 조지투쟁국장 김용희(41·삼성시계 해고노동자) 씨가 27일, 남대문서 형사들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4월 삼성측은 김 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삼성본관 앞에서 열리는 어떤 집회에도 김 씨를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김 씨는 지난 13일부터 해고자 복직과 가정파탄(아버지의 실종과 아내에 대한 성폭행)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여왔다.

김 씨는 작년 5월 13일부터 삼성시계로 복직하기로 사측과 합의했지만 삼성측이 이를 거부하자 단식을 시작했다. (본지 99년 3월 16일자 참조)

<인권하루소식> 99년 5월분 목차(1360-1379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360	5/1	1	대학생 인권유린 극에 달해, 한총련 불탈퇴 이유 대학생 검거선봉/노동절 109주년 서울역 앞 집회/효성 카톨릭대 대학신문 운동권 기사·사회단체 기고문 삭제
		2	<제네바소식> ⑧ 유엔인권위 폐막, 경제적 권리 등 82개 결의안 채택/〈만화사랑방〉 지하철노동자 왕따만들기
1361	5/4	1	파업노동자에 '전향' 강제, 지하철공사 '소명서' 요구 ... 조합원 '자괴감'/정형근 '반격'? 〈말〉지 명예훼손 고소/집시법 개악안 슬썬 통과, 사회단체 개악안 철회 시위
		2	<토론회> 인권교육, 인권실현의 첫걸음 - 민변 주최/주간인권호름 (4월 26일-5월 2일)
1362	5/5	1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나? 기독교방송 정의지도부 불법해고/국정원, 첨단 인터넷에 구태의연 발상 - 홈페이지 '좌익사업 식별요령' 광고
		2	한총련 활동 제재생 학생운동 중단 협박 - "집단폭행 당했다" 주장/전북 15개 사회단체, 국보법 연대회의 결성/구청 총무과도 정보 수집처? 사회단체에 전화 걸어 동향 파악
1363	5/7	1	양심수 최호경을 석방하라 준비서약 불구 미석방 ... '석방추진위' 출범/남한조선노동당사건' 이란
		2	공공의료 구조조정, 국민 건강권 위협: 현행 의료인력 법정 기준에도 못 미쳐/정형근 사퇴' 여론 확산, 부산서 사회단체 기자회견/〈만화사랑방〉 집시법 개악
		3	전세계 학살자 처벌을 촉구하는 '광주민중항쟁 19주년 기념 특별상영' <철대전투> <철대, 지울 수 없는 기억>
1364	5/8	1	철저히 짓밟히는 지하철 노동자 - 파업 중단 후 조합원 인권유린 계속
		2	'보안관찰 처분' 법적 대응 계속 - 올 들어 두 번째 '보안관찰처분취소' 공동소송/경기 성남 택시회사, 노조사무실 출입문 용접·봉쇄/민 주노총 총력투쟁 천명, 8-12일 잇따라 집회 계획
1365	5/11	1	막 나가는 지하철 '왕따 수사, 왕따 행동수칙 누명 씌워 구속/체포 만능주의 물의, 노조간부 영장 없이 체포/KNCC, 박상천 퇴진 요구, 정부 인권법안 반대 입장 표명
		2	<기고> 체벌의 원인부터 생각해보자(한효서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 교사)/주간인권호름(5월 3일-5월 9일)
1366	5/12	1	수배자 단속 핑계, 경찰 횡포: 목사 강제연행 시도 ...폭력 행사 물의/학생운동 안팎으로 봉 - 인제대 선출된 총학생회장 제적/영남위 선거공판 연기, 검찰 공소변경
		2	<인권시평> 지하철 파업과 프랑스의 철도파업 (차미경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사무국장)
1367	5/13	1	군산경찰서 유치장 피의자 변사: 사체에 멧자국 발견...경찰, '호흡장애' 발표/금속연맹 파업 정당' - 민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촉구/긴급체포 남용에 배상신청: 끈질긴 민원제기, 보복성 체포
		2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① 희생자 피해구제: 금전보상 불구 상처 치유 안돼
		3	영남위 사건, 이적단체 혐의 적용: 박경순 씨 징역 7년 선고/언론자유 수호' 집단 대응: 대학신문 기자단 공동투쟁 결의
1368	5/14	1	'소명서 제출 요구'에 굴욕감 - 지하철공사측, 노동자간 반목·불신 조장/집시법 개악반대 선언, 각계 대표인사 속속 참여/블루연 직업병 첫 발생, 노동부 감독 소홀 등 원인
		2	<자료요약> '영남위 사건' 항소심 판결요지: 불법 감청·촬영자료 증거능력 없다/〈만화사랑방〉 광주학살 주범들의 준동
1369	5/15	1	"공안사범은 쓰레기" - 교도관들, 노동운동가 등 제소자 폭행/군산경찰서 유치장 피의자 사망 사건, '돌연사' 결론: 부검의 '의상 없다' 소견/서울구치소 행정법 반입 불허: "제본된 책은 안된다" 주장/민청노회 이적단체 낙인 - 법원, 유죄 판결 후 집행유예
		2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② 진상규명: 학살의 진상, 여전히 의문으로

<인권하루소식> 99년 5월분 목차(1360-1379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370	5/18	1	집회참가자 경찰폭력 수난: 거리 시위·연행과정서 잇따라 폭행 당해/들쭉날쭉 영남위 신고, 양형기준 알 수 없어
		2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③ 미국의 역할: 광주학살 방조·승인
1371	5/19	1	열사 명예회복 좌초, 유공자법 폐기·보상특별법 상정 예정/〈한권의 책〉 「법, 정치, 도덕적 맥락 속의 국제인권」
		2	사각에 방치된 장애인 실업대책: 생계곤란·장애심화 등 한계상황 /주간인권호름(5월 10일-5월 16일)
		3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④ 국민 앞에 당당한 학살자들
1372	5/20	1	대통령 강연회서 유가족 연행, 서울교대 강연회에 학생들 강제 동원/ 다시 부는 강제철폐 바람, 갈곳없는 주민들 불안 /동티모르 평화와 자치촉구, ETISG 22일 '국제연대의 날' 제안
		2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본다 ① 전쟁에 대한 반성, '인권의 시대' 모색
1373	5/21	1	외교용 인권보고서 이제 그만! 자유권보고서 심의 10월 예정/여성고용 불안, 위협수위: 비정규직 1년새 2배 증가
		2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본다 ② '나도 폭력' 비난/〈만화사랑방〉 장애인 무시한 실업대책
1374	5/22	1	보안관찰청구에 이래적 기각: 법무부 "활동 노출돼 관찰 실의 없다"/불법사찰 증거 공개: 국보법 연대회의, 경찰청 앞 집회
		2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본다 ③ 코소보에만 전쟁이 있는 건 아니다/한총련 체포영장 기각, 대구지법 "증거자료 미비"
1375	5/25	1	불법도청 그냥 당해야 하나, 지하철 노조 도청의혹/징벌방 그대로 돌건가, 광주교도소 단식투쟁/성차별 담은 식품위생법, 남자 접대부반 안돼
		2	20년 경력교사, 자살: 교육환경 고발 유서 남겨/주간인권호름(5월 17일-5월 23일)
		3	<인권시평> 박정희 평가는 인권탄압 전모 밝히기부터 (정연순 변호사)
1376	5/26	1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CCTV 카메라 노동감시 악용소지/예술의 전당에 가보고 싶어요" 장애인 횡단보도 설치 서명운동
		2	미·일 신가이드라인 통과, 한반도 전쟁터화 우려/〈새로나온 책〉 「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1377	5/27	1	국민 모두가 범죄자냐? 주민등록·지문날인 계속 강제/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빨리 만들라, 종교계 지도자 성명
		2	<공청회> 민주노총 해고자복지투쟁 특별위원회, 해고·실업자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1378	5/28	1	목숨 건 최후통첩 - 군 의문사 유가족, 국방부 앞 무기한 단식농성/"지문날인, 인권후퇴" 전북평화인권연대 성명/〈기자의 눈> 불심검문과 경찰의 배짱, "학생증이 없으면 학교에 못 가나요?"
		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대안미련 공청회: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에 관심/산업연수생제도 누굴 위한 것인가? 외국인노동자 임금 착취 당해/〈만화사랑방〉 새주민증 지문찍기
1379	5/29	1	현재, "미결수 재판·수사시, 수의착용 부담" 결정/삼성 해고노동자 단식투쟁 중 연행
		2·3	<인권하루소식> 99년 5월분 목차(1360-1379호)

인권하루소식

99년 6월

(제1380호 - 제1401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6월 1일(화)

제 138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새벽 상경 농민 날벼락

불심검문 항의하다 강제연행

새벽길 짧은 여성의 가방을 뒤지는 부당한 검문을 목격한 농민이 경찰에 항의하자, 경찰이 역전 앞 폭력배를 동원해 파출소로 강제 연행했다.

31일 새벽 기차에서 내려 서울역을 빠져 나오던 최진국(40·전농 정책위원) 씨는 경찰이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의 가방을 수색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이에 최씨는 "왜 검문하느냐"라고 항의하였다. 그러자 서울역 전파출소 소속 정찬희 순경은 주위에 있던 폭력배로 보이는 6-7명의 사람들에게 최씨를 끌고 가라는 말을 하였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들은 최씨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발을 걷어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며 최씨를 강제로 연행하였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양쪽 발목과 왼쪽 팔 등에 피멍이 드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 이후 최씨는 1시간 정도 서울역전파출소에 강제로 잡혀 있다가 새벽 6시 경 풀려났다.

한편 폭력배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는 최씨의 주장에 대해 서울역전파출소 박용철 소장은 "당시 근무자 정순경이 출근해야 당시 동원된 사람들의 신원을 알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덧붙여 "파출소에 사복을 입고 근무하는 사람은 공공방법원 1명이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최씨는 "길가는 짧은 여성의 가방을 열어 보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잘못을 지적했을 뿐인데, 폭력배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폭력배를 동원하여 연행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당하고 보니 기가 막혀 말이 안나다"고 개탄했다. 최씨는 남대문경찰서 서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경찰은 시민에 대한 강압적 불심검문을 벌일게 아니라, 서울역 주변의 폭력배부터 단속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아리 튼 개정 집시법 전해투 집회금지 반복

개정된 집시법이 예상대로 악용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낸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해고자복지투쟁위원회(이하 전해투)는 집회신고서를 접수하고 돌아온지 30분도 채 안돼 중부경찰서로부터 집회가 불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경찰이 밝힌 이유인 즉 '신라호텔측이 장충공원에서 집회가 열릴 경우 호텔에 피해가 올 수 있다며 집회를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따라서 경찰은 '집회장소가 거주지역이거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관리자의 요청에 의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개정 집시법 제 8조 3항에 의해 집회

를 금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해투는 두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첫 번째 의문은 상업지구인 신라호텔 지구가 순식간에 주거 유사지역으로 순식간에 탈바꿈했다는 것. 전해투가 이런 근거로 집회금지의 부당성을 항의하자 경찰은 "신라호텔은 주거 유사지역"이라 우기며 "곧 집회불허통지를 보내겠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의문은 신라호텔측이 집회 신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그리 빨리 알 수 있었느냐는 점이다. 이에 전해투는 진위확인을 위해 집회불허를 요청한 신라호텔 담당자의 신원공개를 경찰에 요청했지만 경찰은 대답을 피했다. 집회불허에 경찰이 깊이 간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 충분했다.

전해투에서 변호인까지 동원, 집회불허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경찰은 "가방 끈 짧은 놈은 잘 모르겠다"며 회피하다 "신라호텔이 주거 유사지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집회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리고 앞서 집회를 불허한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충고한 것일 뿐"이라며 말을 뒤집었다.

이에 전해투 실무자들은 어이없어 하면서 "앞으로 개정 집시법을 악용한 집회불허 통지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을 우려했다.

주요공판안내

▶ 6월 2일(수)

김명진(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 1부, 선고

유성철(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후 3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 2부, 속행

김문수(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후 3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 2부, 속행

▶ 6월 4일(금)

유의선(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 2부, 선고

오봉석(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후 3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 1부, 속행

영남위 구속자 강제이감

구속자 가족 폭력사태 주장

소위 영남위 사건 구속자들이 강제이감조치 됐다. 영남위원회 시민대책위는 "31일 오전 10시경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영남위 사건 구속자들의 사동에 교도관 등 100여명이 들어와 구속자 중 정대연 씨 등 5명을 부산김해 교도소에 강제 이감시켰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한 "이 감 당시 정 씨 등은 감방 안에서 바둑을 두는 등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다"며 "구속자들이 강제이감에 항의하자 교도관들이 달려들어 포승과 수갑을 채우고 구타와 욕설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 씨 등 5명은 부산김해교도소로 이감됐으며, 부산구치소에 남은 김창현 씨 등 4명은 "소내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징벌방에 수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징벌방에 감금된 김 씨 등은 가족을 면회한 자리에서 "징벌방에 다시 들어가기 두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이감 소식을 전해들은 구속자 가족과 부산·울산 공동대책위는 "구속자들이 상고중이라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교도소 측이 분리해서 교도소로 강제이감을 보낸 것은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구치소 측의 해명을 요구하며 구치소 안에서 항의 농성에 들어갔다.

한편 서울에서 삼경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족들은 31일 오후 3시 법무부장관 비서실장 면담을 통해 △강제이감과 폭력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교도소장 처벌 및 사태발생에 대한 공식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됐다 하면 퇴진 대상

법무장관 퇴진 및 검찰개혁 촉구대회

31일 참여연대, 서울YMCA,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0개 사회단체는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검찰 개혁의 걸림돌 김태정 법무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법무부장관 부인이 연루된 '장관부인 호화 의상 뇌물사건'은 김 법무부장관 영향 아래 있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과거 대통령이 국민 앞에 약속했다가 명분 없이 철회한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 신설을 요구하였다.

한편 경찰의 수사권 부여 등 경찰권 독립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질서 수호에 앞장서야 할 청와대가 합법적인 경로를 무시하고 '사지동침'을 동원하여 호화상 뇌물 사건을 축소·은폐하였다며 그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집회에 참가한 진보정당당추진위원회 대외협력팀장 이상현 씨는 "은 국민이 IMF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를 주장하는 정부의 현직 장관부인이 수천 만원 짜리 웃을 입을 수 있느냐"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도록 함께 싸워나가자고 말했다.

주간인권호름

(99년 5월 24일-5월 30일)

1. 한반도를 무대로 전쟁을?

미-일 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 관련 법안 일본 참의원 통과, 이로써 일본자위대는 '주변사태' 발생을 빌미로 일본영토 바깥의 군사활동 가능, 미·일의 판단에 맡겨진 전쟁, 한반도를 무대로 한관가능(24일)

2. 미결수 수의착용 위한 판결

헌법 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시 미결수의 수의착용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결정 내림, 하지만 구치소 내에서의 수의착용은 합당하다 판결(27일)

3. 지문을 또 찍으라고, 국민 모두가 범죄자냐?

정부는 주민등록증 일체 경신작업에 들어가 현 주민증을 2천년 3월까지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대체할 계획, 주민등록제 자체와 전자화된 형태로 전 국민의 지문을 채취하겠다는 발상 이 반인권적이라는 사회단체의 비판 제기(27일)

4. 나 실은 소리는 못 들었다?

국민회의 '3·30 돈선거' 보도와 관련해 <한겨레>를 상대로 10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언론·사회단체 일제히 '알 권리에 대한 중대도전'이라 규탄(27일)

5.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알고 싶다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소속 유가족 13명 국방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28일)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와 인권위원회를 통한 의문사 진상규명, 군폭력 근절 등 요구

6. 21년만에 사라지는 보건증

보건복지부는 인권침해 시비를 불러온 위생분야 종사자에 대한 보건증 발급 및 소지제도를 오는 9월부터 전면 폐지 한다고 밝혀(28일)

7. 부패 자를 수 없는 사람을 잘라라

44개 사회단체 공동회견, 검찰 개혁의 걸림돌로 꼽혀 온 김태정 법무장관의 임명 퇴진 요구(28일)

8. 시농만 아니길, 피의자 신문때 변호인 참여보장

경찰청은 '유급자문변호사제' 도입, 불구속 수사원칙 등을 폐대로 한 '인권보호 수사체계' 방안 마련해 전국 지방경찰청에 시행 지시,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 관행 개선 기대(30일)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6월 2일(수)

제 138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사람 죽이려나

부산구치소, 단식 구속자에 식수중단

31일 부산구치소 측이 소위 영남위 구속자들을 집단폭행한데 이어 '영남위 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7일째 단식중인 구속자들에게 식수공급마저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민대책위는 1일 부산구치소에 수감중인 김창현 씨등을 진단하고 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소속 의사 2명이 구속자 전원에게서 집단구타를 당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인의협 의사들의 말을 인용해 "전원이 타박상을 입은 것을 비롯, 김창현 씨는 탈진상태에 놓여있으며 침을 삼키기 힘든 것으로 보아 목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김용규 씨는 가슴에 심한 통증을 호소해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이며, 이정희 씨는 목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의협 소속 의사들이 검진도중 김 씨 등으로부터 '구치소 측에서 식수를 중단했으며 박경순 씨는 검진 후 방에 돌려 보내지면서 또 다시 교도관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해 통증을 호소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현재 김 씨 등 4명은 징벌방에 수감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일 오후 2시 김진석(울산광역시 남구의원), 윤종오(울산광역시 북구의원) 씨 등 울산시 구 의원 3명은 31일 구치소에서 발생한 폭력사태 진상 확인을 위해 부산구치소를 방문했다. 김 씨 등은 부산구치소소장과 만난 자리에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자"고 제의했으나 소장은 "국회차원의 진상조사가 아니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후 구속자들의 부상은 정당한 공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시민대책위는 "31일 부산교도소로 강제 이감된 정대연 씨 등 5명의 영남위 구속자들도 계속 단식중이며 부산교도소의 다른 양심수들도 1일부터 동조단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본지 6월 1일자 참고>

'노동계 요구 경청하라'

민변, 시국에 대한 견해 밝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일 명동성당에서 '현

시국에 대한 민변의 견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동계의 파업을 엄단해야 한다는 정부의 자세를 겨냥한 이번 기자회견은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현행 법률 및 해석론에 의하면 정부가 말하는 합법적인 쟁의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진단하며, '파업이란 노동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방어하는 본질적인 수단'이므로 정부의 강경 대응은 결국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에 민변은 '노동자들이 왜 정부의 엄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하였는지 정부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라'며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강경 대응 철회 ▲노동관계법 개정과 국제기준에 따른 파업권 보장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한 구조조정 시행을 요구했다.

"또 다시 죽이지 마라"

- 시민단체, 군의문사 유가족지지 집회

아들의 영정을 품에 안은 어머니의 눈에선 멈출 수 없는 눈물이 흐른다. 따라죽지 못한 한 때문인가? 진실을 밝히려는 다짐인가? 아들의 영정 옆에 어머니는 자신의 영정을 나란히 놓는다.

군내에서 의문사한 아들의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전군협) 유가족들이 단식농성을 벌인 지 6일째, 지원군들이 모였다. 30여 개 시민사회단체 회원 120여명은 1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군의문사 유가족 단식농성 지지 시민사회단체 연대집회'를 열고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통한 군내 의문사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목회장정의평화연구회 문대광 목사는 "국권을 위해 인권이 상실될 순 없다"며 "죽어간 혼들을 누가 죽였는지 기필코 밝혀내는 것만이 아들들을 다시 죽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 장승환 상병의 아버지는 "군에서 아들의 시신을 강제로 빼앗아 부검을 실시하곤 상부엔 가족들이 부검에 동의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아들의 사인이 은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군협 회장인 이해숙씨는 "군내 지휘문책이 사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막고 있다"며 보신주의를 조장하는 지휘문책 철폐를 주장했다.

유가족들과 집회 참석자들은 국방부 정문 앞에서 국방부 장관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굳게 닫힌 국방부 철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아들을 살려내라"며 오열하던 유가족들은 돌아서면서 "부디 우리 아들처럼 죽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어머니의 품에 돌아가십시오"라는 말을 철문 앞 현병들에게 남겼다.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집시법, 국민기본권 침해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80여명의 사회단체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로 나온 이상영 교수(민교협)는 "집시법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법으로 62년 제정 이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등 공안관계법의 대체 작용을 해왔다"며 "이에 집시법위반자는 범법자라기보다는 반정부 활동으로 인해 정권에 탄압 받는 사람으로 인식돼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개인과 집단간의 의사소통을 보장하며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한 방도로써 민주주의 체제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국민들의 중요한 권리"라고 말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사무국장은 구 집시법 적용의 사례를 통해 "개악된 내용의 집시법이 아니라도 경찰은 이미 자의적 해석과 권력남용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해왔다"며 "이러한 현실은 새 정권출범이후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 집시법, 위헌 소지

민변소속의 김도형 변호사는 개정 집시법의 문제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① 집회시위 금지장소의 범위 확대
주거지 또는 주거 유사지에 대해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거주자로부터 시설보호요청을 받기만 하면 경찰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열리는 집회나 시위를 합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따라서 집회 주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집회가 허용되기도 하고 금지되기도 하는 경찰당국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법 적용을 부추기게 된다.

② 집회유지선의 설정과 형사처벌

집회유지선의 설정요건이 매우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관할 경찰서장이 이를 관장하게 돼 설정권한이 남용될 소지가 크다. 이에 비해, 남용에 대한 적절한 구제방법은 마련돼있지 않다. 또한 단지 집회유지선을 침범하기만 해도 최고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형벌권의 적정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③ 해산명령의 범위 확대
앞으로는 당해 집회 시위가 폭력시위 등 기존의 해산명령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단지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 및 시위가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관할 경찰서장이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해산 요구에 불응하면 공권력을 투입해 합법적으로 집회 시위를 진압할 수 있게된다. 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집회 허가제 금지에 저촉된다.

④ 이의신청제도개정의 문제점
정부는 개정 집시법이 이의신청기간을 금지통보 후 72시간에서 10일로 연장하고, 금지통보이후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해 국민의 권리를 보다 넓게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집회 및 시위는 일정한 시기에 반드시 개최돼야하는데 일단 금지통보를 받아 무산됐다면 사후배상은 별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의신청기간의 확대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공염불에 불과하다.

또한 집회 및 시위 관련 소송의 경우 소 제기일부터 3달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동규정이 삭제돼 신속한 구제가 보장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⑤ 개정 집시법의 위헌성
이번에 개정된 집시법을 개악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집회·시위의 장소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 가능성, 경찰의 일반적인 집회유지선 설정권 부여와 집회유지선 침범에 대한 형사처벌, 집

회·시위에 대한 해산명령권의 행사 범위의 확대라는 3가지로 요약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제한 금지의 원칙'과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따른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개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 김 변호사는 "집시법 어기기 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행형법은 고무줄

면회담당자 근거 없는 판단

교정당국이 재소자에게 건전하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며 면회신청자에게 모멸감을 주고 면회를 불허했다.

1일 강진희(28) 씨는 한총련 사건으로 97년 10월 구속되어 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표주원(30·통신전문대) 씨의 면회를 신청했다. 하지만 교도소 담당주임 임원택 씨는 '공안사범에 대한 면회를 담당자가 신중히 결정하라는 예규조항이 있다'며 면회를 거절했다. 전날 전화로 면회 예약까지 한 터라 면회 불허 통보는 뜻밖이었다. 이에 강 씨는 '몇 조 몇 항에 있냐'고 따져 물었고 임 주임은 '그런 건 우리가 알 바 아니다, 법전에서 찾아 확인하라'고 대답했다.

이러한 면회사절 이유를 납득할 수 없을 뿐더러 모처럼 시간을 내어 면길을 찾아왔기에 강 씨는 물러설 수 없었다. 강 씨는 그 자리에서 진주교도소 소장 앞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보안과장과 만났다. 하지만 더욱 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듣게 되었다.

보안과장은 '교도소 불허 서적인 (양심수 없는 나라)을 강 씨가 차입해 표 씨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며 면회 불허이유를 밝혔다. 이에 강 씨는 '출판사에서 발행한 책을 교도소 불허 서적인지 모르고 넣었는데, 이런 자신이 재소자 교정에 유익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면회를 불허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 문자 보안과장은 말없이 강 씨의 얼굴을 뚫히 쳐다보다가 문을 꽂고 닫고 나갔다. 결국 강 씨는 인적이 무시당했다는 모멸감을 느끼며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6월 3일(목)

제 138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군익문사 가족 심장에 못질

한밤 경찰 수백명 동원 강제연행

국방부 앞에서 7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던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전군협) 회원들이 농성장에 난입한 전경들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2일 오후 7시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과 전경 250여명은 "유가족들의 차량과 천막이 집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며 농성장에 나타나 유가족들을 검거하러 왔다.

이 과정에서 1기동대 소속 오지형 경감은 전경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전경들을 구두발로 걷어차았다. 이 광경을 목격한 유가족들은 "군대에서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패는데 안보는 데서는 얼마나 패겠냐, 내 아들도 그렇게 죽었냐"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전군협 이혜숙 회장이 "오지형 경감은 나와서 구타당한 전경들과 어머니들 앞에서 사과하라"고 주장하자 전경들은 이 씨를 검거하러 왔던 후 강제연행했다. 또한 이를 제지하던 신이철(고 신오철의 형) 씨 등 6명을 강제연행했으며, 차안에 있던 사람을 연행하기 위해 차 문을 강제로 부수기도 했다. 연행자 중에는 농성을 지원하던 인권활동가 2명도 끼어 있었다.

강제 연행된 이 씨 등은 연행과정에서 경찰이 구두발로 걷어차였으며 머리를 잡아끌었다고 말했다. 용산 경찰서에 연행된 이 씨 등 8명은 5시간동안 경찰서에 불려와 있다가 3일 새벽 2시경 귀가 조치됐다.

한편 전경들은 유가족들의 농성 천막과 주변에 있던 선전관을 강제 철거했으며 전군협 관계 차량의 견인을 시도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차량 앞에 드러눕는 등 강력히 항의하여 이를 제지

하던 전경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경찰은 119 구급차를 불러 유가족들의 강제 후송을 시도했으나 유가족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구급차는 빈차로 되돌아갔다.

경찰은 오후 10시경 철수했고, 천막이 뜯긴 콘크리트 바다 위에는 탈진 상태로 누운 유가족 10여명이 남았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유가족 협 국민회의 점거농성

전국민족민주유가족 협의회 의문사지

☼ 군에서 온 편지

군익문사 유가족들이 국방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인 지 7일째. 군복무중인 한 사병에게서 온 편지 한 통이 유가족의 눈시울을 적셨다. 그 편지의 일부 내용을 신는다. <편집자 주>

저는 어머니의 자식과 같은 한 명의 병사입니다. 야간에도 고생하시면서 국방부 앞에 계시다는 소식을 전해들으면서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입니다. ... 지금은 비가 너무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름이라고는 하지만 밤인데도 비까지 와서 추운 날씨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은 맨 아스팔트 바닥에 천막 하나를 두고 그 안에 계시다고 합니다. 낮에는 이글거리는 태양 밑에서 많은 날을 음식도 입에 대지 않은 채 단식투쟁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의 어머니 같은 분이 구급차에 실려 가셨다는 소식을 읽곤 주사기에 몸을 의지하시고 계시다는 소식을 우연히 전해들었습니다. 정말 힘겨운 투쟁이라는 것을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에 다 함께 살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의 전우들이 자살이건 타살이건 간에 희생되었지만 또 다른 어머니의 자식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힘 내십시오. ... 어머니께 큰 힘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 한 사병으로부터 —

조용히 넘길 일 아니다

여기자 성추행 검사 징계 제자리

낮술 먹고 기자실까지 쫓아가 여기자를 성추행한 박충근(43) 검사에 대해 검찰이 "전보발령" 정도의 경징계로 얼버무리려 하고 있다.

지난 5월 7일 정충수 지청장과 김승년 차장검사를 비롯해 10여명의 동부지청 검사들은 지청 출입기자들과 서울 구의동 모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여 점심을 먹는 자리를 가졌다. 이때 검사가 몸에 손을 대며 추근거리자 대한매일신문사 김아무개(25·여) 기자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기자실로 돌아갔다. 얼마후 박 검사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동료검사 2명과 함께 김 기자를 찾아와 "한잔 더 마시자"고 하였고 김 기자는 사양하였다. 하지만 박 검사는 "같이 가자"며 뒤에서 껴안는가 하면 "이러지 말라"고 밀쳐냈지만 강제포로 가슴을 더듬기까지 했다.

이를 후 김대정 검찰총장은 김윤성 공보담당관을 대한매일신문사에 보내 이 사건과 관련해 공식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한 전 박상천 법무장관과 대한매일의 편집국장, 사회부장이 극비리에 만나 점심을 하며 이 사건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 박 장관은 "박 검사의 징계 사유는 근무태만과 성추행 두 가지"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뒤 정도에 맞게 처리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5월 11일 물의를 빚은 박 검사를 전주지검으로 인사조치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김찰총장이 대검 검찰부의 검찰결과를 토대로 징계수위를 결정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서를 내면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를 소집,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를 확정하는 것이 검사징계과정이다. 징계소집 기일은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전 대구 심재훈 고검장의 경우, 징계위 회부에서 결정까지 8일이 걸렸다.

하지만 한국기자협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씨는 "박 검사에 대한 징계 내용을 법무부에 여러 차례 전화로 확인하였지만 곧 발표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징계결과를 내놓지 않는 것은 고의로 시간을 끌어 무마시키려는 것이 아닌가"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또한 한 사회단체가 적극 나서 함께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검찰1과 윤진원 검사에 따르면 '검찰인사 이동이 이번 주에서 다음주를 고비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 여파로 징계위원회 위원도 교체될 것으로 예상돼 박 검사의 징계가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해명했다.

국제인권소식

동티모르 먹구름 여전

동티모르의 독립을 결정하는 투표가 올 8월로 다가오고 있으나, 인권침해의 먹구름은 여전히 동티모르를 덮고 있다.

동티모르인권센터(ETHRC)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 동티모르의 수도 달리에서 1백 킬로미터 떨어진 아타라 마을에서 16명의 동티모르인이 사살되었으며, 실종된 21명 또한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수체의 가옥이 불타고 파괴당했다. ETHRC는 이를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의 통합을 원하는 군사조직의 소행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이 마을로 연결되는 다리를 파괴하여 진상조사를 위한 유엔 요원 등의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올 4월 이후, 동티모르의 독립투표를 촉박하려는 공포와 테러의 조성은 계속되어 왔으며, 그 주도 세력인 친통합파 인도네시아 군부와 준군사조직의 만행은 2개월 동안 약 36명의 실종, 97명의 살해, 31명의 중상을 초래하였다. 조사가 더 진행된다면 그 수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피해 당사자 김 기자는 '박 검사를 고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은 없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대한매일 쪽과의 논의해서 결정하고 있다'며, '검찰의 징계여부를 주시하고 있는데 현재 별다른 성과나 결과발표가 없어 불만'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국가보안법 국제캠페인팀
도서출판 사람생각/8천원
◆ 구입문의: 사람생각 02-3675-4096

버마 인권문제를 고려하라

지난 5월 31일 방한한 버마(현 미얀마)의 윈 아웅(Win Aung) 외무장관이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일 저녁 돌아갔다. 외교통상부 동남아과에 따르면 윈 아웅 외무장관은 '양자관계, 지역정세, 한·아세안 관계'를 협의하기 위해 방한했다. 2일 한국측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오고간 구체적인 얘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31일 아웅 장관에 방한에 즈음한 성명을 통해 ▲ 양심수의 무조건 석방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한 재판 보장 ▲ 소수민족에 대한 강제 이주 행위의 금지 등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해에 우선하여 버마의 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하는 자세가 요구되며, 특히, 작년에 버마가 동남아국가연합(ASEAN)에 가입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버마 당국에 새로운 압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88년 민주화투쟁 속에서 수천명을 사살하였고, 90년 선거에서 패배하였으나 정권을 이양하지 않은 버마의 군사정권은 소수민족과 선주민을 동원한 강제노동, 1천2백명 이상의 정치적 수인에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 등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왔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a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6월 4일(금)

제 138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알 권리' 막는 부실운영

참여연대 실태조사, 정보공개제도 시늉 뿐

정보공개제도 시행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한 조사에서 정보공개 법령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11곳에 불과하여, 대다수의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를 할 의지나 준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철준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 행정 투명성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5월, 67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민원인 6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 관련된 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으로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여기에는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상세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 시행령 21조 4항에는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 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서·컴퓨터 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전체 67개 기관 모두가 독립적인 정보공개접수실과 전담직원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정보공개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를 비롯해 44개 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조차 비치해 두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서, 민원인의 눈에 띄게 정보공개청구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만 내어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정보공개를 알고 있다는 시민이 조사대상 33.7%, 이 용해본 시민이 6.5%라는 조사결과를 볼 때 이 같은 방식의 운영이 시민의 이용을 가로막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사대상 기관 중 절반에 해당하는 33개 기관이 정보공개편람을 비치하지 않았고, 편람 자체가 없는 기관도 8곳이나 되었다. '정보공개편람'은 이용자들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지침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이 정보공개를 위해 해당기관에서 작성한 편람이 아니라 제도시행 초기에 발간된 안내책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어떤 문서를 공개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주요문서 목록'을 작성·비치해 둔 기관은 23개에 불과했으며, 이에 보존문서 기록대장이 없는 곳도 17개 곳이나 되었다.

한편, 정보공개 요구를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보여주지 위해 대부분의 기

관이 '처리대장'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77.2%의 높은 공개율을 보였다. 하지만, 이같은 표면상의 정보공개율을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직까지는 많은 정보공개청구가 간략한 자기정보 열람 등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한편, '비공개 및 부분공개'의 사유가 '사유 부적합, 공개부적합, 공공업무수행지장' 등으로 모호하게 나타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의적 적용임이 지적되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정보공개 법령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지 않는 '위법실태'가 확인되었다. 특히, 정보공개 주무부처 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청구서, 편람, 주요문서목록을 비치하지 않은 행정자치부가 대표적인 부실 기관으로 지적되었고, 국가정보원은 실태조사를 거부하였다.

고문 국회의원 수사 촉구 정형근 심판모임 성명

고문 국회의원 정형근을 심판하는 시민모임(정형근 심판모임, 대표 이돈명)은 3일 정형근의 고소건 담당 정만전 검사에게 보내는 수사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3월 10일 결성하여 4월 13일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정형근 심판모임은 "한 두 사람도 아닌 수많은 사람을 고문하여 자백 받아 놓고,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시절 조국을 위해 간첩 잡는데 큰 업적을 남겼다며(정씨가) 자긍심을 갖는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정형근 의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정형근 의원은 검찰의 소환장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림

군의문사 유가족 강제연행 규탄 및 군의문사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합동기자회견

때: 오늘(6월 4일) 오전 11시

곳: 국방부 정문 앞(4호선 삼각지역 1번 출구)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①

지난 27일부터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 작업이 시작되었다. 방송차량 홍보와 주요 역과 거리마다 나붙은 공고문과 현수막은 이 사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영락없이 국민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다. 정부는 "21세기를 맞이하는 국민을 위하여 새 주민등록증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고자" 디자인 공모전을 열기도 했다. 입상작에 선명히 표시되어 있는 '지문날인'은 과연 정부의 말처럼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

<인권하루소식>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이들의 의견을 모아 보았다.

▲ 한국의 주민등록증 제도는 한마디로 '중복적'이고 '과다'한 정보확보 수단이며, 발상 자체가 억압적이다. 현재 정부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으면서 원하는 정보를 '자동적'으로 축적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 개개인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그 목적이 분명하고 납득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인구정책'이 목적이려면 '전출입신고'로 충분하는데, 현행 주민등록제도는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현대 생활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증의 대용품이 충분히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번호'가 있다고 하지만 이는 강제적인 의무가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신청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는 '복지'를 제공한다는 일종의 '계약'인 것이다.

지문날인은 범죄기록을 위해 형사법에 한해 채취되는 것이며, 전국민의 지문을 채취하여 관리하겠다는 생각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 유학생 유인국)

▲ 현재 경신되는 주민증은 전자주민카드의 전단계라고 생각된다. 화가 나고 불쾌하다. 상품에 붙는 바코드 같다. 개별로 고유번호가 찍혀서 사람의 모든 행적이 감시되고 통제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인권에 대한 생각이 뒤떨어져 있고 정보

유출을 통한 인권침해가 잦은 우리나라에서 전자주민카드의 악성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협의회 사무국장 이윤주)

▲ 주민등록증의 전산화가 고도화되는 가운데 개인의 정보는 유출되고 당사자 개인은 방치되어 있다. 이미 141개의 주민등록표 항목 중 71개가 전산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 개개인의 정보를 국가가 알고 있을 이유도 없고 무리하게 독점할 이유도 없다. 전국민을 예비범죄인화 한다. (전북지역 정보통신연대 한하늘)

▲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대응을 끌어내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부산 참여연대 박재을 차장)

▲ 새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 주민증은 화력, 열해형 등 141개 항목에다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불필요한

부분까지 국가가 관리하며 개인을 통제하려는 제도이다. 기존 주민등록증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자체가 당면 과제인데 정부는 오히려 전자주민등록증을 추진하려 했고, 저항에 부딪치자 전자지문을 채취하는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일단 시작해보려는 것이다. 전국민 모두의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하여 디지털로 보관하겠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사회진보연대 홍성만 간사)

주거기본법 제정 촉구 무주택자의 날 집회

3일 오후,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은 종로 탑골공원에서 '무주택자의 날' 선포 7주년을 기념하는 집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김대중 정권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2002년까지 주택보급률 100%확대, 영구임대주택 20만 호 건설, 소형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주력' 등의 공약사업이 중단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전히 개발지역에서 강제 철거가 자행되고 있다며, '주거기준을 정책에 반영할 것, 철거를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철거이전과 동일한 주거대책 마련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주거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만화사랑방

이동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choll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6월 5일(토)

제 138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균

전쟁, 남의 문제가 아니다

평화를 위한 세계행동의 날, 유고공습 규탄

4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등 18개 종교·시민·사회단체 회원 60여명은 광화문 앞에서 '전쟁반대와 유고공습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6월 5일로 선언된 '평화를 위한 세계행동의 날'에 맞추어 평화를 위해 일하는 전세계 민중과 연대하는 의미에서 준비되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성명을 통해 '미국과 나토의 유고공습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단지 유고민중에게만 인도주의적 동정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이며 인류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라 밝혔다. 또한 '미국이 취하고 있는 세계패권전략이 한반도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지난 94년 6월 미국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려 했던 것과 올 3월 북한을 공습하려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나토의 유고공습을 규탄하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미대사관에 직접 전달했다.

'앞으로 누가 유고 민중의 미래를 담당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한 참가자들은 60일을 넘어서고 있는 미국과 나토의 유고공습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전형적인 전쟁범죄'라고 규정하며, 그 폐해를 지적하였다.

자유발언에 나선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남인순 씨는 "전쟁시 가장 피해를 받는 집단은 어린이와 여성"이라고 강조하며 "나토의 유고공습으로 출산율이 1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여성들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안전 또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5월 14일 메리리빈슨 유엔 인권고등판

무관은 "현재 나토의 유고공습으로 사망한 민간인은 1200여명, 부상자는 5,000여명에 이르며 사망한 유고시민 중 3분의 1과 부상자의 40%가 어린이들"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런 주장이 한국에서만 외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조직되고 있다고 했다. 6월 5일 '평화를 위한 세계행동의 날' 행사는 치아파스 관련 활동을 해온 멕시코의 민간단체인 '정의와 존엄성의 평화운동(MPJD)'이 처음 제기하였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 종교·인권단체, 미국의 퇴역군인 등 광범위한 전세계 시민들이 참가를 약속했다. 미국에서의 국방성 앞 행진, 멕시코의 평화 세미나, 연극과 문화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세계 곳곳에서 열릴 것이다.

민주열사·희생자 추모주간 7일부터 일주일간

'제10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및 기념주간'이 오는 7일부터 일주일 동안 명동성당과 서대문 독립공원 등에서 집중적으로 열린다. "열사들이 염원한 세상, 우리가 만듭니다"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추모주간 행사는 60년대 이후 민주화, 통일, 민중생존권 투쟁 등의 과정에서 산화해간 열사들과 독재정권에 의해 숨지고도 진상이 규명되지 못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위한 자리다. 행사준비위원회(위원장 이창복 등)는 7일 추모주간 선포식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매일 명동성당에서 의문사 진상규명 캠페인과 영상제를 가지며, 종교의식과 묘역순례 등을 진행한다. 추모주간의 대표적인 행사는 12일 열리는 범국민추모제. 오후 2시 서울역에 집결하여 서대문 독립공원까지 행진한 뒤 그 자리에서 추모제를 갖는다.

○ 추모제 행사 일정 ○

- 6일 오후 2시 30분/ 동국대/ 열사정신계승순례단 발대식
- 7일 오전 12시/ 명동 상업은행앞/ 추모 및 기념주간 선포식
- 오후 6시 30분 / 명동성당 들머리 / 조성만 거리 문화제
- 의문사 진상규명과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촛불미사
- 10일 오후 3시 30분/ 기독교회관 2층 예배실
- 의문사 진상규명과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목요기도회
- 12일 오후 5시/ 서대문 독립공원
- 제10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 13일 민주열사 묘역순례 (마석 묘관공원, 망월동 묘역, 부산 솔밭산 묘역)

<상설행사>

- 8일~11일 명동성당 들머리
-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캠페인, 열사 대자보전
- 8일~11일 저녁 8시/ 명동성당 들머리/ 영상제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라

32개 시민사회단체, 군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자식을 군에서 잃고 소식을 입은 어머니들이 '죽음의 진실'을 밝히라며 국방부 노상에서 단식농성을 벌인 지 9일째,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나섰다. 6일, 참여연대, 민변 등 32개 시민사회단체는 국방부 농성장 앞에서 '군의문사 유가족 강제연행 및 군의문사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가단체들은 "자식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자식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야 하는 부모의 아픔은 비극중의 비극"이라며 "국방 장관이 유가족들의 탄원 요청을 받아들여 진지하게 대화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자식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는 이들의 처절한 행동은 결코 저절로 사그라지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2일 밤 유가족들의 농성장에 사전 해산명령도 없이 경찰병력을 투입해 폭력을 휘두른 '국민의 정부'에 깊은 한숨을 느끼고 비난하였다. (본지 6월 3일자 참조)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군 의문사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안의 제시'를 촉구하였다. 이에 따르면, 군 의문사 사건을 군 스스로가 수사하는 근본적인 한계에서 진상이 은폐되고 있다. 문책을 우려하여 해당 부대의 지휘관이 진실을 은폐하는 악습과 군의 문제가 외부로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상황에서 군 스스로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타살'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유독 군만이 '자살'이라 우겨왔다. 이에 참가단체들은 국방부가 아닌 '제3의 독립된 기관'에서 '처음부터 다시 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날 '전국군폭력 희생자 유가족 협회'(이하 전군협) 이해숙 회장은 군의문사 경과보고를 하면서 시종 오열했다. "의문사 조사, 군에 맡길 수 없다"며 취재중인 기자들에게 "제발 도와주

세요"라고 큰절을 하며 절규하는 이 회장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찡하게 만들었다.

이해숙 회장은 작년 여름 의아들을 군에서 잃은 후 군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모든 이들의 어머니로 변신했다. 지난해 7월 20일, 아들의 사망소식을 접한 이 회장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속에 부대에 도착했을 때 군이 내놓은 사망 원인은 '중과실에 의한 감전사'였다. 이때 부대 측은 '자살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순직 처리가 가능한 감전사로 처리하니 감사한 줄이나 알라'는 식으로 협박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꼬박 3일 밤낮을 부대 근처에 머물며 진실을 캐들어 갔다. 그 결과 박 일병을 폭행하고 감전사시킨 범인(상급자 윤 아무개 상병)을 잡아 낼 수 있었다. 이 사건 후 이씨는 군대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자식을 둔 유가족들의 절박한 호소를 수없이 받게 되었다. 이 과정 속에서 이 회장은 자연스럽게 군대 의문사 장병들의 어머니로 나서게 되었고, 마침내 작년 12월 7일 '전군협'이 탄생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후 참가단체 대

표들은 국방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탄원요청서'를 국방부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집시법 재개정 촉구

법국본, 집시법 개악 규탄 집회

민중생존권 쟁취·사회개혁·IMF 반대 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4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당 앞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악 규탄 집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여야 3당의 합의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월 24일 대통령에 의해 공포, 시행에 들어간 집시법이 "오로지 정권의 안위와 행정의 편의성만을 고려하고,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기 위한 효율성에만 집착해 개악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이번 집시법의 개악을 "민중의 생존권 요구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독재정권의 탄압도구를 부활시켜 더욱 감압적으로 탄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이런 이유로 집회 참석자들은 개악된 집시법의 철회와 전면적인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철거민과 노점상, 해고노동자 등이 나와 개악되기 이전의 집시법도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해왔음을 생생한 사례를 들어 폭로했다

행사와 동정

- 군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대회 및 썬김굿
 - 6월 5일(토) 오전 11시 / 국방부 정문앞
 - 주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 농성 300일 맞이 일일차집과 작은 콘서트
 - 6월 6일(일) 오전 11시~ 오후 9시 / 조계사 대웅전 주변 곳
 - 주최: 김영삼 정권 시절 정치 수배자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 촉구를 위한 집회
 - 6월 7일(월) 오후 2시 / 세종로 종합청사 앞
 - 주최: 장애인 실업자 연대 준비위원회 (02-446-2909)
- 신문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6월 8일(화)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2층 언론재단 강의실
 - 주최: 언론개혁시민연대 (02-732-7077)
- ASEM 2000 한국민간단체포럼 준비위원회 결성식
 - 6월 8일(화) 오후 2시~4시 장소: 종로성당 3층 강당
 - 문의: 745-3300
- 한국아동권리학회 '99춘계학술대회
 - 6월 11일(금) 장소: 숙명여자대학교 행정관 7층 회의실
 - 주최: 한국아동권리학회 (3274-1669)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6월 8일(화)

제 138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매 맞은 것도 죄인가

철거민 폭행·강제연행, 성추행 의혹

폭행에 항의하던 철거민들이 또 다시 폭행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7일 오후 1시 '철거민 백석호동지 살인폭력 진짜주범 삼성제단과 민중생존권 쟁취'를 요구하며 삼성 본관 앞에서 집회를 갖은 철거민 22명은 경찰에게 폭행당한 뒤 강제 연행됐다. 백석호(29) 씨는 지난 98년 3월 도원동 철거과정에서 신원미상의 사람들에 의해 집단폭행 당한 뒤 은둔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지난 1년동안 한강성심병원에 입원중이다. <본지 98년 3월 31일자 참조>

이날 길을 가다 집회를 목격한 시민 김성렬(남) 씨는 "집회장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이 망원경을 들고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사진을 찍자 이를 본 집회 참석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와 사진을 찍지 말라고 요구하던 중 충돌이 발생했다"며 "곧 경찰이 달려왔지만 경찰들은 싸움을 건 사람들은 한 명도 연행하지 않고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들만 강제로 연행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전상익(남) 씨 역시 "경찰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폭행하며 강제로 경찰차에 태웠는데 이때 몇 사람의 얼굴에서 피가 흘렀다"며 "왜 싸움을 건 사람들은 연행하지 않냐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집회참가자들만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여했던 전국철거민연합 총무위원 문영일 씨는 연행자에 대한 성추행을 주장했다. 문 씨에 따르면 집회도중 이선민(여, 구리안창주민) 씨도 경찰에 연행됐는데 남대문서에 있는 이 씨를 면회했을 때 '강제연행 당시 전경들이 양쪽 팔과 다리를

격고 양쪽 유방을 주물러줬으며, 이에 몸을 흔들며 빠져 나오려 하자 펜티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작거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집회도중 참가자들의 사진을 찍은 사람들은 삼성직원과 삼성측이 고용한 철거용역회사 다원건설(구 적준) 소속으로 알려졌다.

강제 연행된 철거민 22명은 중부서와 남대문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연행자들은 '싸움을 먼저 건 사람들은 놓아주고 오히려 피해자인 우리만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행과정에서 폭행당한 강현숙(여), 이병래(여) 씨 등 8명은 적십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폭행사태와 관련, 남대문서 수사 2개의 이상원 형사는 "이들이 집회 장소를 이탈해 허가되지 않은 도로를 점거했다"며 '집시법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 해고자복지투쟁 특별위원회와 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 등은 이날 폭행사태와 관련, 오는 9일 삼성 본관 앞에서 '집시법 악용하는 삼성제단 규탄대회'를 갖을 예정이다.

얼굴 내보인 국방부 전군협, 국방부 장관 면담

전군협(회장 이해숙) 유가족들이 조성태 국방부 장관을 면담했다.

5일 오전 11시, 「전국군폭력희생자 유가족협회(전군협)」와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

원회」(국가인권기구 공대위, 상임공동집행위원장 곽노현) 회원들은 국방부 정문 앞에서 '국방부 장관의 성실한 면담과 군대 의문사 사인 규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 이후 이해숙 회장, 곽노현 교수 등은 국방부 차관 등을 면담했다. 하지만 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이들은 국방부 장관 면담을 강력히 요청하여 오후 2시 경 조성태 국방부 장관을 만날 수 있었다.

이때 조 국방장관은 "정문 앞에서 전군협 어머니들이 단식농성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장관 취임한지 10여일밖에 지나지 않아 각 부대를 방문하는 등 정신이 없어 이렇게 늦게 만나게 됐다"고 말문을 연 후 "100% 군대 폭력을 근절하고 의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은 못해도 최소한도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동안 발생한 의문사에 대해 "차관이 중심이 된 군 의문사 대책기구를 통해 의혹을 모두 규명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유가족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이 회장은 "국방부가 지금까지 세운 대책은 실제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며 "특히 구타 근절대책방안인 소위 수리나 사람의 전화 등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답변했다.

면담이 끝난 후 조 국방부 장관은 이 회장의 요청에 따라 유가족들의 단식농성장을 방문,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한을 풀어드리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니 앞으로 잘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면담이후 전군협 회원들은 10일간의 단식농성을 풀고 중대 부속병원과 순천향 병원에 입원했다.

한편 국방부 장관 면담과 관련해 이 회장은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통해 철저한 군 의문사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반개혁세력을 가려보자

국정개혁 촉구 국민연대행동주간 선언

김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마녀사냥 운운하며 국민을 싸잡아 '반개혁세력'으로 규정한데 격분한 시민사회단체가 거리로 나선다.

6월 7일 민변, 민주노총 등 113개 전국시민사회단체는 참여연대 대강당에서 '김태정 장관 해임 및 총체적 국정개혁 촉구를 위한 국민연대행동주간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으로, 국민은 '반개혁세력'으로 치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개혁이 대통령과 청와대 보좌진의 오만과 독선에 의해 농락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여론에 승복하여 검찰개혁의 걸림돌인 김 장관을 해임하고 옷 로비사건을 비롯한 최순영 씨의 정치권 로비 실체를 전면 재수사 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국민여론을 호도 함으로써 개혁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김중권 비서실장과 박주선 법무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 전원을 해임하고 공직윤리 확립과 로비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부패방지법과 특별검사제를 신속하게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6월 7일- 11일, 5일 동안을 '김태정 장관 해임과 총체적 국정개혁을 촉구하는 국민연대행동주간'으로 선포하고, 경실련을 중심으로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매일 명동 한빛은행 앞에서 '가두집회'를 갖고, '김태정 장관 해임 국회결의'를 요청하는 청원안에 대한 국민서명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교류 활성화의 두 얼굴

웅정 방문 전국연합 대표단 연행

중국 용정에서 열린 남·북·해의 공동의 문이환 목사 5주기 추모행사에 참가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 대표단 김규철(65·민자통의장) 씨 등 4명이 지난 6일, 입국 수속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육인동 대공분실에 연행됐다.

이날 김포공항 2층사에는 200여명의 환영단이 손에 피켓과 꽃다발 등을 들고 마중 나왔으나, 결국 대표단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 한편 전국연합은 구속된 대표단이 석방될 때까지 매일 오후 1시 경 육인동 대공분실을 방문하여 집단면회를 요구하고, 오후 3시에는 광화문 집회 후 정부 종합청사(통일부)를 순회하는 거리행진을 무기한 갖겠다고 밝혔다. 전국연합 정보통신부장 김정국(29) 씨는 "정부가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민간차원의 자주적인 운동을 가로막고 창구단일화를 앞세워 대표단을 구속한 것은 정부의 정책과 불일치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간인권호름

(99년 5월 31일-6월 7일)

1. 마녀사냥은 계속된다?

김 대통령 기자회견, '마녀사냥 운운' 국민여론을 오도 김 법무 유임방침 밝혀 (1일), 전국 시민사회단체 '김법무 퇴진 요구' 집회·성명 더욱 거세져, 특별검사제 요구 다시 수면위로

2. 감옥 왜 이러나

부산구치소, 영남위 구속자 강제이감, 집단폭행 및 단식농성자에게 식수공급 중단 하는 등 인권침해 연속타 (2일)

3. 어머니는 멈추지 않는다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10일간의 단식농성 정리 (5일), 경찰 농성장 난입과 강제연행, 시민사회단체 연대집회, 국방부장관 면담 등 긴 사연 간직하고 다시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통한 진상규명 노력 의사 밝혀

4. 잘 다녀왔지? 대공분실로 따라와!

정부불허에도 중국 용정에서 열린 남·북·해의 공동의 문이환 목사 5주기 추모행사 참가 강행한 전국연합 대표단, 귀국과 동시에 육인동 대공분실 연행 (6일) 한편 통일부는 '남북이산가족 교류를 위한 절차 간소화 지침' 제정 (31일)

5. 전쟁 화염 뜨거운 지구촌

나토-유고 군사회담 결렬, 나토 공습강화 예상 (7일) 핵보유국 인도-파키스탄 분쟁 악화, 인도 최대규모 공습 재개, 이에 맞선 파키스탄 전쟁 가능성 경고 (6일) 한편, '평화를 위한 세계행동의 날' 전세계적인 연대행사 가지고 나토의 유고공습 규탄 및 인류생존의 문제제기 (5일)

6. 일, 외국인 국립대 입학 허용 방침

재일동포학교 등 재일 외국인학교 졸업생들의 일본 국립대학교 대학원 입학의 길 열려, 그간 대검 응시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재일 민족학교 등 승풍, 하지만 길은 멀어 (7일)

7. 임의동행 불법감금 검찰수사관에 실행

임의동행' 형식으로 피의자를 연행해 경찰서 보호실에 불법감금한 혐의로 검찰수사관 실행 선고 (5일)

군사대국으로의 숨죽인 발걸음

-일본의 주변사태법과 평화 그리고 인권-

이경주(경북대학 법학과 교수)

인권
시평

발족차족의 의미

한참 대학들이기 어려울 때 유행하던 말이 있었다. "재수는 필수요, 삼수는 선택이다". 그러나 요즘은 그 어려운 대학에 들어가고 난 뒤에도 필수와 선택의 기로에 서지 않을 수 없다. 한참 회사에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외국어를 한 두 개쯤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영어는 필수요, 일어는 선택이라는 말이 유행이 되고 있다.

학생시절에 나도 일어를 선택해 공부한 적이 있다. 우리 사회가 한참 이해하기 힘들어서 이해 정책 읽어보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정작 흥미를 느낀 것은 일본어의 말 만드는 구조였다. 그래서 독서다운 독서에는 들어가보지도 못한채 일본어에 빠져 한참을 헤어나오지 못한 적이 있다. 그때 외웠던 말의 대부분을 지금은 잊어먹고 말았지만, 두고 두고 잊혀지지 않는 말이 한가지 남아있다. 다름 아닌 '발족차족(拔足差差)이다. 나중에 알고보니 발부리를 넣었다가 돌부리에라도 걸리면 빼었다 하면서 살금살금 걸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말이었다. 숨죽여 걸어가면서도 용이 주도한 모습을 그렇게 잘 만들었을까 싶어서 경탄스러웠다.

하지만 '누끼아시사시(抜き足差し)를 잊지 않게 된 것은 조어법에 때려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일본의 군사대국화문제에 관심을 갖으면서 잊을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군사대국화의 사생아 '자위대'

모두가 알다시피 일본에는 국군이 없다. 그러나 국군이 없기 때문에 군대적 실체를 갖춘 집단이 존재하지 않거나 전투력(戰力)을 갖춘 상비군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일본에는 약23만명의 자위대라는 군대적 실체와 전투력을 갖춘 상비군이 존재한다. 그

리고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가 낸 자료(1997/8)에 의하면 이 자위대가 1995년 한해동안 썼던 돈이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3위였다. 그런데 이 자위대는 유감스럽게도 사생아였다. 일본 사람들이 세계에 내놓고 자랑하는 것이 세가지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헌법이다. 그 헌법의 9조에 침략전쟁을 하지 않을 것과 이를 위해 일체의 전투력을 갖지 않을 것을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헌법에 일체의 전력을 보유해서는 안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아이를 국군이라 하지 못하고 자위대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사생아로 놓아두자니 반쪽 취급만 받고 그래서 헌법을 바꾸어서 온

쪽 취급을 해보고자 하였으나 결국 이 도 여의치 않았다. 전쟁의 참화를 잊지 못하는 민초들의 매서운 눈초리가 히로시마에도 현해탄 건너 금수강산에도 만리장성에도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온족이 만드는 작전을 바꾸었는데 그것은 첫째로 '알고보면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자는 방식이고 둘째는 뒤치다꺼리도 잘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여 힘겨나 쓰는데 대한 저항감을 없애는 식이었다. 이른바 PKO협력법(유엔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법)은 전자에 해당하고, 미일신기이드라인에 따른 유사시입법, 특히 그 하나로 지난 5월24일 일본의 참의원을 통과하여 성립한 주변사태법은 후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주변사태법은 미군의 아시아지역에서의 군사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그동안 일본 헌법상의 제약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일본이 침략당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군이 일본에 주둔할 것, 일본에 있는 미군이나 일본자체가 공격을 받을 경우에 한정하여 공동의 군사행동을 취할 것, 극동 유사시에 미군이 일본시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었다. 미국과 한국의 상호방위조약이 쌍무적인데 비하면 상당히 편무적인 조약의 형태를 빌어 군사조

약(미일안보조약)을 맺어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군사동맹(집단지 자위권)에 다름아니라는 내외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자위대 온족이 만들기 작전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과 이에 따른 유사시입법(주변사태법,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자위대법개정)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침략과 관계없는 미군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군사행동과 일체가 되는 후방지원을 일본이 미국에 약속하기 위해 이를 법제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바야흐로 미일안보조약도 한미상호방위조약처럼 군사행동의 공동주체가 되는 직전단계까지 와있는 셈이다.

발부리를 넣었다가 돌부리에 걸리면 뺏다가 다시 집어넣는 식의 숨죽인 발걸음이 용이 주도하게 의도하고 있는 바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군사적 출동근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다국적화의 외피를 쓰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다량으로 투자되어 있는 일본자본을 보호해 달라는 일본 제계의 요청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미국에 의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패권주의에 편승하여 군사적 역할을 늘려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면서도 새로운 스타일의 군사대국화의 숨죽인 발걸음이 빨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입법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하였다는 것은 오자나 나카소네류의 군사대국주의가 보수본류라고 하는 미야자와류의 군사소국주의를 의회에서조차 제압하였다는 것이고 이제 남은 것은 숨죽인 발걸음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거친 숨을 몰아 쉴 것이냐이다. 하지만 거친 숨소리 앞에 남아나지 않는 것은 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인권일 뿐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6월 9일(수)
제 138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아셈 2000에 도전한다

한국민간단체포럼 준비위원회 결성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2000년 아셈(ASEM : Asia-Europe Meeting)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8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여성단체연합, 녹색운동연합 등 65개 민간단체 회원 70여명은 종로성당에 모여 '아셈 2000 한국민간단체포럼(이하 포럼) 준비위원회' 결성식을 갖고, 민중의 삶에 초점을 맞춘 아셈 준비를 선언했다.

아셈은 아시아 유럽 정상들의 회담을 일컫는 말로 지난 96년 아시아·유럽의 정치, 안보, 대화, 경제협력 강화 및 기타분야의 인적자원 개발, 빈곤경감, 문화적 유대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시작되었다. 하지만 실제 논의는 아시아와 유럽의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에 집중돼 있다.

이에 아시아와 유럽의 민간단체들은 '아셈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등에만 집중하면서 실제 각국 민중들의 삶은 외면하고 있다'며 정상회담에 대항하는 아시아와 유럽 민간단체회의를 개최해 환경, 사회복지 등 사회적 의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왔다. 또한 지난 98년 아셈 제2차 회의(런던)에서 민간단체들은 지속적인 경제·사회 발전 체계를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과제를 정리한 민중의 요구(People's Vision)를 채택하기도 했다. 이는 아셈에 대한 성적 착취행위 근절, 시민사회의 강화(인권, 민주주의, 자결권), 아셈 진행과정의 인간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이날 준비위원회 결성식을 마친 포럼은 여성, 노동, 인권, 환경 등 총 12개 분과로 조직을 나눠 각 분야의 참여단체를 확대시키는 한편 의제를 설

정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들어갔다. 녹색연합 김혜에 실장은 "아셈의 취지인 투자자유화 확대는 아시아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의 대형개발사업을 지원하게 돼 필연적으로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환경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 모든 환경문제는 '자연'의 문제로 그치지않고 자연에 의지해 살고 있는 원주민,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침해와

인권침해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권분과의 간사단체를 맡은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사무국장도 "아셈 정부간 회의가 신자유주의를 강화시켜가고 있는 반면 신자유주의는 각국의 평범한 사람들의 인권문제를 이전보다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포럼이 회의와 논의의 중심이 아니라 행동을 통한 연대를 강화하고 정부간 회의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이 되도록 구체적인 행동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년마다 개최되는 아셈은 오는 2000년 제 3차회기를 맞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현장스케치> 강제철거는 인권침해 행위라더니

정릉 4동 강제철거 현장을 찾아

배대만 남아있는 집 주위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표정의 철거민들과 이들을 바라보며 비아냥거리는 짧은 용역원들의 모습이 교차한다. 그리고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지붕을 뚫어내는 포크레인의 발톱은 서늘하기만 하다. 8일 정릉4동 철거현장. 전경버스 10여대가 늘어서 있고 길목마다 전투경찰이 겹겹이 에워싼 가운데 철거민들은 자신의 집이 무너지는 소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간간히 철거반을 향해 "니그 집도 언젠가 철거될 때가 있을 것이다. 이 나쁜 놈들이!"라고 악담을 하는 것이 철거민들의 유일한 저항이었다.

지난해 11월 김대중 대통령은 강제철거를 인권침해 행위로 인정,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더 이상의 강제철거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병력의 지원 속에, '도시재개발법, 행정대집행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허울좋은 법 집행의 미명아래 자신의 집이 뚝개지는 광경을 바라보던 한 철거민은 "허울좋은 국민정부가 철거민을 다 죽인다"고 외쳤다.

지난 5월 25일 성북구청은 정릉4동에 남아있는 12세대 철거민들에 대해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집 때문에 붙이고 사진을 찍고 돌아가는 것으로 법적 절차를 마쳤다. 그리고, 8일 오전 8시 30분경 전경 3개 중대 600여명이 둘러싼 가운데, 조함 측에서 고용한 용역 500여명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철거민들의 영장요구를 무시하며 힘으로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정릉4동 철거민 유인자(60·여) 씨 등 5명의 철거민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한 강제철거를 저지하던 천주교 빈민사도직 수녀 10여명의 두건이 철거반원에 의해 벗겨지고 타박상을 입었다. 이에 현장을 바라만 보는 경찰에게 철거민들은 항의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철거용역들은 1시간 정도 시간을 끌다가 행정대집행 계고장 사본을 보여주고는 다시 강제철거에 들어갔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②

왜 반인권적인가?

주민등록증 제도를 비판하는 주장에 한결같이 등장하는 것은 '인권침해' 시비이다. 하지만 이에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워한다. 범죄나 사고 발생시 신속한 신분확인이 효과적일테니 지문을 찍어두는 게 뭐 그리 나쁠 것 있나 여겨질 수 있다. 또한 은행에 가건 취직을 하건 꼭 챙기는 필수품인지라 '주민등록증 없는 생활'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 굳이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인권 운운하여 주민등록증에 반대할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다. 주민등록증도와 동거한지 수십년, 너무도 일상적이어서 문제가 제기돼본 적 없는 주민등록증도에 대해 왜 세상스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주민등록증 제도로 인해 과연 누가 '불편'하고 누가 '편리'한가를 짚어볼 수 있다. 혹여 지갑을 잃었을 때 돈보다는 주민등록증 분실을 더 골치아픈 일로 여겨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주민등록증은 국민 개개인의 생활 곳곳을 지배하기 때문에 '미소'나 '부실'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강제적으로 발급함으로써 국민에게 그 피해의 책임을 묻는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 개개인이 내놓고 싶지 않은 정보를 정부는 '담연하게' 수집할 수 있다. 이런 단순한 이유만으로도 불편을 느끼는 것은 국민이고 편리를 만끽하는 것은 국가이다.

인권이란 아주 단순하게 말해 국가 권력이 함부로 국민 개개인의 삶에 개입하고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국가권력을 감시·견제할 때만 보장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본질적 의무를 갖고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제도에서는 이 감시자와 감시의 대상이 거꾸로 설정돼 있고, 국민의 인권을 희생하면서 국가권력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 뒤집힌

관계 속에 주민등록증도의 반인권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주민등록증도는 기본적인 인권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란 '누구나 자기만의 비밀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원치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가 드러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권리이다. 또한 개인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국가를 포함한 제3자에게 알릴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과 각종 국제인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이러한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다. 그런데 주민등록증도는 국민 개개인의 생년월일, 성별을 자동적으로 노출시키는 주민등록번호를 강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상에 관한 141개 항목이나 되는 과도한 정보가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국가권력에 의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속수무책으로 노출되고 언제든지 국가권력의 의도에 따라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이는 주민등록법 자체가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간첩과 범죄자 색출'이라는 불순한 의도로 만들어진 역사를 볼 때 더 그러하다. 더구나 이의 수단인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표는 법률적 규정이 없는 형식적 규정과 시행령에 불과하다. 법률로써만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소위 인권보장의 기본불조차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위적이고 반인권적인 정권이 아니라면 모든 국민을 예비비적인으로 바라보는 '지문날인'을 강제할 수 없다. 과거 일본정부가 제일동포에 대한 지문날인제도를 고집할 때 우리 정부 또한 그 반인권성을 비판했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 취임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인권침해 시비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는 추세"라는 의견을 밝힌 적이 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 지문인식기를 통해 전자화된 형태의 지문을 채취하여 관리하겠다고 한다.

일본의 외국인지문날인제도에 반대했던 한 캐나다인은 지문날인제도가 유대인에 대한 나치의 취급방식이나 남아공의 인종격리정책에 필적하는 것이라고 공격한 바 있다. 국가권력이 기본권에 대한 존중이 아닌 통치의 편리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말이다. 주민등록증도의 반인권성을 이제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때가 왔다. 디지털감식기에 열손가락을 대기 전에 말이다.

조작사건, 다시 기지개 이적단체혐의, 대학생 대거 연행

한양대생 20명이 지난 7일 새벽 경찰청에 연행됐다. 연행자들은 대부분 전·현직 학생회장들로 현재 장안동 대공분실과 군 기무사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연행돼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8일 불구속 석방된 이인복(98년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씨는 "경찰로부터 '반미구국한양'이란 이름의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며 "반미구국한양"이란 단체 이름은 처음 들어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을 연행, 조사한 장안동 대공분실측도 "한양대 주사계열이 오랫동안 활동해 온 것이 문제였다"라고 말해, 이번 연행이 실체가 있는 사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한양대 학생들을 비롯한 학생운동권 등을 탄압하기 위해 장시간동안 준비, 조작된 사건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한양대 총학생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현재 100여명이 학내에서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남기문 씨는 "이번 사건은 정부가 국가보안법 개정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공안세력이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려는 의도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조작사건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6월 10일(목)

제 138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꼬리 잡힌 공작의혹

공안대책협의회 해체 새 쟁점화

검찰의 '파업유도'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공안부가 주도하고 있는 공안대책협의회 해체가 새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9일 참여연대 등 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조폐공사 구조조정 진상조사단'은 서울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조사 과정에서 조폐공사의 구조조정이 '너무도 이상한 구조조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면서 "진행구 검사장의 발언이 일시적 돌출 발언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모두 진상에 명백히 부합되는 사실"이라고 확인하였다.

따라서 진 전 대검 공안부장의 발언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함께 "검찰의 노조파괴공작"의 책임을 가리는 일과 응분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 파괴적 노사 문화를 조장해온 '공안대책협의회'의 즉각적인 해체 △ 정부당국의 노동정책에 대한 일대점검과 대전환 촉구 △ 강화복 사장의 파면, 구속조치 △ 구속 노조간부의 석방, 징계자들에게 대한 원상회복 △ 육천조폐창의 원상회복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조폐공사 구조조정의 문제점은 새삼스럽게 지적된 것이 아니다. 이미 지난 2월에 구성되었던 '진상조사단'은 3월 2일 발표한 진상조사단 보고서에서 "(조폐공사 구조조정은) 노조를 길들이기 위해 중장기적 구조조정을 그르치고 '교각살우의 우'를 범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 근거로는 "공사측이 사전 준비없이(이설 공사도 않은 채) 전격적으로 육천 조폐창을 전면 폐쇄하였다가 99년 1월 18일부터 육천 조폐창을 부분 가동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졸속 조폐창 통

폐합에 따른 부작용의 속출, 엄청난 손해 비용의 발생 등을 들면서 "그 과정에서 격렬한 노사 분쟁을 야기하여 사회적 통합성을 현저하게 저해한 사례"라고 정리했다. 이에 따라 조폐창 통폐합이 졸속으로 추진된 이유를 엄중히 감사하여 그 책임 소재를 정확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최종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양대 노총, 강도 높은 투쟁 계획 한편, 조폐공사와 마찬가지로의 '공작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9일 민주노총 금속노동조합연맹은 경남 창원외의 한국중공업에서도 파업유도 공작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며,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포함시협의회도 강원산업 노동조합에 대한 정치공작이 이뤄졌으면서 포함지침을 항의 방문하였다. 포함지침 항의 방문에 참여한 김병일 포함시협의회 의장 등 26명은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9일 발표한 성명에서 "검찰의 파업유도, 공안탄압이 조폐공사에 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98년의 현대자동차, 만도기계, 한국통신, 99년의 서울지하철 등 주요 쟁의사업장과 약 500명의 노조간부 구속수배조치를 모두 포함해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 진 전 공안부장과 김태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 처벌 △ '폭압기구인 공안대책협의회 해체' △ 구속 노동자 전원 석방, 수배조치 해체 △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의 포기'를 주장했다.

민중노총은 이를 관철하기 위해 10일부터 금속산업노조연맹 산하 16개 노조의 연쇄파업, 20일부터는 10개 노조의 동시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국노총도 16일부터 공기업노조의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검찰 파업유도 공작으로 인한 정부의 도덕성 추락이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저지할 수 있는 노동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관철하기 위해 10일부터 금속산업노조연맹 산하 16개 노조의 연쇄파업, 20일부터는 10개 노조의 동시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국노총도 16일부터 공기업노조의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검찰 파업유도 공작으로 인한 정부의 도덕성 추락이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저지할 수 있는 노동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취중진언" 규명하라

계속되는 국민행동주간

9일 7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명동 한빛은행 앞에서 김태정 장관 경질을 계기로 삼아, 총체적 국정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조폐공사 파업유도 진상규명과 공안대책협의회 해체를 요구하며 "취중진언"이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 캠페인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법무장관 경질을 환원하는 한편,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며 "국민행동주간" 연속집회를 일정 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 진행구 전 공안부장 발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 △ 웃로비 사건 재조사를 포함한 최순영 고위직로비의 실체규명 △ 부패방지법의 조속한 제정 및 공직자윤리 확립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을 요구하는 명동 한빛은행 앞 캠페인은 11일까지 계속된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는 9일 논평을 통해 진행구 전 공안부장이 김태정 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으며 지금도 그 보고서가 남아있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하여 김태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대검공안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은 무엇인지 낱낱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는 9일 논평을 통해 진행구 전 공안부장이 김태정 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으며 지금도 그 보고서가 남아있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하여 김태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대검공안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은 무엇인지 낱낱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는 9일 논평을 통해 진행구 전 공안부장이 김태정 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으며 지금도 그 보고서가 남아있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하여 김태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대검공안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은 무엇인지 낱낱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철거민, 계속되는 수난

경찰 조사시 강제촬영 당해

경찰서에 강제 연행된 철거민들이 경찰관에게 강제로 비디오 촬영을 당했으며 식사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삼성본관 앞에서 열린 '철거민 백석호동지 살인폭력 진짜주범 삼성체단과 민중생존권 쟁취' 집회대중 삼성측이 동원한 다원건설(구 적준)용역과 경찰에 의해 폭행당한 뒤 증부서에 강제 연행됐다. <본지 6월 8일 8일 참고> 8일 불구속으로 풀려난 청담 1동 철거민 신근식(37세)씨는 "경찰 조사시 나를 폭행한 다원용역들이 오기 전까지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말하자 증부서 경찰들이 욕설을 퍼부었으며 비디오를 들고 와 얼굴을 찍어갔다"며 "왜 비디오를 찍냐고 항의하자 '대들면 증거로 남으니 가만히 있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또 "7일 저녁부터 8일 점심까지 경찰서에서 밥을 주지 않았으며, 여성 2명이 연행당시 폭행을 당해 가슴과 어깨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진료를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60여명은 9일 낮 12시 삼성본관 앞에서 모여 경찰의 폭행과 삼성의 만행을 규탄하는 항의 집회를 가졌다.

국제금속노련, 법무부에 공개서한

8일, 국제금속노련(International Metal Workers Federation)의 사무처장 마르셀로 말렌타키씨는 한국 법무부 장관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왔다. 세계 2천만 금속산업 노동자를 대신하여 편지를 쓴다고 밝힌 말렌타키 사무처장은 많은 노동조합원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 한국의 상황을 우려하였다.

그는 노동자에 대한 이러한 탄압은 부당한 것으로 "여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로 인정되어

탄압 받지 않는 노조활동이 한국에서는 법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며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의 회원국인 현재 상황 속에서, 그 기본원칙인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말렌타키 사무처장이 밝힌 '국제금속노련'의 견해에 따르면, "지난 5월의 금속산업연맹의 투쟁은 한국 노동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이 투쟁을 주도한 금속연맹이 "국제금속노련의 일원"이라는 점을 분

<현장스케치> 범국민추모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주간

허원근 23살, 84년 4월 2일 군복무 중 세 발의 총성을 입고 사망
신호수 24살, 5·3 인천사태 후 간첩사건 연루 혐의로 86년 6월 19일 서울서부경찰서에 연행돼 8일 뒤 발목에 수갑자국이 역력한 채 목맨 사체로 발견
노철승 23살, 군복무중 수배중인 형과 관련해 기무사에 연행된 후 사체로 발견
이철규 25살, 조선대학교 교지발간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혐의로 수배중이던 지난 89년 5월 10일, 경찰의 불심검문에 쫓긴 일이 있던 7일 뒤 호숫가에서 온몸에 멍이 든 사체로 발견.

공사로 파헤쳐진 명동성당 옆으로, 검은색 테두리를 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사진들이 걸렸다. 그 주제는 '의문사 진상규명'.

온몸에 멍이 든 채 버거버거진 젊은이의 사진, 불에 태워져 형태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사진 등이 바쁘게 명동거리를 지나던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았고 사람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왜곡된 한국 현대사 속에서 이젠 사진으로밖에 만날 수 없는 사람들과 그들을 기억하려는 사람들. '열사들이 영원했던 세상 우리가 이를 때입니다'란 주제 아래 지난 7일부터 열린 제10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거리전은 비록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명동거리를 지나던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기에 충분했다.

"거봐, 나 군대에 안 갈 거야"라고 친구에게 속삭이는 젊은이부터 "운동권들은 좋아하지 않는데 운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젊은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광주항쟁에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다"는 동국대 99학번 새내기. "아직도 이런 사진들이 의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거리에 걸려야 하나..."라며 혀를 차는 아저씨.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사진을 응시했지만 한결같이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지 1년 반이 된 지금도, 6월 항쟁 12주년을 맞는 지금도 독재정권 하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사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추모 거리전은 명동성당 등에서 13일까지 계속된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6월 11일(금)

제 138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

집회방해 부추기는 개정 집시법

개정집시법을 교묘히 이용해 집회 개최를 방해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민주노총 해고자복지투쟁 특별위원회(전해투, 대표 문재영)는 삼성재벌을 규탄하는 내용의 집회를 갖기로 했다. 집회장소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이건희 삼성회장 소유)과 장충체육관 사이 도로.

그런데 경찰은 신라호텔과 장충체육관 측을 번갈아 부추기며 집회개최를 방해하고 나섰다. 신라호텔측은 집회장소가 '주거유사지역'이라며 집회를 불허해달라고 경찰측에 요구했다. 장충체육관의 운영자인 서울특별시체육관광관리사업소측도 이곳이 '도시계획법상 일반거주지역'으로 서울시소유부지라며 전해투측에 집회 철퇴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해투측은 "집회장소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며 집회 개최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반면, 장충체육관 측은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해 놓고 있어 이 집회의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처럼 집회 개최여부에 대해 집회장소의 소유주가 시비를 걸 수 있게된 것은 개정된 집시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집시법 제 8조 2항은 '집회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 등'으로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생활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해투의 집회개최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자칫 사인간의 분쟁인양 비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실상 이번 사건에는 경찰의 숨겨진 의도가 존재한다.

경찰은 전해투의 집회개최 사실을 양측에 통보했고, 이를 통해 집회개최를 사실상 무산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충체육관 관리장 이정현 씨는 "경찰이 전화를 해와 전해투 측이 집회신고를 냈는데 괜찮겠느냐? 라고 물어왔다고 밝혔다.

이처럼 집회자와 거주자(또는 관리자) 간의 갈등인양 문제를 부추겨 이들과의 '합의'와 '조정'을 유도하는 변형된 개입방식이 문제되는 것은 집회자에게 눈치를 보게끔하고 집회내용의 변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형식상 '신고'라지만 사실상 '허가'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서울대 농대생들은 오는 13일 서울농대 이전문제와 관련 관악구청 앞에서 집회를 갖기 위해 10일 관악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러 갔다. 이때, 경찰은 "관악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사실상 집회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처음 경찰은 집회장소의 협소한(교통불편)을 이유로 내세웠는데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관악구청측에 책임을 미룬 것이다.

또 IS 연행

국제사회주의자, 긴급체포

국제사회주의자들(IS)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또 다시 연행됐다.

9일 오전 이정구(고려대 경제학과 85학번) 씨등 4명은 IS 기관신문인 「노동자연대」를 판매한 혐의(이적표현물 배포)로 긴급체포됐다. 연행자 가운데는 지난 4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홍교선(도서출판 책갈피 영업부장)씨도 포함되었다.

만화사랑방

이동수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③

다른 나라의 주민등록제도, 누가 왜 반대하는가?

주민등록제도는 우리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세계 백여개의 나라들이 강제적인 전국민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반국가세력에 대한 통제, 범죄와의 전쟁, 세금 회피 방지, 출입국 통제 등 다양하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것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북유럽 국가 등 소수의 선진국이다. 이들 국가는 강제적인 전국민등록제도가 아니라 '보건'이나 '사회보장'이라는 특수한 목적 하에 제한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번호'를 전국민 주민등록제도와 하자는 주장이 발을 붙일 수가 없었다. 사기, 세금 회피, 불법 이민 등의 문제로 골치 아픈 미국 사회이지만 '개인의 자율성'이 '국가의 주권'보다 중요하므로 주민등록제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현 클린턴 정부에까지 이르는 역대 정권의 입장이었다.

호주에서는 1986년, 세금 회피 방지를 목적으로 한 '호주 카드(Australia Card)'라 불린 주민등록제도 도입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 카드에 대한 반대투쟁은 호주의 최근 역사에서 가장 큰 시민운동의 초점이 되었다. 수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왔고 정부내의 입장은 크게 갈렸다. 결국, 입법 제안은 1년만에 포기됐다.

프랑스의 경우 70년대 후반까지 종이 재질의 신분증이 소지됐는데, 그것의 위조 가능성이 문제시되었다. 이에 1979년, 정부는 테러리즘 방지와 법 집행의 강화를 목적으로 이를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카드에 고유한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는 부여되지 않았지만, 카드에 수록된 정보가 경찰이나 여타 행정체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데 시민들은 우려를 갖게 되었다. 1981년 들어선 사회당 정부 하에서 이 신분증의 운명은 역전되어, 전산화된 신분카드가 개인의 자유와 시민의 사생활에 실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제기되었던 논쟁점은 주민등록제도가 각 정부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법과 질서의 유지'라는 목적에 과연 효과적이나 아니다.

범죄와의 전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신분확인' 절차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증거수집과 기소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것이 반대측의 주장이다. 오히려 그 사회에서 신분증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클수록 범죄자들은 그것을 역이용하려 들며, 공무원 사회 등에 내재한 '부패의 잠재성'은 이를 도울 수 있다. 따라서 정보의 집중과 그 전산화는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서, 그 정보를 팔아먹기 쉽고 악용하기 좋게끔 길을 터주는 일 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다. 주민등록제도를 지지하는 측이 행정 편의와 손쉬운 통제를 '법과 질서의 유지'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 자체에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인터뷰) 동티모르를 카메라에 담은 금강석 PD "학살의 땅에 봄을"

8월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동티모르. 75년 인도네시아의 식민지가 된 이후 인구의 3분의 1이 학살된 비극의 땅이다. 목숨을 걸고 지난 12월부터 한 달간 동티모르를 취재하고 온 금강석(자유권) PD에게 동티모르의 최근 소식을 들어왔다. (금PD의 작품은 11일 케이블 TV Q 채널을 통해 방영된다)

■ 동티모르를 촬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동티모르 문제에 관심을 가진 건 우리가 풍요로와서 가 아니다. 세계엔 아직도 많은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세계를 돌아보고 세계 인권의 감시자로 서야 하는데, 동티모르는 그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최근 동티모르의 상황은 어떠한가?

여전히 학살이 자행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정부군은 '알라스'지역을 습격해 민가를 불태우고 주민들을 강간, 살인하여 백여 명의 원주민이 사망했다. 또 지난 1월 '리퀴시'지역에서도 인도네시아 정부군의 습격을 받아 45명이 학살됐다. 동티모르의 한 대학생은 최근 전화통화에서 '4월, 인도네시아군이 교회에 폭탄을 던져 5명의 동티모르인이 사망했으며, 요즘은 시내에서조차 민병대(전 인도네시아 동티모르인 등)와 팔렌틴(동티모르 독립운동 게릴라 단체)의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8월 국민투표를 앞둔 동티모르인들의 생각은?

일부 지식인은 독립이후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거라 우려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동티모르인들은 독립이후의 문제 등과 무관하게 독립, 그 자체를 열망하고 있다. 따라서 투표만 진행된다면 결과는 무조건 독립이다. 하지만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동티모르의 독립을 방해하기 위해 민병대를 사주해 대규모 소요사태를 일으키는 등 투표를 최대한 막으려 할 것이다.

■ 팔렌틴(반군)을 만난 소감을 얘기해 달라.

존경심이 우러나왔다. 그들은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자 하는 의지로 하는 것이며 인도네시아군은 돌아갈 곳이 있으나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다'고 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군은 게릴라 몇 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동티모르인 전체와 싸우는 것이므로 우리의 싸움은 단 한 명의 동티모르인이 남더라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랜 기간 산에서 생활해 양식마련 등의 어려움에 처해있으나 방문객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요청하기 보단 국제사회에 좀더 많은 동티모르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했다.

■ 동티모르인들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생각은?

인도네시아 교사에게 교육을 받고 있는 한 고등학생은 '이기기 위해 배운다'고 답했다. 또 거리에서 만난 한 꼬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나?'는 질문에 '팔렌틴이 돼 인도네시아군을 죽이겠다'고 말했다. 동티모르인들의 인도네시아에 대해 대단한 반감을 갖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a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6월 12일(토)

제 138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제동 걸린 불법사찰

정보사찰 뿌리뽑기는 미지수

불법사찰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 9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3단독(김중필 판사)은 검찰에 의해 줄곧 동향파악을 당해온 음영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음씨는 지난 87년 민중항쟁 당시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었다. 이후 경찰은 90년부터 97년 말까지 음씨의 집을 찾거나 전화를 거는 등 음씨의 동향을 파악해왔다. 사찰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참다못한 음씨는 지난해 12월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했는데 당시 서울시배상심의위원회는 "종암경찰서 소속 임수광이 서울지검의 공안사범 출소자 동향파악 지시에 의거해 2월에 1회씩 신청인(음영천)에 대한 동향을 파악, 보고하였다"며 사찰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음씨가 배상을 받아야 할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배상지급 신청을 기각했었다. 이에 음씨는 지난 4월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음씨의 청구소송을 도운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이같은 동향파악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동향파악대상자들도 국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 정보사찰 의혹

한편,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하고 여전히 정보사찰이 진행되어 문제를 낳고 있다.

최근 용산경찰서 정보과 이병목 형사는 인권단체사무실을 알선한 부동산(한강로1가) 업아무개 씨를 찾아가 임대물 알선한 사실에 대해 물어 볼 것이 있다며 경찰서로 찾아오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사찰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회장 이혜숙·전군협)와 새 인권단체를 준비 중인 오창익(전 전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씨 등이 함께 쏘 사무실을 구하려 다니자 이 형사는 부동산으로 찾아와 전군협과 오 씨 등에 대해 캐물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고상만(전 전주교인권위원회)씨가 이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찰의혹'을 제기하자 이 형사는 업씨와의 만남을 부인하다가 업 씨에게 건넨 명함을 근거로 추궁하자 "만난 사실은 있지만, 경찰서로 '오라 가라' 한 적은 없다"고 말을 바꾸었다. 고 씨는 "인권단체의 사무실을 알선한 부동산업자를 협박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며 국민의 정부에 사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말했다.

노동계 대정부 투쟁 고조

청와대에 항의서한 전달

검찰의 파업유도 공작에 항의하는 노동자의 대정부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11일 민주노총 소속 전국 300여 노조 대표자들은 명동성당에서 "김대중 정권의 노조탄압 공작 분쇄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검찰의 파업유도 공작사건은 조폐공

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 의한 일방적 구조조정과 탄압위주의 노동정책이 문제점이 직결되어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 또한 12일 '김대중정권 노조탄압공작분쇄 결의대회'를 서울역에서 갖는 등 이후의 투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삼미특수강 김창남 씨는 "공세를 취하다가 수세에 몰린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을 하나로 묶는 실질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도록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후 5시경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 모여 검찰의 파업유도에 관한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한 행진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행진이 경찰에게 가로막히자 대표 3명을 뽑아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연합 등 13개 노동사회단체들은 대검찰청 앞에서 조계창 파업유도 규탄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김태정 전 검찰총장,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 강희복 조계공사 사장 등 노조탄압공작에 관여한 책임자들을 '공무상집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불법 지배·개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연맹 지도부는 14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 고, 17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갖는 등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국가보안법 국제캠페인팀
도서출판 사람생각/8천원

◆ 구입문의: 사람생각 02-3675-4096

주민전산화 어떻게 볼 것인가

정보통신연대 INP 심포지엄

9일 오후 6시 전주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서는 정보통신연대 INP의 주최로 '주민전산화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발표된 글 중 정승희 씨의 '인구관리의 권력관계'를 발췌해 실는다. <편집자 주>

주민등록증의 쟁점은 '인구' 기록의 내용과 관리방식 및 사용방식이다.

①인구 기록 내용의 쟁점

주민등록증 제도에서 관건은 그 기록 내용이다. 누가 관리하고 누구를 관리하느냐에 따라 기록 내용이 달라진다. 근대 국가에서 '인구' 관리의 방식 차이는 현재 권력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주민등록증 제도에서 기록 내용의 차이는 본질적인 문제의 핵심이다.

②인구 기록의 관리방식의 쟁점

개인의 정보에 대한 분산관리와 통합관리의 차이는 민주와 반민주를 나누는 경계선이 된다. 분산관리는 인권에 적합하고 통합관리는 거대한 대형지배를 초래한다. 통합관리는 인간의 정체성을 한 인격체가 아닌 국가에 통제되는 하수인으로 만든다. 따라서 분산관리와 통합관리는 자유롭게 숨 쉴 공간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가름 짓는다. 통합정보형의 사회는 통합의 강도에 따라 인간을 산체로 죽일 수 있는 살인체제로 연결된다.

③인구 기록의 사용방식의 쟁점

인구 기록의 목적은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즉, 도둑과 간첩을 잡기 위해서란 명분을 활용해 사용방식의 효율성을 취하면 거대한 대형지배가 합리화되는 것이다. 도둑과 간첩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지배층의 주술적 무기다. 따라서 도둑과 간첩을 잡자고 개인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것은 작은 도둑과 간첩을 잡자

고 큰 도둑과 간첩을 키우는 꼴이다. 즉 통합관리의 방식으로 국가의 개인 정보 이용을 무한 허용하는 사회는 도둑이나 간첩과 같이 사는 사회보다 훨씬 못한 무시무시한 사회다.

인권에 무감각한 사회

인권은 항상 투쟁 속에서만 생산되고 존재한다. 서구는 인권을 시민혁명으로 재생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인권을 시혜처럼 받아들여 헌법에 삽입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헌법은 (서구의) 보수적 헌법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는 '주민'기록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는 기록의 분산과 통합에도 무감각하다. 또한 우리는 '주민'기록의 사용에 있어 간첩

과 도둑이라는 신을 내세워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무감각하다. 이러한 무지는 조상의 탓도, 역사의 탓도 아닌 바로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돈이 없어서 선진국에 못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식의 결여로 선진국에 미달되는 것이다.

'나'를 유지하는 방식

내가 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남의 관리대상이 되는 나이고, 하나는 스스로 인지하는 나이다. 나는 매일 국가에 의해 감시받지 않아도 윤리도덕을 가진 나로 항상 유지된다. 우리는 국가의 감시망이 없다고 간첩과 도둑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기로 나는 그렇다. 도둑하나 간첩하나 잡자고 이 고생을 해야 하는가? 나는 이 사회가 자랑스런 민주국가이길 원한다. 주민증에 의해 인권후진국이란 딱지를 용인하는 것은 나를, 우리의 사회를, 내가 속한 인류를 무시하는 인류 모독죄일 뿐이다.

행사와 동정

- 제 10회 민족민주열사·열사 범국민추모제
일시: 6월 12일(토) 오후 5시 / 서대문 독립공원
주최: 민족민주열사·열사 범국민추모제 및 기념주간 행사준비위원회
- 원지복직 쟁취를 위한 투쟁결의대회
일시: 6월 12, 14, 15일 오전 9시 / 신라호텔 앞
주최: 민주노총 해고자복직을위한 특별위원회 (02-637-7437)
- 전국 여성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토론회
일시: 6월 15일(화) 오후 2시 /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2호
주최: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추진위원회
- '99 전국환경활동가 워크숍 「생태적 관점에서 다시, 진보를 바라본다」
일시: 6월 17일(목)-19일(토) / 국가전통행정연수원
주최: 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 (02-587-8997)
- 한국여성학회 제 15차 춘계학술대회
일시: 6월 19일(토) 오전 10시 / 충남대 산학연교육연구관 3층 대회의실
주최: 한국여성학회 (02-2299-2403)
- 우리 춤, 우리가락의 신바람 '대학로 단오제'
일시: 6월 20일(일) 낮 12시 / 대학로
주최: 민족문예 일궈가는 신바람
- 제 8회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존·보호·발달을 위한 포럼
'21세기 한국어린이와 민간단체'
일시: 6월 22일(화) 오후 1시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
주최: (사)한국아동단체협의회 (02-766-2269)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cho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6월 15일(화)

제 139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영남위 구속자 단식풀어

부산구치소장 사과, 폭행 진상 밝혀야

폭력강제이감에 항의해 단식농성을 벌이던 소위 '영남위위원회' 구속자들이 지난 11일 구치소장의 사과를 받아 들여 16일만에 단식을 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오전 11시 송인섭 부산구치소장은 김기대(김창현 울산전 동구청장의 부친) 씨 등 영남위 구속자 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감 당시 발생한 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이감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영남위 구속자들이 단식을 풀고 가족들의 구치소 앞 항의농성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낮 12시경 김창현 씨 등 구속자 4명은 가족들과 상봉했고 구치소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운을 뗀 뒤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감문제 역시 법무부에 건의해 책임지고 부산교도소 이감자들이 다시 구치소로 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감 당시 발생한 폭행문제와 관련해 "관련자를 조사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부검진 등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위 구속자들과 가족들은 "사과를 받아들여 농성을 풀기는 했지만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은 아직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31일 폭행으로 인해 구속자 전원에게 진단서가 나온 상황"이라고 법적 조치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구치소 폭력이감에 대한 진상규명대책위는 "구치소장의 사과와 약속에 의해 지금 단식과 노숙투쟁은 풀지만 폭행에 대한 진상조사는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대한변협의 진상조사단 역시 15일(화) 부산구치소 등을 방문

해 조사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영남위원회 구속자들과 가족들은 부산구치소측이 지난 5월 31일 재판중인 미결수용자들을 강제 이감 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구속자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구타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여왔다. <본지 6월 1, 2일자 참조>

민주노총, 단식농성 돌입 대통령이 책임져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강용·민주노총)은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공작 의혹이 여야간 담리담리에 이용되고 국정조사권 발동이 지체되는 것에 항의, 14일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검찰 공안탄압 공작의 최고 책임자도 대통령이므로 문제해결의 당사자도 김대중 대통령"이라며 △공안대책협의회 해체 △검찰의 공작수사로 발생한 노조탄압 진상규명과 관련자 구속 △구속노동자 석방과 수배해

제 △구조조정·정리해고 중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노총의 관계자는 "많은 노동자들은 김대중정부에 희망을 걸었지만 과거 군사정권과 똑같이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정책으로 일관해 결과적으로 더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며 "현 정권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금속산업연맹 부위원장 오종채 씨는 "현장 조직과 단식을 병행해야 하므로 어느 때보다 힘든 단식이 되리라 예상되지만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노동정책을 바꾸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단식에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14일 민주노총 전북지역 본부는 대표자회의 결정으로 국민회의 전북도지부 당사에서 항의농성 중 전주 중부경찰서로 연행되었다가 2시간만에 풀려났다.

민주노총은 14일부터 16일까지 매일 12시 경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15일 부터는 민주노총 산하 단위노동조합들이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16일 2시에 맞추어 민주노총 소속 전 단위노조에서 중식 규탄집회를 갖는다. 또한 17일 전국동시다발 규탄집회를 시작으로 사업장의 조건에 따라 시한부 파업에 들어가며, 18일에는 국제민중행동의 날에 참여할 예정이다

주요공판안내

- ▶ 6월 15일(화) 서준식(국보법, 보안관찰법 등) 오후 4시, 서부지법 407호, 결심
- ▶ 6월 16일(수) 오봉석(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 1부, 선고
- ▶ 6월 18일(금) 강재우 외3(국보법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19호, 합의 22부, 속행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④

차별을 부르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과 같은 강제적인 신분증 제도의 기능 자체에 '차별적'인 관행이 내재해 있다. 범죄예방이나 불법취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취한다는 '확인절차'가 그 사회의 취약계층 또는 소수자를 겨냥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지목된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의 외국인등록증 휴대 의무이다. 지난 52년 도입되었던 외국인 지문날인 등 특별법이 외국인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거센 비판 속에 40여 년만에 폐지되었으나, '외국인등록증을 항상 소지해야한다'는 의무조항은 폐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일동포들은 '특별 영주자의 역사적 경위를 배려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부담한 제한을 계속 가하려는 것'이라며 비난하였고, 유엔 인권이사회도 일본정부의 조치는 일본이 가입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부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프랑스에서는 경찰이 '흑인'을 표적삼아 신분증을 확인하는 일이 도가 지나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심심찮게 문제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거리의 무법자, '불심검문'이 문제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번드르하게 차려입은 신사나 숙녀에게는 면제(?)될 불심검문이 어수룩하게 차려입은 사람에게는 걸려들기 쉽고, 중장년에게는 관대하지만 어린 학생에게는 가차없으며, 누구에게도 조심스러운 것이 일용노동자나 노숙자 등에게는 스스로없이 행해질 소지가 다분하며, 실제로 그 피해에 대한 호소가 잦다. 또한 특정 장소나 행사에 출입하려는 사람에게도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인기가수의 콘서트장에 입장하는 사람에게면 면제될 것이 통일음악회나 정치집회인 경우라면 어김없이 행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주민등록증도는 그 시행에 있어 모순을 안고 있다. 앞서 지적한대로 '차별적'인 확인 절차가 문제될 뿐만 아니라 차별적인 적용을 피하겠다고 '무작위'로 신분을 확인하려 든다면 전국민을 범죄인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주민등록증도가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차별적'인 신분확인 절차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말이거나 전국민을 항상 검문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 이 캠페인은 매주 화요일마다 계속됩니다. <편집자 주>

「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국가보안법 국제캠페인팀
도서출판 사람생각/8천원

▲ 구입문의: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주간인권호름

(99년 6월 8일-6월 14일)

1. 내베다 잘린 꼬리, 김태정 법무장관 해임
국민의 거센 항의에도 아랑곳없던 김 대통령, 결국 '조폐공사 파업유도공작' 관련 김태정 법무장관 문책 해임 (8일)

2. 아셈 2000에 도전한다
아시아·유럽 정상회담(아셈) 2000년 서울개최에 대비 한국민간단체포럼 준비위원회 결성, 정부간회의가 방관하는 '민중의 요구' 적극 제기하기로 (9일)

3. 법원, 불법사찰에 경종
시위 참가 경력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동향파악에 법원이 제동, 사찰에 의한 정신적 고통 등을 인정하여 2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9일)

4. 6월 항쟁 12주년
각계인사 610인 선언, "총체적인 민주개혁 추진" 주장 (9일)

5. 지금은 남북대화 중?
7일부터 북한 경비정 잇따른 북방한계선 침투, 남한은 해군함정 증강투입 등 강공작전 선언 (10일), 남북당국간 대화 분위기에 찬물 우려

6. 공안대책 그만 세우고 우리 요구를 들어라
붓물 터진 대정부 투쟁, 연이은 집회·시위 및 금속산업연맹 15개 노조 항의 파업 (10일), 민주노총 무기한 단식투쟁 돌입 (14일), 공안대책협의회 해체 등 촉구

7. 정부가 못하겠다면 우리가 한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공작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지지 부진에 시민단체 진상조사위원회가 나서 옥천조폐창 뿐 아니라 서울지하철 공사 등 다른 공공부문 사업장도 조사하기로 (14일)

8. 전쟁은 과연 끝났는가?
코스보 군사협정 타결 (9일), 나토폭격 중지 유고군 철군 시작 (10일), 78일만에 포성은 멈췄지만 대규모 난민 귀환 문제 및 '피의 보복' 등 후유증 심각, 국제평화유지의 보루 유엔 및 그 현장과 조약의 권위를 땅 끝에 떨어뜨린 도발이었으나, 재건비용 마련엔 뒤로 물러앉아

9. 민주화의 함성, 멀고 있는 독재자
인도네시아 '44년만의 자유선거' 만끽, 야당 지도자 '메가와티' 승리, 수하르토에 대한 과거청산의 심판대 예상 (12일)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an.net ·http://www.iworld.net/~rights

문턱 안가리는 경찰

학원담당경찰, 새벽 도서관 난입

학원 내에서 경찰의 무리한 행동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2일 새벽 3시 30분 경 아산경찰서 소속 맹종렬 형사는 이 학교 도서관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시험기간이라 24시간 개방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던 학생들은 맹 형사를 발견하고 학교에 들어온 이유를 추궁했다. 맹 형사는 한총련 대의원으로 수배중인 이 학교 총여학생회장 장소영 씨(금융보험과 4년)를 잡기 위해 들어왔다며 "우리팀(아산서 소속 경찰) 20여 명과 천안보안수사대 소속 경찰이 포진하고 있다. 타 수사기관에 잡히느니 우리 쪽으로 순순히 나와 자수하면 불구속처리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도서관에 있었던 김성호(순천향대 경제과 96) 씨에 따르면, 맹 형사가 '빨리 들어와'라고 전화를 걸자 휴게실에 있던 사람 10여명이 들어왔다. 휴게실에 사복차림으로 버젓이 앉아있던 사람들이 여경을 포함한 경찰이었던 것이다.

김 씨는 덧붙여 맹 형사가 '이날 오전 5시까지 수배중인 학생이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도서관에 들어가 강제 연행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들은 3층 열람실에 책상과 의자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학교 내에 있는 학우들을 불러모았다. 이에 5시 경 즈음 맹 형사는 '보안수사대를 불러오겠다'며 사라진 뒤 나타나지 않았다. 아침이 되자 학생들은 학생과에 연락을 취했다. 이때 학생과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새벽의 대학 도서관 난입에

대해 맹 형사는 "이날 타 기관 수사요원의 차원이 학내에 3~4대 있었다. 자세한 예기는 할 수 없지만 어차피 연행되거나 인젠가는 연행될 상황에서 밖에 많은 경찰이 있다고 겁을 주어 자수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본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한편 순천향대 학생지도담당 최기수 씨는 "경찰을 학교로 요청한 적은 없다. 우리 학원 담당형사가 학생을 도서관에서 잠깐 만나 이야기하고 간 것 같다. 당시 도서관에 없어서 뭐라 이야기 할 수는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학원을 제집처럼

또한, 감리교신학대학교 재학생인 김혜영(신학과 93) 씨는 담당경찰의 학원 상주를 문제삼았다.

김 씨에 따르면 14일 정오경 정문 수위실 앞에서 서대문서 정보과 소속 감진권 형사가 자신을 포함한 총학생회 간부들에게 부총학생회장의 시위 사진을 갖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했다. 이에 학생들이 항의하자 "단지 몸 조심하라고 알려준 것뿐이지 위협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또한 감 형사가 평소 수위실에서 직원들과 낯술을 마시고 낯술을 자는 등 학교에서 살다시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이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위협한 일도 있다. 대진대학교의 김대호(도시공학과, 94) 씨는 "올해 농활을 다녀올 계획이었으나 포천경찰서 정보 2계 차야무게 형사가 지난 5월 25일 경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못가게 하라는 말을 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학에 다니는 정야무게(여·

96) 씨의 부모에게 '딸의 애인이 경찰서에 2번 들락날락 거린 나쁜 학생이다. 어울리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는 등의 전화를 걸어 물의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서준식 씨 결심공판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구형

15일 오후 4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407호 법정에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서 씨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이에 조광희 변호사는 "문제가 된 레드헌트"는 이미 다른 재판들을 통해 이적성 부분에 대한 혐의를 벗었으며, '참연시작' 역시 각급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고 전국 서점에서 누구나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점입형의와 관련해 "경찰에서 인권영화제작에 대한 압력을 행사해 불가피하게 홍익대학교측이 퇴거를 요청한 것이지 서 씨가 고의적으로 주거점입을 범한 것은 아니다"라며 서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을 피하지 말고 우리 사회가 인권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판결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서씨의 선고재판은 오는 7월 6일 열릴 예정이다.

서 씨는 그동안 97년 제 2회 인권영화제 개최와 관련,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의 혐의로 1년 반에 걸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이날 검찰은 서 씨에게 적용했던 '음반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사전심의제)'과 '기부품모집규제법' 부분 공소를 취하했다. 이는 최근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 등으로 공소유지가 어렵게 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3면>

1999년 6월 16일(수)

제 1391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17)

조폐공사 사건, '빙산의 일각'

<편집자주> 공권력의 파업유도 파문속에 노동자들은 매일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한편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진상조사위원회를 확대개편하고, 공안대책협의회(이하 공대협)의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시점에서 <인권하루소식>은 공대협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해본다.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을 접하는 노동계의 시각은 "조폐공사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공안검찰의 노동자 탄압 공작은 구조조정을 밀어부치기 위한 수단으로 전국에서 광범위하고 입체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노동운동 관계자들은 과거 안기부(현 국정원)의 역할을 검찰이 대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안기부는 현장에 상주하며 노동자들의 쟁위 행위에 개입한 반면 검찰은 현장에 직접 나타나지 않지만 경찰, 관계 공무원들을 지휘하며 개입한다는 것만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민주노총 산하 주력연맹인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성현, 금속연맹)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검찰의 개입 의혹이 짙은 사업장 20여 곳의 사례를 밝히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금속연맹은 △민주노총 주력연맹의 무력화 △구조조정 사업장 노조 무력화 △주요 강성 노조의 무력화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노조의 무력화 등으로 공안검찰의 금속사업장에 대한 개입 의혹을 유형화시켰다.

지난 6월 8일 마산창원지역의 한국중공업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 반대를 차단하기 위해서 회사의 불구속 요청도 무시한 채 노사 교섭 중에 노조 지도부를 검찰이 구속함으로 파업을 유도하였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또, 지난해 대표적인 파업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에서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선례를 남기려고 극한 투쟁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했다.

98년 2월 노사간에 '인위적인 감원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만도기계

에서는 7월 갑자기 정리해고 통보가 이뤄졌고, 이에 대해 노조가 전면파업으로 대응하자 노조위원장 등 노조측 단체교섭 위원 전원을 구속하였다.

9월초에는 경찰병력의 전격 투입으로 2천6백명이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에 재개된 교섭석상에서 회사측은 "경찰병력의 투입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힌 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가 비밀비재하게 이뤄지던 사업장인 한국휴우 등에서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고 노동조합 간부와 노동자들을 오히려 구속해 편파적인 법집행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공대협의 노동쟁의에 대한 개입 의혹은 비단 금속연맹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서울지하철 파업 하루 전인 4월 18일에는 서울지검 공안2부(당시 신태영 부장검사)가 "지하철 파업 돌입 시 3일 안에 공권력 투입, 파업 지도부 전원 구속수사 및 조기집업 방침"을 천명하였고, 검찰은 파업 돌입 첫날인 4월 19일 서울지하철 공사측을 압박하여 노조 대의원 171명을 일괄적으로 고소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사측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미북귀 조합원에 대한 직권면직을 협박하고, 4월 21일에는 마찬가지로 직권면직 대상을 3천여명이라고 밝히는 등 월권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검찰의 개입의혹에 대해 민주노총 울산본부 이창규(35) 교육선전부장은 지난해 현대자동차의 경우를 들면서 "공안검찰이 주도하는 공대협의 방침 때문에 현장에서는 일체의 교섭도 진행될 수 없었다. 오로지 강경탄압만이 요구될 뿐이었다. 정리해고를 반대

한 울산동구청장 등을 반국가단체사건으로 구속한 것도 공대협의 짓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지하철노조 이상필(40) 사무국장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정리해도 공안검찰의 개입은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며, 조만간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에 대한 공대협의 공작 의혹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안검찰이 주도하는 공대협의 파업유도, 노동쟁의에 대한 개입은 단지 조폐공사만이 아니라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돼 왔다.

여성 고용 위험 수위

여성노동조합건설을 위한 토론회

15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전국여성노동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주최로 '전국여성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추진위 위원장 최상림 씨는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남성의 노동조합 조직율은 87년 15.3%에서 97년 14.9%이지만, 여성노동자의 조직율은 87년 11.1%에서 97년에 5.6%로까지 떨어졌다. 또한 남성의 경우 98년 9월 현재 정규직 비율은 63.4%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여성의 경우 정규직 비율은 32.9%에 불과해 여성인근노동자의 약 67.1%가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토론회 참가자들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여성고용상황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와 권익확보를 위한 여성노동조합 건설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이날 추진위 관계자는 서울·마산·창원·전북 등 8개 지부가 모여 8월 말경 전국여성노동조합 창립총회를 갖고 연합노조로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림

정부의 행정법 개정관련 인권단체 워크숍

참여연대 2층 강당 / 오늘(16일) 오후 2시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최후진술 요약

방금 검사는 5년이라는 어마어마한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초등학교 4학년 짜리 딸에게 오늘 아파가 재판 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은 불안한 표정으로 아파 또 감옥에 가느냐고 하더군요. 재판은 피고인은 물론 때로 피고인 가족에게까지 피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5년은 엄청나게 무거운 구형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두가지만 얘기하려 합니다. 인권영화제는 이 사건이 걸린 제2회 인권영화제만 제외하고 제1회도 제3회도 대상황이었습니다. 작년 제3회 인권영화제는 6백만원 이상의 저자를 내긴했지만 저는 많은 관객으로부터 감사와 격려의 말을 들었습니다. 상업적인 고려를 한다면 도저히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없는 훌륭한 영화들을 보여주어서 고맙다는 거였습니다. 6백만원이라는 저자가 낮음에도 저는 큰 보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2회 인권영화제만 왜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가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제2회 인권영화제가 열렸던 해인 97년 6월에는 한총련 출범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안검찰은 한총련 대의원 1600여명에게 한총련 탈퇴를 종용했습니다. 탈퇴를 하지 않으면 구속시킬 것이고 탈퇴를 하면 훈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검찰의 처사는 분명히 국가권력의 폭력입니다. 많은 지식인들은 공안검찰의 이런 방침이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을 했지만 저는 그 정도 비판으로는 공안검찰의 폭거에 도저히 제동을 걸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어느 월간지에 쓴 칼럼에서 학생들에게 한총련을 탈퇴하지 말 것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과거에 즐기차게 사상 전향을 감요 받으면서 긴 감옥생활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심의 자유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을 목격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본심과 다른 선택을 한 후 양심의 가책 때문에 평생을 괴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 또한 많은 지식인들은 국가권력의 폭력에 굴복하고 '변질'했다는 아픈 기억을 잊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의 논리를 만들어내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내심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은 사람을 폐쇄시키게 마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총련 운동방식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가권력이 젊은이들의 양심의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커다란 고통을 강요하는 것을 인권운동가로서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부당한 폭력을 씩씩하게 견디며 젊음을 지켜내라는 취지의 칼럼, 그것이 바로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 칼럼은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게 되었고 학생들 사이에 퍼져갔습니다. 공범위험 학생운동 죽이기 정책을 했던 공안검찰은 바로 이 칼럼에 대한 보복을 인권영화제를 빙자해서 감행했던 것입니다. 연행된 후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그리고 검찰에서도 본 사건과 아무런 관계없는 이 칼럼에 대하여 집요하게 추궁을 받으면서 저는 확실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검찰의 보복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제1회 인권영화제가 무사히 이루어졌는데 2회 영화제만 왜 문제가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요컨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서준식의 '필화사건'인 것입니다.

저는 재판 행위가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도외시키고 개개 행위만을 들춰내 무슨 무슨 법률을 위반했다는 식으로만 끝나는 재판을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첫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 적용의 평등권이라는 문제입니다. 저는 재판 과정에서 몇가지 사실에 대한 검찰과 재판부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심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요구한 것은; 첫째, <레드 헌트>는 부산 국제영화제에서도 상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권영화제에서 <레드 헌트>를 상영했던 서준식은 왜 구속되고 부산 영화제를 주최했던 부산 시장은 구속되지 않습니까? 둘째, <레드 헌트>가 부산 영

화제에서 상영되었을 때 사전심의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심의 통과 시킨 심사위원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요? 셋째, 보안관찰을 항상적으로 위반해온 저를 6년동안이나 놔두었다가 왜 하필이면 97년 가을에 갑자기 잡아들였는지요? 넷째, 이른바 '이적표현물'인 <참된 시작>을 우연히 집에 가지고 있었던 저는 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고 이 시집을 직접 쓴 시인, 발간했던 창작과 비평사 그리고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는 서점 주인은 왜 구속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금까지의 재판과정에서 한번도 설명된 일이 없었습니다. 재판장님께서 판결문을 쓰실 때 반드시 이런 물음에 분명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행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처벌되고 다른 사람은 처벌되지 않는 기현상을 혹 '이적(利敵)'의 의도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설명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재판장님, '이적' 의도의 유무 즉 사람의 내심을 심판하는 일이 본래 재판이 해야 할 임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판결문을 쓰시면서 저에게 '이적'의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가 곤혹스러우시면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위헌 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저는 직업적 인권운동가입니다. 인권운동가는 밥을 먹을때도 인권을 생각합니다. 물론 인권운동가에게는 재판을 받는 행위도 인권운동의 일부입니다. 저는 이 재판이 우리나라의 인권현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법정에 피고인으로서 서는 일을 인권운동가의 보람이요 자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에게 실형이 내려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재판장님께서 행여 이 재판의 핵심쟁점을 피해 가지지 않을까를 우려합니다. 부디 핵심쟁점을 피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명쾌한 판결문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작성하실 때 인제가 우리사회가 인권이 존중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염원을 가지고 작성해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전.하) · E-mail:rights@cha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6월 17일(목)

제 1392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행형법 제대로 고쳐라

인권단체 워크숍 개최

인권단체들이 행형법 개정에 착수했다. 지난 5월 29일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행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회원 30여명은 16일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정부의 행형법 개정관련 인권단체 워크숍'을 열고 행형법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발제에 나선 최정화(민주법학연구회) 씨는 '법무부가 내놓은 개정 행형법은 이미 실행되고 있는 전화통화, 귀류 등의 내용을 법제화하는 수준에 머물러 소폭 개정에 그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정부가 민영교도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데 있다'고 밝혔다.

손민영(36, 소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4년 구금) 씨는 자신의 교도소 경험을 소개하면서 '법무부 개정안으로는 수형자의 청원권을 보장할 수 없다'며 '청원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집행 보고전을 폐지하고 청원권 행사를 막는 교도관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실천시민연대 준비위원회 오창익 씨는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및 무기사용 범위가 자의적으로 해석돼 수형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사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집권·서신 및 집행에 대한 제한 금지,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특별 규칙의 신설 등이 논의됐다.

한편 민영교도소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민영교도소 설치의 법체계를 바꾸는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개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며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영교도소를 설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담양선교회 임석근 목사는 '민영교도소는 현 상태에서 종교교도소의 설치를 의미'한다며 '수형자들의 교정교화는 교리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는 외국의 종교교도소 출신자들의 재범률이 낮은 것에서 입증되었다'며 민영교도소 설치의 타당성을 역설했다.

행형법 개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 민영교도소 설치에 관한 세부 시행령은 9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이날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모아 오는 18일 법무부에 제출하고 개정 행형법안의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대중 정권은 '배반의 정부'

각계 대표 총체적 개혁 촉구

'김대중 정권 1년 6월에 대한 평가' 토론회 참석자들은 '총체적 민생파탄, 반민주적 공안통치'로 결론 지었다. '민중생존권 쟁취·사회개혁·IMF 반대 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김진균 교수 등) 주최로 16일 송실대 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시국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와 같은 결론에 한결같이 동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영태 교수(인하대 정치학)는 IMF 협약을 이행하는 것에 중점을 둔 김대중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정치적, 정책적 리더쉽'만이 아니라 최근의 일련의 부패, 의혹

사건들을 통해서 개혁성과 도덕성마저 상실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진보진영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로 대안적 정치세력을 만드는 일'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노·농·빈민 및 여성 부문의 관계자들도 민생파탄에 공감과 분노를 표시했다. 허영구 민주노동당 부위원장은 김대중 정권의 노동정책은 "분할지배전략"을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공안적·폭력적 노조 탄압으로 일관해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최진국 정책위원장은 "기초산업인 농업부문에 대해서도 예외없는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 통제의 강화, 농가부채 문제, 농어촌 학교와 보건소의 통폐합을 사례로 들었다. 전국민연합 양해동 정책위원장은 빈민 문제에 대한 정책이 전무하다고 비난하고, 강제철거 중심에서 '선대책 후철거'로 철거정책을 전환할 것과 노점상에 대한 단속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않아 공허함을 남겼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명동성당에서 열린 '현 시국에 대한 원로 및 각계 대표자 선언'에서는 김윤환 경실련 대표, 김중배 참여연대 공동대표, 최영도 민변 회장 등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 40여명이 서명한 시국선언이 발표됐다. 시국선언에서 각계 대표들은 "국민의 정부"에서 '국민'이 배제되고 있다"면서 "빠이른 반성과 비장한 개혁의 결단"을 촉구했다. 각계 대표들은 △조폐청과업공작 등 의혹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의 전면적인 도입 △공안대책협의회의 해체와 독립적인 국가인 권기구의 설치 등을 당면과제로 내거는 한편, 이들 개혁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했다.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2)

한총련 탄압부터 노숙자 단속까지

지난 3월 12일 대통령 훈령에 의해 법적 지위를 가진 공안대책협의회(이하 공대협)가 탄생했다. 대검찰청,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검 공안부의 건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다. 대검 공안부장이 의장을 맡고 국가정보원, 경찰, 기무사 등의 정보기관과 통일부, 노동부, 교육부 등 13개 행정부처의 국장급 15인이 참가하는 김대중 관 '관계기관대책회의'가 불법의 굴레를 벗어던진 것이다. 이 막강한 기구는 중앙만이 아니라 지방 검찰청마다 설치되었다.

노태우 정권 때의 공안합동수사본부 가 다시 등장한 것은 96년 한총련 학생들의 연세대 사태를 계기로 '한총련 좌익사범합동수사본부'가 발족하면서 부터였다. 이 기구는 그 다음해 5월에는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로 개칭되었다. 공대협의 전신인 이들 조직을 검찰 공안부가 안 기부(현 국가정보원)를 제치고 주도 하였고, 그때로부터 오늘의 비극은 시작된 것이다.

공대협의 전신이었던 초기 합수부에서는 오히려 한총련에 대한 대책이 강조되었던 시기가 있었다. 한총련의 외해를 목적으로 설치되었던 합수부는 그 목적답게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대의원들에 대한 탈퇴를 강요 하였다. 96년부터 이어진 한총련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은 결과적으로 학생운동을 크게 위축시켰다.

'신공안'마저 거부한 공안검찰

김대중 정부의 출범 이후 박상천 전 법무부장은 '신공안 정책'을 주창했다. 그의 신공안에 대한 발언은 '질서와 인권의 조화'로 집약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천명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면서 인권보장을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남용 금지의 원칙이 제시되고, 전향제도 대신 준법서약제가 도입

되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1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만 413명에 이르렀다. 그중 92.3%인 381명이 국가보안법에서 가장 반인권적인 독소조항이라는 7조(고무·찬양등) 위반이었다. 그리고 90% 이상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결과적으로 공안검찰이 주도하는 합수부에서는 신공안은 적용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조폐창 파업 유도 공작을 취중에 발원한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그는 합수부와 공대협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다)은 올해 <월간 말> 4월호 인터뷰에서 '나는 신공안이란 단어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자신을 '진공안이신 신공안이 아니다'고까지 극언을 했다.

노숙자도 불순세력

합수부는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계속 표명해왔지만, 합수부의 관심사는 공안사건에 제한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22일에는 대검 공안부장(당시 진형구 부장)이 주도하여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합수부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실질 노숙자들이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실제 상태에서 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에게까지 공안적인 잣대를 들이민 것이었다.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었다.

또, 98년 12월 11일 열린 회의에서는 구조조정에 반발하여 파업을 벌이는 행위만이 아니라 기업주들도 엄벌에 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노동자에 대해서는 합법, 불법을 가리지 않고 가치없이 대대적인 구속과 수배로 철퇴를 가했던 반면 지금까지도 구조조정에 협조하지 않는 재벌을 처벌한 예는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가 없다.

최근의 부산구치소 '영남위원회' 강제

이감 사건도 공대협이 깊숙히 개입한 작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구치소측은 자신들이 아닌 윗선에서 결정난 문제라는 인상을 풍겼으며, 구치소장도 자신의 진급에 필경 악영향을 미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담당했다는 증인들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이처럼 공대협은 그 전신이었던 합수부 시절부터 정권 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공안적인 잣대를 들이댔으로써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현저히 후퇴시켜 왔다. 이에 대해 사회진보연대 정종권(32) 사무국장은 "결코 공권력에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고 질타 말하면서 "체제 수호를 위해 노동자와 민중들의 투쟁에 대해 공안검찰이 강경 탄압을 주도한 것"이 공대협의 본질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좋은 벗들' 설립기념식

남과 북이 친구 되자

16일 정동회관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가 '사단법인 좋은 벗들(이사장 법륜, 이하 좋은 벗들)'이란 새 이름으로 설립기념식 및 '1999 민족의 희망찾기'의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좋은 벗들'은 지난 96년 31개 불교단체가 모여 진행해온 북한식량난민 지원 활동을 계승하며, 평화와 인권을 위한 활동을 폭넓게 벌일 계획이다. '좋은 벗들'은 종교·사상·정치 등을 초월해 남과 북이 친구가 되자는 취지에서 '불교'를 빼고 만든 이름이며, 지난 5월 통일부로부터 사단법인 승인을 받는 한편, 북한식량난민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1999 민족의 희망찾기'를 발간했다. 이날 이사장 법륜 스님은 "입력각 근처에서 굶주림에 고통받는 소년을 목격하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북한의 고통을 덜어주고 해결하기 위한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독료 내셨나요?
자동이체도 가능합니다.
지로번호 7618848

특별기고 홍세화 씨의 귀국, 그리고 또 한번 잊혀진 사람들

이우갑(신부·빠리 국립 사회과학 고등연구원(E.H.E.S.S.) 종교 사회학 전공)

홍세화씨가 귀국했다. 남민전 사건으로 한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주변을 서성일 수밖에 없는 망명객으로 20여년을 외국에 머물다, 마침내 그가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은 본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었다. 이미 한국의 많은 이들이 그가 쓴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자'를 통해 그에 대한 기대와 그리움을 간직해 왔고, 그의 아픔을 어느 한 망명객의 것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아픔으로 여겨 왔기에 그의 귀국은 반가움을 넘어선 뜻깊은 것이었다.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자'는 한 개인의 사적인 기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굶어지고 상처난 역사와 그 속에서 아픔 받는 사람들에 대한 차분한 보고와 기록이었고, 그의 덕분에 많은 이들은 잊혀져 있는 시대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잊혀진 듯 살아가는 삶의 단편을 엿볼 수도 있었다. 그런 그가 20여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은 무엇보다 그에게 설렘이 가득한 기쁨일 것이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나마 달라진 한 역사를 실감하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아울러 먼 나라의 자칫 잊혀지고 말 망명객을 늘 잊지않고 지켜봐 준 그의 이웃들, 예써 귀국을 도운 그의 동료들 특히 '귀국 추진 모임'의 모습은 홍세화씨 본인에게만이 아니라 옆에서 보는 다른 이들에게도 호호함과 고마움으로 다가온다. 그 야말로 고마운 '이웃'들 이다. 분명히 그렇다.

그러나 막상 이곳 '빠리'에서(혹은 유럽에서) 그의 귀국을 바라보는 몇몇 사람들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하고 미묘하다. 분명히 축하할 일이지는 하면서도 다른 한 권 속상함과 우울함이 밀려들어서 어찌 설명해야 할까?

이 글이 결코 홍세화 씨의 귀국에 대해 어떤 불만을 표하려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그의 귀국과 더불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점을 당부하고 싶다.

이곳 유럽에는 이런 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꿈에 그리는 고국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다.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지만 대략 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그 중 어떤 이들은 홍세화 씨와 같은 망명객이기도 하고, 외국에 있는 동안 북한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과거 반정부 활동(구체적으로는 김대중씨 구출 운동 등에서 시작된)의 전력으로, 또는 과거의 슬한 조작사건의 관련자라는 이유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 중 많은 경우는 독일, 불란서 등

파리의 택시 운전사의 귀국 뒤편에 여전히 세상의 주변을 서성이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의 국적을 가졌는데도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한국 방문을 계획하면 이곳에서 미리 간섭을 받거나 이런 저런 사유서 작성을 강제 받거나 한국에 가서 만날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기 때문이다.

돌아가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와 죄목은 다를 지라도 홍 씨와 그의 귀국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남아있는 이들은 모두 다 한국의 어지러운 역사의 장면들이요, 아픔들이요, '돌아가야만 할 사람들'인 것이다. 남아있는 이들도 모두 '택시 운전자'처럼 혹은 그저 비슷한 일들로 살아가는 이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처지를 차분히 공감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재주와 기회를 갖지 못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줄 힘이 있는 친구들도 갖지 못했다.

홍세화 씨가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상황이 진정 역사의 변화이고 한국 정치 수준의 발전이고 지식인들의 연대 때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

나, 홍세화 씨가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분명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닌 것 같다. 그럼 무엇인가?

홍세화 씨의 귀국을 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가 빠리에 사는 동안 자신의 처지와 마찬가지로 애타게 그리면서도 한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잘 알고 있었던 이상 그는 그렇게 혼자만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에게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알릴 수 있는 지식과 재능이 있었다면, 그와 더불어 그의 지식과 재능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도 함께 있어야 했다. 홍세화 씨의 귀국을 추진한 '귀국 추진 모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나는 그 좋은 생각을 타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 홍세화 씨외에 수많은 홍세화가 여전히 외국 땅에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유들로 한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도 '지식인'들이 아니었는가?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아는 홍세화 한 사람만을 때기듯 데리고 남은 홍세화들을 잊은 이유로 이번 귀국 추진은 '학교 선후배' 사이의 쟁거주기, '유명한 사건의 관련자' 알아주기, '잘 팔린 책의 저자' 초청하기 수준으로 그 의미를 퇴색시켜 버리고 말았다. 아니 그보다 이곳에 남아있는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 번 더 '잊혀진 사람들'로 만들어 버렸다.

이제 어쩔 것인가? 그런 환호와 기쁨 뒤에 여전히 세상의 주변을 서성이나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는 돌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어쩔 것인가? 역사의 발전 내지 사회 변화의 환성 속에 오히려 짓눌려 하소연 할 곳 없는 이들을 어쩔 것인가? 내내 떠난 은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신념 가득한 애정으로 살아왔건만 이제 그들이 예써 싸워왔던 대상으로부터가 아니라 내내 믿어왔고 함께라고 여겼던 '우리들'로부터 버림 받았다고 생각하는 '여기 남아 또다시 잊혀지는 사람들'을 어쩔 것인가?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6월 18일(금)

제 139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대법원도 헌재도 막혔다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

대법원까지 집회금지처분이 적법하다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 2부(재판장 김형선 대법관)는 지난 11일, 인권운동사랑방이 '경찰청 정문 앞에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의 판결이 △헌법 제 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고 △집회를 제한 한 것은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남규선 총무는 "정당한 의사표현조차 할 수 없다면 집회 시위의 자유 뿐 아니라 의사표현의 자유까지 침해당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분노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찰청 정문 앞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항의 및 피해자 선언대회'를 가지려했으나, 관할 서대문 경찰서는 "집회장소가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해 교통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은 고등법원에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집회금지처분이 적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본지 98년 11월 25일 참고>

사법 판결, 헌법소원 대상 제외
한편 현행법은 법원 판결 시 헌법재

판소에 위헌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놓고 있어 이번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가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 법조계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었다.

지난 97년 최승수 변호사 등은 △법의 공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제한 받을 경우 헌법소원에 의한 권리구제가

가능한데, 판결 역시 공권력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막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법원이 명령과 규칙에 대한 1차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 심사권 또한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재판장 김용준)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이상의 변호사는 "법원이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막고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막고 불신만 사는 잘못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불심검문은 계속된다

기소중지자 검거대책, 불검 개선 둔갑

최근 주요언론은 경찰청이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한 '무차별적인 거리검문'을 가급적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기소중지자 검거활동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경찰의 무차별적인 불심검문 관행이 마치 전면 개선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연중 두차례 특별기간을 정해 전국에서 일제 검거 활동을 벌이는 현행 방식이 과잉검문으로 '국민불편과 불만'을 일으켰다며, 앞으로는 각 시·도 경찰청별로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기를 정해 검거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 불심검문거부운동팀의 정재욱(25) 씨는 "경찰은 불심검문을 자율적으로 시행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불심검문에 대한 경찰조직내의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 한 자율은 무의미하고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무차별 과잉검문은 계속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한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조치의 확대해석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청 형사과 김사용 공조계장은 "일부 언론이나 국민들이 마치 거리검문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한 일제 검문을 하지 않는 것이지 거리검문을 아주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덧붙여 그는 "시위지역, 강력사건 발생지역 등에서 용의자 검거를 위한 불심검문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많은 경찰 관계자들은 이번 개선대책에 대해 전혀 들어본 바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인지하고 있어도 경찰 내부지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응답했다.

여기서 보여지듯 이번 개선대책에 의해 일제검거활동 기간에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불심검문의 폐해가 사라질지도 의문이며, 무분별한 불심검문의 피해는 일년 내내 계속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3)

'계엄사 합동수사본부'가 그 뿌리

"만약 이번에 우리가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한낱 '대책'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인권변호사의 귀감이 된 조영래 변호사. 그는 88년 1월 「관계기관대책회의 정체를 밝혀라」라는 동아일보 기고문에서 위와 같이 주장했다. 조 변호사의 지적대로 당시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철저히 분석할 수 있던 절호의 기회였다.

5공 시절 각종 공안·시국사건과 관련, 막강한 위력을 떨친 '관계기관대책회의'는 박정희 사망 이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즉각 '계엄사 합동수사본부'를 만든데서 기인한다. 물론 이전엔 62년 창설된 중앙정보부가 공안탄압을 주도했다. 계엄시 안기부를 확대·강화한 전두환은 이후 계엄합수부를 '관계기관대책회의'로 전환했다.

5공 시절 공안·정치공작 사건발생시 '어둠 속에 묻힌 절대적인 존재'로 지목된 '관계기관대책회의'는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87년 박종철 열사 사망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단장 정형근(현 한나라당 의원)이 중심이 된 관계기관대책회의는 이 사건의 은폐를 결정했다고 한다. 안기부가 전국적 파장을 고려해 사실 은폐를 기도한 것이다. 때문에 '터 치니 억하고 숨겼다'는 희대의 발표가 나왔다.

여론의 집중 질타를 받은 이 '괴물'은 노태우 정권 때인 89년 '공안합동수사본부'로 다시 태어난다. 3월 20일 노 대통령은 공약사항인 중간평가를 무기한 연기하고 3월 22일 긴급 공안관계장관회의를 소집, 이른바 '좌익폭력세력 척결'을 이유로 검찰에 상설대책기구의 설치를 지시했다. 공안합수부는 곧 △공공시설 습격·방화 때 무기사용 △전국 지·파출소에 M16 지급 △정당·교회·학원을 막론한 성역없는 공권력 투입 등 계엄상태에나 해당할 초강경 조치를 발표했다. 연이은 과잉탄압하고 중간평가 유보에 대한

국민적 비난여론을 감압적으로 막기 위해서였다. 이어 공안합동수사본부는 89년 광주 청옥동 저수지에서 발견된 조선대생 이철규 씨의 사인을 철저히 은폐했다. 또한 91년에는 고 김기철 씨의 분신을 감기훈 씨의 유서 대필로 조작해 6월 항쟁 이후 가장 거센 국민적 저항을 철저히 탄압했다.

이처럼 '관계기관대책회의'나 '공안합동수사본부'는 안기부를 정점으로 '공안탄압'을 기획함으로써 정권유지에 복무했다.

문제는 이런 공안기구의 전통이 '문민정부'를 넘어 '국민의 정부'에도 고스란히 이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 변호사의 지적처럼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없애지 못한 '업보'를 우리 국민은 지금도 복복히 맛보고 있는 것이다.

울산대 혁신위 전원유죄

이적단체 구성 혐의

지난 15일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울산대 혁신위원회 사건'으로 구속된 감삼규(울산대 총) 씨에게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혁신위원회'가 '영남위원회' 산하 학생정치조직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8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감 씨는 "기무사 수사관이 조사 받는 10일 동안 거의 잠을 재우지 않았고, '먼저 잡힌 친구들이 자백한 사실을 혼자 부인하면 간첩으로 만들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장원철 씨도 "경찰이 쌀과 목달미를 구타했고, '시인하지 않으면 후배들도 구속하겠다'고 협박해 조작된 강령, 규약 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감압하에 받아들인 구속자들의 진술 말고는 혐의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건조작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창립총회 자료집, 선언문 등 문건 하나 없는 점 △감 씨가 97년 초 후배들과 학술회담에서 '세계화의 뜻', '민권의 세계화'가 당시 출판도 안됐다는 점 △'영남위원회 학원총체'로 지목된 김명호 씨와 모든 '혁신위원회' 구속자들이 서로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 점 △경찰의 협박·가혹수사로 인해 진술했을 뿐 법정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 점 등에 의혹이 제기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 8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만화사랑방



이동수

1999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북한 인권상황

사보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이하 앰네스티)는 지난 16일 98년도 전세계 인권상황을 담은 '1999년 연례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담긴 남·북한 인권상황의 주요내용을 발췌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대한민국

양심수를 포함해 150명 이상의 정치적 수인이 사면 석방됐지만, 지금도 수백명이 투옥돼있다. (중략) 정치적 수인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98년 2월에 취임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인권교육의 증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법률 및 관행의 보장 등을 포함한 인권개선을 약속했다. (중략) 4월, 정부는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개명하고 더 이상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거나 인권침해의 자행할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 진정한 개혁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7월, 법무부는 더 이상 정치적 수인의 석방조건으로 공산주의나 좌익사상의 포기를 약속하는 전향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략) 그러나 정부는 모든 정치적 수인들은 조기 석방을 위해 반드시 '준법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많은 수인들은 준법서약서가 계속적인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며 국제기준에 배치되는 법률의 존중을 요한다는 이유로 서약을 거부했다. 9월, 김 대통령은 앰네스티 대표단에게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을 조속한 시일내에 재고할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98년 말 현재까지 어떤 재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인권법 초안이 9월에 발표됐다. 이 법안에 대해 독립성, 폭넓은 수인사항,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권한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광범위한 우려가 있었다. (중략) 98년 한해중

안 학생, 출판업자, 노동자 등 약 400여명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됐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양심수이며, 북한을 '찬양' 또는 '이롭게'한 행위라는 매우 모호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해 단기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략) 많은 수의 양심수를 포함해 수백명의 노조활동가들이 당국이 불법으로 규정된 노동집회와 5월과 7월 두 차례의 총파업 이후 수배·체포됐다. (중략) 법집행공무원들이 체포된 정치범 또는 일반 용의자들에게 잠을 안재우고, 구타나 협박을 가했다는 추가 보고가 있었다. (중략) 98년 말 현재 최소 37명의 수인들이 사형집행을 대기중이다. (중략) 9월, 김 대통령은 앰네스티에 개인적으로는 사형제도를 반대하지만 사형폐지에 대한 대중적 논쟁을 조성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망명희망자들은 계속해서 난민지위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까지 성공한 사례는 없다. 출입국 관리소 관리들이 당사자들의 난민 지위 신청을 지지했다는 보고가 있으며,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 최소 10건의 신청을 기각했다. (후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에 대한 접근을 막는 북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적절히 조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감춰져 있으리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략) 북한은 일련의 자연재해와 열악한 경제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 수천명이 굶주림과 그로 인한 질병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전역으로의 접근이 제한당하고 있는 구호 단체들에 따르면, 식량부족의 실제적 영향을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몇몇 독립적 구호 단체들과 민간단체들의 보고에 따르면, 국가에 대한 충성도와

경제적 생산력에 따라 식량이 분배되며, 가장 열악한 계층의 주민에게는 식량배급이 도달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 9월, '국경없는 의사회'가 북한에서의 철수를 선언했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도움이 절실한 아동을 포함해 요보호 인구에 대한 접근이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중략) 북한정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CCPR)'에 따른 보고서 제출 의무를 또다시 이행하지 않았으며, ICCPR에서 탈퇴하겠다는 97년의 발표를 반복했다. (중략) 북한 정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에 따른 최초보고서를 제출했고, 5월에 이 보고서의 심사과정에 참여했다. 이 조약에 관한 보고를 중단하겠다는 97년 결정을 뒤엎었다. 몇몇 소식통들은 수천명에 달하는 정치적 수인들이 계속적으로 구금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보고의 진위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구금 조건이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수인에 대한 심각한 식량부족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몇건의 사형 집행이 보고되었으나 독자적인 확인은 불가능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이웃국가, 대개는 중국으로 가는 것으로 보고됐다. 대개는 중국 및 북한 보안국에게 체포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체포되어 재송환된 이들 중 일부는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앰네스티는 김정일 의장에게 △ICCPR 탈퇴를 재고할 것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것 △ICCPR 보고 의무를 포함해 조약에 대한 의무를 준수할 것 △유엔의 인권기구와 대화를 진전시킬 것 △독립적인 인권기구의 북한 접근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발송했다.

구독료 내셨나요?
자동이체도 가능합니다.
지도번호 7618848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6월 19일(토)

제 139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플리지 않은 매듭, 양지마을

노재중 전 이사장 징역 3년 선고

부랑인 시설 양지마을의 인권침해 행위로 구속된 노재중(전 천성원 대표이사) 씨에게 18일 대전고등법원 형사 1부(주심 이동출 판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씨가 양지마을 등을 사회적 목적으로 이용해 원생들의 노역비를 착취하고, 비리가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퇴소자들을 강제로 구금하는 등 양지마을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모든 범행을 주도하는 한편 각 범행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하지만 양지마을 문제는 거의 해결된 게 없다는 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사법부의 판단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조사 과정 내내 의혹이 제기된 성폭행, 사망사건 등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착수하지 않았으며, 기소내용에서 '특수감금 및 특수감도' 혐의를 제외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시설사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장기구금으로 부랑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상당히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에서 특수감금죄 등의 항목이 제외됐다"며 검찰기소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준비위원회의 오창익 씨 역시 "잠복한 인간파괴의 결과가 겨우 징역 3년이나"며 "미흡한 검찰 기소가 인권유린에 대한 사법적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수용시설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개인의 비리 차원에서만 접근했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노 씨의 경우 10년 전에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인권유린을 자행해 구속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그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시설에 대한 폐쇄적 운영과 정부 감독의 소홀은 시설 내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를 끊임없이 양산해왔다고 볼 수 있다.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종해 교수는 "부랑인, 정신질환자 등의 입

소·감독을 책임진 관계 공무원들이 시설과 유착할 경우 엄청난 인권유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시설의 공개와 정부 감독의 강화를 촉구했다. 이렇듯 양지마을로 대변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는 아직도 풀어야 할 매듭을 많이 안고 있다.

양지마을 관련자에 대한 선고결과는 노재중 징역 3년, 박종구 징역 2년, 박정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 오병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규성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2만원 등이다.

"자본의 자유화를 반대한다"

6·18 국제민중행동의 날

"더 많은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가 민중의 자유를 가로막는다"

6월 18일 독일 쾰른에서는 선진8개국(G8) 정상회담이 열렸다. 같은 날 세계 곳곳에서는 '신자유주의 반대' '외채완전탕감' 등 초국적 자본의 횡포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국제민중행동' 차원에서 열렸다. 한국에서도 '6·18 국제민중행동, IMF·한미/한일투자협정·밀레니엄라운드 반대 및 노조 탄압 규탄대회'가 낮 12시 광화문 동화빌딩 앞에서 민주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사회단체회원들과 대학생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특히 한국의 경우, 7월 초순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급진전되고 있어 이번 집회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됐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제위기 이후 '달려만이 살 길'이라는 정부의 말에 현혹돼 사회운동세력마저도 한미/한일투자협정 등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허 부위원장은 "더구나 정부는 투자협정이 사회전반과 민중생존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논의도 없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올해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개시될 국제무역기구(WTO)의 '밀레니엄라운드' 또한 주목해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밀레니엄라운드는 과중한 농산물수입 개방 압력으로 한국농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왔던 우루과이 라운드 후속 회의의 성격과 같고 있다. 또한 밀레니엄라운드에서는 전세계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98년 10월 논의가 중단됐던 다자간 투자협정(MAI)이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사회진보연대의 이창근 씨는 투쟁사를 통해, "한미/한일투자협정과 밀레니엄라운드 모두 공통적으로 '투기'조차 정당화한 투자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킨다. 또 초국적 자본의 기업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어떠한 기준(노동·인권·환경)의 부과도 금지한다"며 "이는 결국 '자유화'라는 미명 아래 우리 민중들의 삶을 지켜주던 최소한의 것들마저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고 감하게 비판했다.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4)

'민주주의와 인권의 적'

검찰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안기부에서 검찰 공안부로 주도권이 넘어온 것은 김영삼 정권 때부터였다.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안기부는 김영삼 정권 초기에는 개혁의 대상으로 거론되었다. 김영삼 정권은 이런 안기부보다는 나름대로 공적 기관인 검찰을 활용하여 사정직업을 전개했다. 대대적인 사정직업의 결과는 검찰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했고, 김영삼 정권 초기 추후했던 검찰 공안부는 94년의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 사건 이후 전개된 '주사파 파동'과 96년 한총련 연세대 사태를 계기로 공안 분야의 주도권을 장악해 나갔다.

최근의 언론보도에서도 일부 확인되듯이 공안대책협의회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타 부서의 참석자들은 이런 공안 검찰의 기세등등한 일방적인 지시에 일인반구 반론도 펴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다. 검찰 공안부의 안하무인적인 광범위한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은 필연적으로 곳곳에서 인권 탄압을 불러 일으켰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정책조정 기능까지 부여함으로써 절대적인 권력 기관으로 검찰, 그 중에서도 공안부는 최대의 번성기를 구가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검찰의 중립성은 오히려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다. 막강한 권력기관인 국정원과 경찰을 장악한 검찰에게 두려운 존재란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공안대책협의회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오로지 공안적 잣대로 제단하고 감경탄압 방침 일변도로 밀어부쳐 왔다. 공안에 우선하는 것이 인권이고, 인권은 어느 상황에서도 유보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공안부가 주도한 공안대책협의회는 모든 방침들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들 일색이었던 것이다. 이런 결과는 이미 과거의 관계기관대책회의나 공안합동수사

본부, 현 정부의 공안대책협의회 등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다. 군사쿠데타의 유산이고, 독재정권의 유산인 공안대책협의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권을 강조하는 현 정권의 기본적인 본질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공안 기관에 절대적으로 기대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을 강조하는 일만큼 어불성설이 어디 있겠는가. 이에 따라 5공 때 관계기관대책회의나 6공 때의 공안합동수사본부가 민주세력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었던 것처럼 현재의 공안대책협의회도 당연히 민주주의와 인권의 적으로 규정되어 해체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기회에 과거 독재정권이 유산인 검찰 공안부, 경찰 보안수사대, 청와대 사직동맹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법과 인권연구소 김동한(47) 소장은 "과잉대책 논의, 감경탄압으로 이어지는 공안대책협의회는 국민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음으로 공안대책협의회 해체밖에 대안이 없다. 뿐만 아니라 비밀경찰로 오해받을 수 있는 청와대 사직동맹도 이번 기회에 없애도록 해야 한다"고 감

조했다. 김 소장은 "인권보장의 근간이 된 투명한 정치를 통해서 정권이 유지될 때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공안기구에 의존해 정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결국 정권의 수명을 스스로 단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단식농성중" 기자회견

노조대표자 단식농성 돌입

특별검사제 수용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치적 득실을 따지며 국정조사위원회의 구성조차 못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18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갑용 위원장 등 지도부가 단식농성 5일째를 맞은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공안유도공작 관련책임자 처벌 △공안탄압 희생자 원상회복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거듭 요구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산하 연맹 및 지역본부들 비롯한 1천3백 여개의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단식농성 투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갑용 위원장은 "단식농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떤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검찰의 정부'라고 규탄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단식농성이라는 목숨을 건 처절한 호소를 정부가 외면한다면 정권퇴진을 내걸고 총파업을 벌이는 한편 범국민적 항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의 동정

- 한미행정협정 연수학교
 - 6월 22일(화) 오전 9시 / 한국기독교연합회관 405호
 - 공동주최: 주한미군법죄 근절 운동본부
 - 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 (02-744-1211)
- 21세기 한국 어린이와 민간단체
 - 6월 22일(화) 오후 1시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
 - 주최: (사)한국아동단체협의회 (02-766-2269)
- '끝나지 않은 전쟁 - 대인지뢰' 사진전
 - 6월 23일(수) - 6월 27일(일) 오전 9시-오후 6시 / 중구문화원
 - 주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02-775-3001)
- 미군기지 국제회의
 - 6월 25일(금) 오후 7시 / 서울 성가수녀원, 군산, 평택
 - 공동주최: 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
 - 녹색연합 (02-747-8500)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6월 22일(화)

제 139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공안유령 돌아왔나

국정원, 서울대생에 프락치 강요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과거 안기부 시절 악명 높았던 프락치 매수공작을 진행해왔음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국정원 내에 언론단 신설 문제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터져 나와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대생 강성석(25, 체육교육학과 4년) 씨는 최근 국정원 요원 이양수 씨에게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했다. 강 씨에 따르면, 이 씨는 자신을 프락치로 포섭해 서울대 내의 학생운동 인맥 등을 파악하려 했다.

강 씨가 국정원 요원 이 씨를 처음 만난 것은 지난 5월 10일이다. 교생실습 중이던 강씨는 졸업논문과 관련해 논의할 내용이 있으니 과 조교실로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서둘러 조교실에 갔지만 조교는 전화내용과는 다르게 '82학년 선배'라며 이 씨를 소개했고, 이 씨는 함께 식사를 하자며 강 씨를 근처 식당으로 이끌었다. 식당에서 이 씨는 "국가정보원에서 나왔다"고 말한 뒤, 강 씨의 98년 서울대 총학생회 후보 출마를 비롯한 학생운동 전력, 부모님과 친한 친구들의 근황을 거론했다. 본격적으로 이 씨는 전 현직 학생회 간부 30여명의 이름을 대며 "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있나"고 추궁하기 시작했다. 강 씨가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협조하지 않으면 내 앞에서 조사 받을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그후 이 씨는 2~3일에 한번씩 전화를 걸거나 교생실습 중인 학교로 찾아와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한편,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학교 과학실험실에서 복사해온 강의노트, 낱자이 등을 보여주기도 하고 "생활비에 보태쓰라"며 돈을 건네기도 했다.

또한 지난 5월 18일에는 '구국의 길'이라는 북한 관련 문건을 들고 교생실습 중인 학교로 찾아와 "서울대 안에 북한 방송을 청취하는 사람의 이름을 대달라"며 "만약 협조만 하면 교사진출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 유학도 주선하고 병역문제도 해결해주겠다"며 적극적 포섭에 나섰다. 하지만 강 씨가 계속해서 이를 거부하자 이 씨는 "최후의 수단을 쓰겠다"고 말한 후 지난 14일부터 연락을 끊었다.

끈질긴 프락치 강요

이 씨의 협박으로 두려움에 시달리던 강 씨는 인권운동사랑방과 인권실천시민연대(준)에 도움을 청했다. 두 인권단체는 자체 조사를 통해 강 씨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강 씨는 지난 17일 4시 30분 경 마지막으로 이 씨와 전화 통화를 했다. 다음은 두 사람간의 전화통화 내용이다:

"최후의 수단이 뭐냐(강 씨)", "협상은 물건너 갔다. 선배로써 도와주려고 했는데 네가 태도를 불분명하게 해 지난번 전화로 이미 (얘기는) 끝났거든"

(이 씨)", "그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강 씨)", "30명 전체를 파악해 줄 필요는 없고, 북한방송 청취 문건을 작성한 사람만 얘기해 달라(이 씨)"

국정원 본색 드러내

지난해 말 국회 529호실 사건, 최근의 언론단 신설 문제 등에 이어, 자기 생활에 전념하는 학생에 대한 프락치 매수공작 사건까지 벌어진 것은 국정원이 과거의 구태를 벗었는지를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이번 사건은 학생들의 일상적인 생활에까지 국정원의 정보수집이 파고든 것으로 드러나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게 되었다.

피해자 강 씨는 "교사가 되고 싶은 꿈을 버릴 수 없어 마지막 관문인 교생생활을 무사히 끝내고 싶은 마음에 지난 한 달간 이 씨를 만나왔다"고 고백하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작은 누나의 생활 이야기를 하며, (정보를) 알아내는 수단이 너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너무 두려웠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오늘 오전 11시 서울대총학생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씨로부터 강요당한 프락치사건의 전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늘 '인권시평'은 필자 사정으로 쉽니다.>

주요공판안내

- ▶ 6월 22일(화)
 - 주한미군 헨리스 티모시 제롬(허주연 씨 살해) 서울고법 404호, 오후 3시, 신전
 - 박재현(국보법 찬양·고무 등) 서울고법 404호 합의 5부 오전 10시 선고
- ▶ 6월 24일(목)
 - 서정삼(국보법 찬양·고무 등) 서울고법 404호, 합의 5부 오전 11시 신전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⑤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이 아무개(여, 33세)씨는 서른줄에 들어서서도 관공서에 가기를 끄떡이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의 첫 관공서 방문은 만 18세가 되던 해 처음으로 갔던 동사무소였다.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40대 공무원이 등사임크가 잔뜩 묻은 물러를 들고 이 씨의 손목을 잡더니 열손가락에 철을 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손목을 꼭 잡고 열손가락의 지문을 눌러냈다. 생각만큼 선명히 나오지 않자 짜증을 냈다. "학생은 지문이 왜 이렇게 흐려?" 그리고는 휴지 한 조각을 던져주고 닦으라고 했다. 지워지지 않자 화장실에 가서 씻으라 했다. 비누칠을 아무리 해도 인크는 완강했다. 마치 주민등록증 코팅 비닐속에 갇혀버린 이씨의 지문처럼. 그렇게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이씨는 서너번 잃어버렸다. 그때마다 경찰서에 가서 분실경위서를 쓰고 벌금 1만원을 낸 후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았다. 잃어버린 이유를 기록해야 하는데 자신의 부주의함을 추궁당할 것 같아 당하지도 않은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쓰곤 했다.

이 씨는 그렇게 만든 주민등록증을 이제 또다시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는 최첨단 방식이다. 컴퓨터 입력창에 지문의 중심을 대면 관계 공무원이 단말기로 확인하여 입력시작 엔터키를 누르게 되어있다. 그렇게 내준 이 씨의 지문은 정부의 정보 참고 속에 자리잡을 것이다. 이 씨를 포함한 만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다시 지문날인을 하여 국가에 넘겨줘야 할 운명에 처해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도 인권침해라 하여 폐지하는 한편 '범죄자'에 제한하여 지문날인을 받고 있다. 이와 비교해보면, 우리 국민 모두는 '외국인 또는 범죄자'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 정부는 지금 국민 모두를 예비 범죄인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지문날인이 '범죄대책과 치안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공감하여 자신의 불편과 불쾌함을 감추면 그만인 문제가 아니다. 지문날인에 반대하는 한 단체(Privacy International)는 우리가 '지문'에 대한 환상 속에서 자랐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환상이란 '나의 똑같은 지문은 다른 어느 누구도 갖고 있지 않으며 나의 지문은 변할 수 없다'는 믿음을 말한다. 만에 하나라도 이 믿음에 손상을 가할 위험성이 있다면 어찌 할 것인가.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의 디지털 시대에서는 일단 입력·계산화되어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지문은 절취, 전송, 조작이 가능하다고 한다. 지금처럼 고도화된 기술 사회에서 집중된 정보는 언제든지 불순한 목적에 의해 변조, 탈취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전국민 지문날인' 강제와 국가관리는 위협천만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국내외 인권·사회단체 일각에서는 '지문날인 거부 선언운동'을 조직할 계획이다. 함께 시작할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주간인권호름

(99년 6월 14일-6월 21일)

1. 안해! 못해! 그럼, 딱 한번 만이야
여권, 검찰권을 뒤흔들어서는 국가 운영 어렵다며 특검제 수용거부 결정(14일), 하루만에 특검제 도입 전격 결정(15일) 조폐창 사건에 한정되는 특검제 도입 법안을 주내에 국회에 내기 위해 특별법안 확정(21일)

2. 꽃게는 평화의 밥상에 오르고 싶다
53년 휴전 이래 남북정규병력 최초로 맞붙은 서해교전으로 뜨거웠던 한주, 유엔사와 북한간 장성급 회담에서 북방한계선 이견(15일), 김대통령 햇볕정책기조 강화 의지 재천명(17일), 서해대치 사실상 해소,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 '북한과 북방한계선 협상 용의 있다' 밝혀(18일), 남북차관급회담 북경에서 개막 예정(21일)

3. 오해하지마, 난 안 떠냐
경찰청, 기소증지자 검거를 위한 무차별적인 거리검문 자체하겠다고 '기소증지자 검거활동 개선 대책' 발표(14일), 하지만 거리검문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며 시위지역 등에서의 '불심검문은 계속된다'고 밝혀

4. 다른 택시는 안오나요
남민전 사건의 파리 망명객 홍세화 씨 20년만에 귀국(14일), 과거의 족쇄로 아직도 귀국할 수 없는 동포들에 대한 아쉬움 남아

5. 다시 구멍뚫린 스크린
한-미 투자협정에서 2002년부터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려는 양국 정부의 움직임에 영화인들 반대투쟁 재개(16일), 18일까지 110명의 영화인 항의 사발

6. 고개속인 개혁, 고개돌린 민심
각계인사 40명 명동성당 기자회견 '정권의 명운을 건 개혁승부해라' 요구(16일), 58개 단체 '현정부 출범 1년 6개월동안 각 분야의 개혁을 평가하는 토론회' 열어 전 반적인 개혁 실패로 증산증한데서도 외면당하기 시작했다 질타(16일), 전국대학교수 1천여명 부산에 모여 교육정책 전면수정 요구 집회 및 시위(15일), 노동계 파업 잇따라(16-17일), 민주노총 전국 1300여개 단위로 조대표자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18일)

7. 검찰, 인권운동가에 대한 보복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인권영화제 개최 관련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구형 받아(15일)

8. 집회시위의 자유 발목 묶음 대법원
대법원,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18일), 법원 판결 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도 할 수 없어 이의 제기도 불가능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프락치 매수공작 폭로

서울대생 양심선언, 책임자 처벌 촉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3개 인권단체와 서울대 총학생회는 22일 오전 11시 서울대 총학생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정보원(국정원) 요원 이양수(36) 씨가 서울대 체육교육과 4학년 강성석(25) 씨에게 프락치 활동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본지 6월 22일자 참조>

양심선언에 나선 강 씨는 "협박과 회유 속에 보낸 지난 한 달여 기간은 절망, 불안, 분노, 증오 등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런 기간이었다"며 "국가정보원이 해체되지 않는 한 이 땅의 참 민주주의의 실현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양심선언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 씨의 양심선언을 지켜 본 인권단체들은 "국가정보원의 프락치 매수공작은 집요하게 한 인간의 양심적 영혼을 파괴하고 갈등과 고뇌 속에 밀어넣었다"며 국가정보기구의 반인권적 행태에 분노를 표시하였다. 국정원이 과거 인권유린과 비밀 공작의 상징인 안기부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라고 이 사건을 규정한 인권단체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정원 직원 이양수 등을 포함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국정원이 밝힌 입장은 이렇다.

"국정원 수사관이 구국의 길(북한관련 문건)건에 대해 강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적은 없다. 강 씨가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이다."

이에 대해 장주영 변호사는 "이 씨가

선후배간에 친밀감으로 얘기를 건넸다고 할지라도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눈 것만으로도 피해자 입장에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되었을 것"이라며 "강 씨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 이는 국정원법 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의 참가자들은 현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을 하는 한편, 관계 당국의 유효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총학생회(총학생회장 박경렬)는 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강씨의 신변 보장과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계속되는 프락치 논란

이번 서울대생 프락치 강요사건은 과거 안기부 시절부터 악명 높았던 학원 프락치 공작의 연장선상에 있다. 80년대 초 전두환 정권 아래서 자행된 이른바 '녹화사업' 때부터 대학가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프락치 시비는 84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본격적인 논란거리가 되었다. 당시 서울대 북학생협의회 의장이었던 류시민 씨 등은 대학생 행세를 하다가 적발된 재수생 손모군(당시 19세)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한 뒤 이들을 프락치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인도했다. 그러나 경찰은 학생들이 조사과정에서 손군을 감금 폭행했다는 이유로 류 씨 등을 구속했고, 프락치 활동 여부에 대한 조사는 흐지부지되었다. 경찰이 프락치 용의자를 인도받은 후에 프락

1999년 6월 23일(수)

제 139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치 조사는 뒷전에 둔채 학생들을 폭력 혐의로 잡아들이는 관행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그후, △ 김정환(당시 국민대생) 씨가 기무사(당시 보안사) 요원들에게 생매장의 위협 속에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고 폭로(89년) △ 부산에서 안기부가 10대 소년범을 사주해 대학가를 무대로 운동권 학생들의 동향을 파악했다는 '소년범 프락치망' 운영 사건(94년) △ 고려대 학생회관 수위 조 아무개 씨의 학생회실 자료 탈취 사건(97년) 등 크고 작은 프락치 시비가 계속 이어졌다. 또한 프락치 시비 과정에서 학생들에 의한 프락치 치사사건이라는 불행이 초래되기도 했다.

반인권적인 감시와 통제로 학원에 미친 피해에도 불구하고 프락치 시비가 국민의 정부 하에 다시 등장한 것은 과거의 악몽을 되살리고 있다.

인권영화제 탄압 계속

인천영화제 벌금 구형

인권영화제 개최와 관련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가 징역 5년을 구형받은 데 이어 인천지역 인권영화제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지난 6월 18일 인천영화제 개최와 관련하여 이은주(36, 집행위원장), 이윤주(36, 홍보담당), 이주섭(36, 조직담당) 씨는 각각 벌금 1백만원을 구형받았다. 이은주 씨는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 만으로 시비거는 당국이 아주 공색해 보인다"며 선고 후 결과에 따라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선고는 오는 7월 2일 있을 예정이다.

알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판위원회 실무간사 모집
문의 02-522-7284

사제총포에 언론 집중포화 철거민, 내 얘기도 들어달라

최근 언론은 철거지역인 경기도 수원 권선4지구의 사제 총포 문제를 연일 문제삼고 있다. 경찰은 철거민들에게 무려 120점의 사제 총포를 압수했다고 발표했으며, "무기류 831점 압수(조선일보 19일자)" 보도 등이 잇따랐다. 한편 언론 경찰발표와 언론 보도가 위화감을 조성해 철거민을 고립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사자인 권선4지구 철거민들을 직접 만나 보았다. <편집자>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위치한 권선 4지구는 현대, 삼성, 한솔 등 13개 건설업체가 시공업체로 참여하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지정돼 지난 98년 6월부터 철거가 본격화됐다.

지난 2월, 철거민들은 자구책으로 '굴리앗'(철타망루)을 세우고 '영구입대주택 및 임시주거지 보장'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건설업체를 힘겹게 상대해왔다. 이 지루한 철거투쟁에 중저부를 찍은 것은 지난 18일 새벽.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과 수원남부경찰서가 적극적으로 수원시와 시공업체, 철거민간의 중재안을 성사시켜 합의의 이끌어냈다.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 권선지구 철거민 15세대에 대해 시공업체측이 18평형 영구입대아파트 제공 △입주까지 임시주거지 보장 △물질적·정신적 피해 등 1억6천만원 보상 △경찰서 자진 출두시 철거민들에 대한 탄압 등 7개 항목이었다. 아울러 경찰은 철거민들에 대한 선처를 약속했다. 이에 새벽 4시 경 철거민들은 자진해서 경찰버스에 오르고 시위물품을 자진 반납하는 한편 굴리앗을 해체했다. 이러한 '자진 출두 및 무기자진반납'이 '긴급체포와 압수수색성공'으로 둔갑·발표됐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자진 출두·자진반납이었다

본지 기자가 방문한 21일 저녁, 주민들은 수원시 92번 버스종점 뒷편의

부서진 단층 슬라브 건물에 모여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철거민들은 수원남부경찰서 진병민 서장이 강제진압을 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것을 합의서대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기에 수사에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도시의 게릴라', '군요새식 망루', '인마살상용 전투장비' 등 언론의 위압감을 조성하는 보도에 주민들은 흥분해 있었다.

모든 것이 무기라니

오선영(남·37) 씨는 "주방에서 쓰는 칼을 비롯해 드릴, 망치, 심지어 취사용 석유와 프로판 가스통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무기로 분류하고 있어 사실이 과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TV에서 화려시현을 보인

것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압수물을 가지고 마치 사용한 것처럼 과장한 보도"라 주장했다.

공순옥(여·41) 씨는 "전경버스 3-6대의 병력이 항상 주둔해 있어서 사실 우린 상대가 안됐지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방어책으로 총포를 마련했다"며 "총 때문에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은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철거민 박금자 씨는 "경찰은 철거민을 향해 새총을 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을 던졌다. 음식을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인 어린 남매의 가방과 주머니를 뒤지며 몸수색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원남부경찰서 정보과장은 "철거민들과 합의한 적은 있다"고 수긍하는 반면, "사제총포 문제를 언론이 악용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상부로부터 사전에 왜 파악 못했냐고 우 리도 문책을 당했다. 경찰서에 압수물품이 보관되어 있는데 몇 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감옥에서 교단으로

안재구 교수 석방추진위원회 결성

나는/ 40대에 대학연구실에서 추방되어/ 10년간 감옥생활을 하였고/ 이제 얼마를 더/ 어둔 감옥에서 살아야 할런지 모릅니다(중략)/ 그러나 뒷날/ 어떤 수학자가 있어/ 학문과 민족통일의 길에/ 그의 온힘을 다하였다는 이야기/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 안재구 교수의 최후진술 중에서

22일 오후 7시 종로성당에서는 '안재구 교수 석방추진위원회 결성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박용길 장로, 이해동 목사(한우리교회), 김성훈 신부(시흥동 성당) 등 사회일로 70여명이 모여 안 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안 씨는 수학자지 <경북 매스메티컬 저널>을 발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수학자이다.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처음 구속된 안 씨는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중 1988년 형집행정지로 출소했다. 94년 구국전위 사건에 연루, 재구속된 안 씨는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안 씨는 오랜 감옥생활로 인한 류마티스 관절염, 혈압 상승과 부작용 등에 시달리고 있다.

결성식에 참석한 김성훈 신부는 "김대중 대통령을 믿고 있었으나 아직 변한 것이 없어 실망스럽다"며 "늦어도 이번 8·15에는 석방이 이루어져 꼭 만나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42년의 구금생활 끝에 지난 2월 25일 풀려난 우용각 씨도 "편견과 흑백논리가 오늘의 모습을 낳았다"며 "이 땅의 모든 양심수들과 안 씨의 석방을 위해 미려이나마 보태겠다"고 밝혔다.

석방추진위원회는 안 씨의 근황을 널리 알리며 석방 촉구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구국전위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 중 현재 수감자는 안 씨와 류라진(광주교도소 5년 구금) 씨 뿐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6월 24일(목)

제 1397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삼킨 세금 내놓아라

국민환수 소송단 되찾기 나서

정부의 재벌부채 담감에 국민이 집단적으로 환수소송을 벌여 재등을 걸기 시작했다

적은 빛에도 목숨을 끊는 서민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 '크게 빛을 쬐기 때문에' 오히려 빛을 탐감 받는 이들이 있다. 그 이름은 재벌. 경영진의 방만한 부실 경영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정신적·재정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하지 않아도 될 뿐더러 오히려 부실채권을 담감하는데 수조 원의 세금을 지원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인 한라그룹은 만도기계를 비롯한 계열사의 부실 채권을 담감하는데 3조8천억원의 세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그뿐 아니라 부실 경영의 책임자인 정인영 씨 일가는 경영에서 전혀 손을 떼지 않고 있다.

이에 국민승리21 재벌해체 경제민주화 운동본부 등 6개 단체는 23일 광화문 세실레스토랑에서 "재벌 부채담감액 국민환수소송단(공동단장 김진균·천영세, 소송단)"을 구성했다.

이날 천영세(민주노총 지도위원) 공동단장은 IMF 환란의 직접적 책임은 재벌에게 있다고 규정하면서 "환란의 주범들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부실기업을 정상화시킨다는 명분아래 국민이 낸 세금으로 재벌을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라그룹에 들어간 3조8천억원은 전국민 1인당 8만4천원 정도의 세금을 정씨 일가에게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소송단의 환인상 변호사는 "회사 임원진의 경영상의 부실로 손해를 변제 받은 전례는 없지만 법적으로 충분히 소송이 가능하며, 또한 전부 승소는 어려워도 일부 승소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소송단 관계자에 따르면 23일 현재까지 8백여 명이 소송의지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신문공고를 통해 참가 의사를 밝힌 개인 △데이콤노조 노조원 3백여명 △국민승리21 회원 △각종 집회를 통해 동의서를 작성한 시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송단은 5천원의 소송비용을 내는 5천명의 소송인을 조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사업설명회, 현장캠페인, 대국민선전전 등을 기획하고 있다.

농림부법안에 반발

협동조합개혁 법안 마련 공청회

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30여개 사회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협동조합개혁 국민입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문법조인과 학계, 농민들로 구성된 법안기초위원회가 작성한 '농업협동조합법(가칭)'이 일반인에게 처음으로 선을 보였다.

조합의 돈 장사위주의 은행기능 배제와 중앙회의 역할을 지도, 교육, 조사, 감독, 농정활동 등으로 제한하여 방만한 경영을 막고 조합의 본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대의 개혁법안을 논하는 자리였다. 농업협동조합법(가칭)은 △중앙회의 자체 수익 사업적 기능 완전배제 △신용사업(은행업무)과 경제사업(유통)의 완전 분리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철저한 경제

사업위주의 경영 △농림부장관의 감독권 축소 △재경부 및 금감원의 감독권 축소 △업종별, 품목별 전국연합회 결성 허용 △경제사업합성화를 위한 지원 대폭증원 △합병의 원칙적 반대 등을 담고 있다.

한국협동조합 국민연대(공동대표 김병태)는 정부법안에 대해 △농협·축협 등 중앙회의 통합은 조합원 위에 정부가 군림하는데 용이한 구도 △신용사업(돈장사) 중심의 왜곡된 사업 유지 △정부지원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 △업종별·품목별 연합조합 부정 △유통사업의 개별조합 이관에 대한 내용 미비 △합병명령, 조합해산, 정치금지, 통합중앙회 설립을 농림부가 관장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반개혁적 독소조항이 더 많아져 개악되었다고 비난했다. 이날 국민연대는 정부의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오늘날의 협동조합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계승하는 한편 더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국민의 여론이 담긴 올바른 입법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국민연대는 지난 5월 26일부터 진행해온 사회지도층 1천인과 범국민 1백만인 서명운동의 1차 총화결과와 이날 공청회를 거친 개혁입법안을 동봉해 오는 7월 5일 국회에 입법청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7월 3일 각 시·군·도에서 전국 동시다발의 농민대회 갖는 한편 7월 4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의 대 국민홍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알림

본지 22일자 "서울대 프락치 사건" 기사내용 중 안기부요원 신원 확인과 전화 통화확인은 <주간 한겨레21>에 의한 것임을 밝힙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 거부 미군기지 국제회의

오는 25일(금)부터 4일간 미군주둔 지역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미군기지 국제회의>가 서울(성가수녀원) 및 평택, 군산에서 열린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주둔국 민간대표들이 광범위하게 모이는 이번 회의는 '녹색연합'과 '우리평미군 기지퇴장기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주관하며, 공동캠페인을 목적으로 한 '집중적인 전략회의'에 초점을 두고있다. 96년부터 지속돼온 '미군기지 환경평화회의'를 잇는 이 회의는 △한미행정 협정을 비롯한 주둔국과 피주둔국간의 불평등협정 △동아시아의 군사적 대립과 긴장감 △미·일 신가이드라인으로 표출된 강대국의 전략 등에 맞서, 주둔국에 의해 주도되는 일방적인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성에서 제기되었다. 특히, 6월 들어 서해교전과 남북 관계 냉각으로 인해 미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배치돼 있는 긴박한 국내 상황은 '안보'를 이유로 한 '긴장고조'를 좌시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제기될 캠페인의 내용은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 최근 유교전에서 다량 사용된 열화우라늄탄에 대한 제재이다. 핵발전 원료인 우라늄의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제작되는 열화우라늄탄은 걸프전과 유교전에서 사용된 미사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배출되는 방사능 피해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기형아 출산 등의 심각한 전쟁후유증을 초래하며 참전 미군병사들도 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열화우라늄탄은 재래식 무기로 분류되어 다량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주최측의 설명이다. 둘째, 공동의 기지협정 기준 마련이다. 한미행정협정과 일본의 소파(SOFA)협정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주둔국인 미국이 너무 많은 권리를 가지는 데 비해 피주둔국의 권리 지위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지협정 기준을 통일하여 피주

둔국의 권리를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셋째,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대처 방안을 모색한다. 군사활동에 의한 환경파괴는 기업에 의한 것보다 그 정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환경파괴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기준치에 의해 평가되기 때문에 피주둔국의 관찰과 감시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에 아시아 피주둔국간의 기준치를 마련하여 공동감시를 제안할 계획이다.

긴급체포 무자격 논란 영남위 긴급체포 위법 사례 수집

영남위원회 사건(영남위) 대책위는 '사법경찰리(경사, 순경, 경장)에 의한 긴급체포가 위법임에도 공공연하게

자행돼 왔다'며 이에 대한 시정과 피해자 인권을 제도적으로 정확히 보장받기 위해 '사법경찰리에 의한 긴급체포 및 영장없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사례'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와 긴급체포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수색, 감중을 할 수 있어 사법경찰리는 긴급체포와 긴급체포 시 영장없는 압수 수색 등은 불법이라고 명시한 '영남위' 사건 항소심 재판부(부산지법 합의 2부, 재판장 손기식)의 판결문에 따른 것이다. 또한 영남위 대책위는 재판과정내내 위·변조 의혹을 불러일으킨 디스켓과 관련해 '재판부도 디스켓의 경우 쉽게 변화를 가할 수 있음을 시인한 바 있다'며 디스켓 내용이 증거로 인정된 경우와 증거물품중 일부 또는 전체가 경·검찰의 보존기간 중 훼손·변형돼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의 사례도 함께 수집한다. 모여진 사례들은 토론회 등을 거친 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개정 요구 등의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문의) 053-234-2288 김창현

새로나온 책

「역사 속의 성적소수자」

케빈 제닝스 지음·김호세 등 번역 / 도서출판 이연문화/288쪽/8천8백원
교육부 발행 고교 윤리교과서는 동성애자를 변태, 성도착증 환자, 에이즈의 주범, 매춘 마약을 비롯한 포르노에 기인하는 사람들이라 표현했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동성애자에 대한 폭력, 차별대우를 정당화시켰으며 몇명의 동성애자들은 사회적 편견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한국에서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시작된지 5년, 사회적 편견을 고발하며 숨겨진 동성애자의 역사와 투쟁을 다룬 책이 출간됐다. 동성애자 전문 출판사 이연문화는 인간의 역사속에 존재해 온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한 성적소수자의 삶을 다룬 「역사 속의 성적 소수자」를 펴냈다. 미국의 동성애자 전문 출판사인 '엘리슨사'에서 출간돼 현재 미국 고등학교의 교과서로 쓰이고 있는 이 책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나 항상 존재해 온 동성애자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밝힌다. 그리고 정상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억압해 왔는지를 고발한다. 동성애자들은 '민족을 좀 먹고 놀림감이 된다'는 이유로 나찌에 의해 무차별 학살되었으며 미국 매카시 시대에는 공산주의 음모에 가담하고 있다는 이유로 군과 정부에 의해 억울하게 추방됐다. 시대의 광기를 넘어 최근들어 덴마크, 네덜란드, 호주 등의 선진국들이 동성애자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우리사회는 동성애자에 대한 박해와 차별을 진행하고 있다. ◆ 구입문의: 02-927-1210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6월 25일(금)
제 1398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통신공간에도 감시의 눈 경찰청, 게시물·ID 삭제

통신공간에 게시된 글이 강제로 삭제 당하는 일이 발생해 통신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우누리는 지난 21일 '찬우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들'에 게시된 글을 강제로 삭제하고 해당 ID의 사용을 1개월간 중지시켰다. 이날 삭제된 5개의 글은 서해안 교전과 관련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공문을 보내 서해안 교전과 관련해 게시된 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불은통신의 단속)에 저촉된다며 글의 삭제와 해당 ID의 1개월간 사용중지를 요청했다'는 것이 나우누리측의 해명이다. 반면 삭제를 요청한 정보통신부는 '경찰청 보안과에서 '이 글들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며 협조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경찰청의 소행이며, 현재 경찰청은 삭제글에 관한 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시물 삭제가 알려지자 통신인들은 일상적이고 무분별한 검열의 근절을 위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찬우물 운영진들은 23일 성명을 내 '국민들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폭력적으로 침해하는 정치적 검열, 반민주적 폭거'라고 현 사태를 규정하고, 사용중지된 ID의 복귀와 공식적인 사과를 비롯해 정부의 검열 중단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통신연대 대표 장여경(27) 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와 동법 시행령 제 16조는 불은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의 거부, 정지 또는 제한 등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며 "사법적 판단없는 명령과 불은통신에 대

한 자의적 해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통신공간의 검열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진다. 지난 97년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한 글 수백 개가 삭제됐으며, 98년 5월에는 하이텔에 올린 글을 문제삼아 한국통신소속 노동자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바 있다.

미봉책은 필요없다 특검제·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전국의 19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행형법을 바꿔라” 서울구치소, 재소자 폭행

'영남위원회 사건' 구속자에 대한 부산 교도소속의 폭행사건이 잇혀지기도 전에 서울구치소에서 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박종호(34, 국가보안법위반) 씨는 지난 9일 소내 처우개선 등의 문제로 소장 면담을 신청했다. 일주일 넘도록 응답이 없자 박 씨는 소장면담을 요구하며 15일 감방문을 견어쳤고 경비교도대원들은 박 씨에게 수갑을 채운 뒤 폭행을 가하고 징벌방에 감금했다. 소식을 전해들은 이상희 변호사는 21일 박 씨를 접견하기 위해 구치소를 방문했는데, 소속은 "기결수의 경우 변호인 접견은 재심청구시에만 가능하다"며 접견을 거부했다. 결국 이상희 변호사는 22일 가족들에게 재심청구위임장을 받고 나서야

특별검사제 도입과 부패방지법제정 촉구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24일 오전 11시 국회 후생관 2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의 한시적 특별검사제 도입 방침을 강력히 비난했다. 국민행동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 특별검사제'는 단지 조폐창사건, 옷로비 사건 등 현 국면을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못박고 "전 국민적 요구인 권력형비리의 근절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확보를 위해 특별검사제의 전면적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 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정경유착 등을 근절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행동은 특별검사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촉구를 위한 전국민서명운동과 전국 규모의 대규모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 씨를 접견할 수 있었다. 이후 박 씨는 소속의 잘못이 인정돼 폭행 책임자의 사과를 받은 후 본방조치됐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 있다는 게 박 씨와 변호인의 주장이다. 이들은 △행형법에 의거, 소장은 재소자의 면담요청 시 일주일 내에 면담을 해야하나, 불이행시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는 점 △일상화된 교도관들의 욕설과 폭행을 금지할 만한 법이 없어 재소자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점 △기결수의 경우, 소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규정 등을 현행법의 제약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현행법이 새롭게 바뀌지 않는 한 이번과 같은 사건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행형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평화와 인권 ①

어떤 평화를 꿈꾸는가?

다시 6·25가 돌아왔다. 해마다 돌아오는 전쟁 몇 주년이 아니라 무책임하고 선정적인 선동의 위협과 함께 왔다. '우리 사회는 과연 평화를 꿈꾸고 있는가'는 질문을 던지며, 6회에 걸쳐 '평화와 인권'의 문제를 살펴본다. <편집자>

한국전쟁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지만 결과적으로 20세기의 가장 파괴적인 분쟁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4백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이 전쟁을 통해 죽었고, 그 3/4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었다(참고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은 2백3십만의 생명을 잃었다).

하지만, 이런 전쟁의 참화를 겪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평화를 구상하는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닌 듯 싶다.

'총 한 번 안쏘는 군대가 어디 있느냐' '도발 응징...본때 보여야'

'조공 바치기 위해 미치고 환장했다고 생각지 않겠나'

'하이테크 해군, 북 고물함정 놀러'

한마디 한마디에 적개심과 승전의지가 배어 나오는 이 말들을 국내의 내노라 하는 언론과 국회의원들이 거침없이 내뱉고 있다. '전쟁의 선동'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들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만능카드인 '안보'이다. 국가 안보의 보장 없이 인권의 보장이나 신장은 꿈꿀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들이 주창하는 안보개념은 평화와 등치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단순하게 말해 '평화'는 '전쟁의 부재'를 넘어선 공의의 개념으로 사회 안팎에서 벌어지는 온갖 갈등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평화는 '체제 안보'만을 부르짖지 않는다. 국민은 체제의 적, 외부의 적에 대해서만이 아니 그 사회 내부의 지배자들로부터도 안전해야 한다. 외부의 위협이 내부의 어떤 문제라도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내부통제 수단으로 자리잡은 사회, 국가안보를 생명으로 하는 사회는 '사회안보'의 개념을 소홀히 다루기 마련이다. 억압적

노사관계, 빈부격차, 여성과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폭력 등은 심각한 갈등과 분쟁의 요소이다. 즉,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갈등 요소이다.

이 모든 것을 제쳐놓은 안보 우선론자들에게 인권 보장 운운하는 것이 기껏해야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평화의 유지를 방해하는 것으로 치부된다. 그래서 그들의 선전선동은 비판을 용납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임을 자처한다.

비무장 지대를 따라 백만명 이상의 군인이 대처하고 있는 현실만이 평화를 위협하는건 아니다. 억압과 통제라는 폭력적인 갈등 해결 방식을 택하면서 안보논리로 이 모든 것을 돌파하려 드는 사회라면 진정한 안보도 평화도 인권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평화를 꿈꾼다면 서로의 다른점, 차이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추구해야 한다. 진정한 안정과 평화를 꿈꾼다면 서해교전에서 비롯된 남북갈등을 무책임한 강경 대응의 선동으로 이용하려 들 수 있겠는가? 과연 평화를 꿈꾸고 있는 것인가? 최종으로 노리는 적은 도대체 누구인가 되묻고 싶다.

만화사랑방

이동수



'친구가 의심된다'

국정원 프락치강요 규탄집회

서울대 총학생회, 민가협 등 학생·시민 단체 회원 90여명은 25일 오후 3시, 서울시 내곡동 국가정보원(국정원) 북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정원 서울대생 프락치 강요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민가협의 임기란 상임의장은 "까마귀에 분철해도 까마귀다. 국가안전기획부를 이름만 바꿔 국가정보원이라고 해도 예전과 전혀 틀리지 않다"며 국정원의 프락치 공작을 비난했다.

"동생이 엄마에게 놀라지 말라며 전화를 걸어와 사실을 알게 됐지만 설마 하며 믿지 않았다. 그 동안 동생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는가? 아직 군대도 가지 않았는데 동생에게 뒤탈은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 어머니가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다"며 가족의 고충을 밝힌 강 씨의 누나 강선희(28·주부) 씨는 "최선을 다해 동생을 위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집회에 참가한 한 학생은 "프락치사건을 접하고 나니 친구가 혹시 프락치가 아닌가 순간 의심하게 된다"며 "서로 프락치가 아니냐고 의심하게 만드는 국정원은 개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6월 26일(토)

제 1399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작은 학교는 살고 싶다

학교문을 열기 위한 '등교거부운동'

작은 학교의 문을 이대로 닫을 수 없다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5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31개 교육·사회단체는 '농어촌소규모 학교 통폐합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종로 YMCA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올 8월까지 학생수 1백명 미만의 1천 1백3십5개 학교를 모두 통폐합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이 알려진 후 해당 지역의 거센 반발이 일었고, 이에 반대하는 함의 집회가 각 지역교육청 및 교육부 앞에서 계속돼왔다.

이날 교원으로 정년 퇴직한 이규상 씨는 "농촌의 문화는 학교를 중심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사회성을 갖고 있다. 소규모학교를 모조리 없애면 농촌의 문화는 황폐화되어 이농현상이 이어질 것이고 이는 사회의 근본을 송두리채 뒤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30년간 농사를 지어온 농사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현정옥 씨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한 갑작스런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부분의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이 마음 고생을 하고 있다"며 "심한 경우 하루 한 번 있는 버스를 놓쳐서 돌아오지 못하는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가 속출해 통폐합된 지역의 주민들은 생계에 전념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처럼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공통된 의견은 농촌에 있어서 학교는 단순히 교육의 장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학교를 없애는 것은 농촌 사람들을 도시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과밀학교 문제가 꾸준히

히 지적돼 왔고, 1백명 미만의 작은 학교가 이상적인 학교일 수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거스르는 정책을 펴는 교육부가 과연 교육을 담당하는 곳인가는 의문이 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학교 통폐합에 맞서 3주째 '등교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 화성군 해운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는 "농촌에 산다는 이유로 자녀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실이 가슴이 매어진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은 25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통폐합은 농어촌지역의 교육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이농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확대할 것이며, 농촌과 도시의 균

형발전을 꾀해야 하는 정부정책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작은학교를 지키는 사람들'의 장호순(순천향대 신방과 교수) 씨는 "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등교거부를 하는 학교들에 한해서 시간을 두고 유보하라고 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이 폐쇄를 거부하면 분교로 학교를 계속 유지시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분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아 궁극적으로 폐교를 진행시키기 위한 수순잡기에 불과한 행태를 취하고 있다"며 당국을 비판했다. 덧붙여 "교육부 관계자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정부 정책이 어쩔 수 없다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모임은 교육부가 통폐합 문제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계속 문제를 회피하려 든다면, 7월 2일부터 대전 길천 초등학교 등 50여개 초등학교에서 '등교거부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행사와 동정

- 특검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집회 및 거리선전전
 - 6월 28일(월) 낮 12시/ 공화문 빌딩 앞
 - 주최: 특검제 도입과 부패방지법제정을 위한 국민행동(02-723-4250)
- 학교공동체 만들기 운동의 전략과 시민현장 만들기
 - 6월 28일(월) 오후 2시/ 서울YMCA
 - 주최: 서울YMCA학교공동체만들기 시민운동네트워크(준)(02-725-5828)
- 민언론 통일언론기획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남북한 언론의 역할과 전망
 - 7월 1일(목) 오후 2시/ 한국방송회관 3층 회견장
 - 주최: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02-714-4562)
- 남북한 청년들이 함께 하는 평화교육
 - 7월 1일-12일/ 동송동 크리스찬 아카데미 건물 3층 회의실
 - 주최: (주) 남북어린이 어깨동무 청년위원회(02-743-7942)
- 차등보육료 도입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 7월 2일(금) 오후 2시/ 종로성당 3층 강당
 - 주최: 공동육아 연구원, 한국여성단체 연합(02-2273-9535)
- 인권실천시민연대(준) 개소식
 - 7월 2일(금) 오후 6~9시/ 4호선 삼각지역 인권연대사무실(02-749-9004)

평화와 인권 ②

가족 재결합은 기본적 권리

25일 김대중 대통령은 "이산가족문제 진전 없으면 비료 2차분의 북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6일 남북차관급회담 본회담 2차 회의를 앞두고 이산가족의 상호 생사확인, 서신 교환 등 상당부분에서 가시적인 진전이 있어야만 비료를 실은 배를 띄울 수 있다는 말이다. 헤어지고 흩어진 채 살아가는 남·북 가족들의 가슴이 또 한번 불안감으로 울렁거리는 대목이다. 72년 남북적십자회담 때도, 92년 남북합의서 채택 때도 그랬다. 모처럼 남북관계가 잡히게는 것 같더니, 서로 얼굴 볼 꿈같은 날이 곧 울 것 같더니, 다시 안타깝게 지켜봐야 할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6조(3)항은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가족이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상호분리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국가는 '긍정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가족 구성원과 재결합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신청을 다뤄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이다.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도 마찬가지로 가족의 재결합 문제가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덧붙여 '가족재결합'의 보장을 위해서는 어떤 나라 안에서든 자유로운 이동과 거주, 자유, 본국을 떠날 자유와 함께 돌아올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의 기초적인 단위인 가족이 전쟁의 파편으로 찢겨져 그 재결합이 반세기 동안 가로막혀왔다면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분쟁의 폐해가 생생히 살아있는 것이다. 이에 남북한 당국의 '가족 재결합'의 의무 이행에 대해 문 제삼지 않을 수 없다.

통계청의 99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이산가족은 52세 이상 1세대 123만 명이며, 2·3세대까지 포함하면 약 767만 명에 이른다. 이들에겐 가족

재결합을 위한 서신왕래나 국내·외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최소 1만달러(약 1천2백만원)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제3국을 통한 만남은 수백 건에 불과하며 북한 방문에 의한 상봉 실현은 98년과 99년 각각 1건에 불과하다.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상봉 비용지원 대책은 따먹기엔 너무 높은 겁이라는 지적이 대다수다. 또한 가장 근본적인 접근방식인 남북대화도 다시 '주고 받는' 문제로 나아간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산가족 문제가 꼭 풀어야 할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라는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최우선의 과제'라고 해도 남북한이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과 형편은 다르다. 다른 모든 문제에 앞서 '최우선 실시'를 주장하다보면 현 시점에서 화해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식량난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현재 어려움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다. 북한으로선 자생의 길이 없다.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조건없는 지원'이 최대과제인 이산가족 문제를 실제로 풀어나가는 길이 되지 않겠는가

대인지뢰는 없다?

'끝나지 않은 전쟁-대인지뢰' 사진전

"불은 나무에서 태어났지만 불은 나무를 불태운다" 사람들은 대인지뢰를 생각할 때면 종종 이 말을 떠올리곤 한다. 사람이 만들었지만 해체가 불가능해 누군가 밟지 않으면 소멸되지 않아 결국 사람의 신체와 정신을 빼앗아 가는 대인지뢰의 특성을 잘 표현하기 때문이다.

지난 23일부터 중구문화원에서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주최로 대인지뢰 피해자 사진전이 열렸다. 풀속에 숨은 대인지뢰의 사진으로 시작된 전시전은 두 다리를 모두 잃은 한 할머니의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이어진다. 25일 운동화 차림에 절룩이며 행사장을 찾은 김일복(66) 씨는 자신의 사진도 여기 어디엔가 걸려있다고 말했다. 농사지를 땅을 찾기 위해 고향을 떠나 강원도 연천군 두원리에 정착한지 36년. 콩밭을 일구고 자식들을 키우며 행복하게 살아왔다는 김 씨는 지난 95년 장마비에 손실된 밭을 매려나갔다가 빗물에 떠내려온 대인지뢰 폭발로 한쪽 다리를 잃었다. 사고후 백방으로 수소문해 1년여를 외 다리로 뛰어나다던 덕에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긴 했지만,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터무니없는 보상금 액수는 김 씨의 마음마저 황폐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민통선 안을 제외하고는 대인지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통선 밖의 많은 사람들은 빗물에 떠내려온 대인지뢰에 의해 목숨을 위협받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이 사진전은 27일까지 열린다.

(정인숙 사무국장, (사) 좋은벗들) "는 지적에 귀 기울여진다."

퇴출도 억울한데 폭력행사 현대 본사 앞 경찰은 수수방관

경찰이 폭행을 목격하고도 수수방관했다. 지난 24일 오전 11시 계동 현대 그룹 본사 후문에서 '현대건설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던 백여 명의 현대중기퇴출 노동자들은 현대측이 봉고차를 들이대며 집회를 방해하자 현대측 용역들과 실감을 벌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집회장소를 벗어나 현대그룹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때 현대측 용역들이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때마침 현장에는 종로경찰서 김영화 서장이 있었으나 김 씨는 '현대중기퇴출노동자들이 주거침입을 하였으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폭행을 수수방관했다고 노동자들은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최석천 씨가 광대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는 등 7명의 노동자가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저녁이 되자 경찰은 공권력을 동원해 집회를 해산하려 했고, 이에 항의하던 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간사 김음도 씨도 집단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6월 29일(화)

제 140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금융시장의 독재를 막자

ATTAC 국제회의, 한미투자협정 반대

한미투자협정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미국 땅 파리에서도 울려 퍼졌다. ATTAC(시민지원을 위한 금융거래과 세연합, 아팍)이 주도한 '금융시장 및 기구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국제회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 모인 8십개 나라, 1천여 명의 활동가들은 시장의 독재에 맞서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전략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특히 한국과 관련하여 '한미투자협정'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참가자들 사이에서 폭넓게 공유됐다. 오는 7월 1일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비밀리에 논의돼 오던 한미투자협정의 체결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한미투자협정이 지난 해 전세계 시민사회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던 다자간투자협정의 복제판에 가깝다'는 우려가 두드러졌다. 두 협정 모두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최우선시하는 한편 노동·인권·환경 등 어떠한 기준의 부과도 금지하는 파괴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에 회의 마지막 날인 26일, '민중과 지구(생태)의 권리에 반하는 모든 협정 반대'를 선언하는 프랑스 증권 거래소 앞에서의 항의 집회와 행진이 진행되었다.

3일 간의 회의를 마치며 참가자들은 △올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될 국제무역기구(WTO)의 밀레니엄 라운드 제3세계 외채 탕감 △투기적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 등에 대한 국제적 행동 및 캠페인을 지속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밀레니엄 라운드와 관련하여서는 각국 정부에 회의 참여 거부를 요구하는 대중 캠페인을 올 여름부터 전

개하며, 만약 밀레니엄 라운드가 연기되거나 취소되지 않을 경우 11월 중에 국제행동의 날을 조직하기로 했다. '다자간투자협정'의 논의를 중단시켰던 강력한 시민사회의 힘이 이를 계기로 또한번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봉책으로 포장말라 지역의보 국고지원 확대가 본질

'농어민, 서민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8일자 일간지에 낸 광고문안이다. 이에 따르면 '국고에서 1천 억 원의 지역의료보험료를 지원해 서민층의 보험료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즉각 문제제기에 나선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준)'는 28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애초의 약속대로 국고지원을 했다면 불황으로 고통받는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올릴 필요가 없었다며, 1천억 원 지원 선전은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는 생색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

에 '단기성 대책이 아닌 법제화 된 정부의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 확충'을 요구하며, 그 구체적 내용으로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50% 국고지원 명문화 △보험료에 대한 누진세적용 △지방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보험료 통합 등을 제시했다.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된 88년 이후 정부의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계속 감소, 98년 30%에서 99년 24.5%로 급감해 의료단체들의 반발을 사왔다.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 특검제도입 국민행동 돌입

여성연합 등 199개 전국시민사회단체는 28일 광화문 동화문세정 빌딩 앞에서 특별검사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전국적인 규모의 '국민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참가단체들은 '현 정부는 국민의 정부임을 자처하면서도 출범이후 제기된 '우로비 의혹사건' 등의 처리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지배논리를 포장하기에 급급해 의혹을 해결하지 못하고 진상 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특별검사제 도입과 부패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ATTAC 이란

이번 국제회의를 개최한 '아팍'은 우리말로 풀어서면 '시민지원을 위한 금융거래 과세연합'이란 긴 이름의 단체다. 프랑스 진보저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제안으로 지난해 6월 만들어진 아팍은 어느새 프랑스, 유럽을 넘어 세계적 차원에서 국제투기자본에 맞서는 대표적 단체로 발돋움했다. 이들의 생각은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주장한 '토빈세'에 뿌리를 둔다. 토빈세는 금융자본이 나라 안팎으로 드나들 때마다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매겨 자본이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단체의 이름에서 드러나듯 이들에게 세금의 목적은 제3세계 빈곤 퇴치·실업·교육 기금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이다. 만약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토빈세가 도입돼 국제금융자본에 0.1%의 세금을 물린다면 1년에 1660억 달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아팍은 내다보고 있다. 한편 최근 캐나다, 핀란드 등지에서 토빈세가 의회에서 표결 통과돼 아팍의 제안이 단지 몽상이 아님을 보여준 바 있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⑥

주민등록번호를 잊자

‘너 몇살이야? 어디 주민등록증 꺼내봐’ 몇년이 아니라 몇개월까지 계산하여 ‘나이’를 따지기 좋아하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써먹는 말이다.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과연 몇 살인가’가 똑딱 나온다. 주민등록번호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생년월일, 출생지, 성별’을 숨길 재간은 없다.

‘카드를 분실했는데요’ ‘카드 번호는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주민등록번호 대체요’

근관할 게 없다.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나라는 존재’가 금방 확인된다. 이런 저런 컴퓨터망을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나의 고유번호이기 때문이다.

‘검문 중입니다. 주민등록증 좀 보여주시죠’ ‘저, 지금 없는데요’ ‘그럼, 주민등록번호 대체요’

경찰관이 무전기에 대고 ‘나의 번호’를 두드린다. 그럼 무전기 건너편에서 나는 ‘나’로 확인되어 날라온다. 이처럼 ‘나’는 무수한 일련번호 속의 하나로 관리되고 있다.

이처럼 개인에 대한 파악, 정보수집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한 일상적인 감시체계를 작동시키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굴종을 강요하는 도구로써 주민등록번호는 기능하고 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인격에 관한 모든 것을 강제적으로 등록시키고 목록화 함으로써 재고조사가 가능한 하나의 물건처럼 인간을 취급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합치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적이 있다.

그러나,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대세를 강화하기 위하여’라는 목적하에 영검결에 고유번호를 하사(?) 받은 우리 국민은 이 번호가 나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생각을 꿈에도 해보지 못하고 수십년을 보냈다.

우리가 이 고유번호를 당연하게 알고 암기하고 요구받을 때마다 뱉어놓는 동안 정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버렸다. 그래서 어디서건 나는 나의 번호를 읊조림으로써 ‘나’임을 증명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수십년간 우리를 길들여온 이 번호는 명확한 법률 규정 없이 아닌 한갓 ‘시행령’에 기대고 있다.

국가신분증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많기는 하나, 우리처럼 많은 통제장치를 갖춘 데는 없다. ‘전국민고유번호제’에다 ‘전국민간접발급’, 국민이 거주지와 거주지를 이동할 때마다 ‘간접등록’을 하도록 하는 3개의 제도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는 우리가 유일하다.

그리고, 이를 이용한 정보의 수집과 분류, 확대, 적용을 편리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민등록번호이다. 우리 국민 개개인에 대한 어떤 정보든지 유기적으로 묶어 버릴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무서운 열쇠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디지털화된 주민등록증이 만들어진다면 ‘나를 열어보세요’라는 말과 같다.

주간인권호름

(99년 6월 21일-6월 28일)

1. 계버릇 남 못준다 서울대생 강성석 씨 양심선언, 국가정보원이 프락치 활동 강요했다고 폭로(22일), 인권단체 기자회견 및 국정원 앞 규탄집회 이어져/경찰청과 정보통신부, 통신상에 게재한 글 문제삼아 게시물과 ID 강제삭제(21일)

2. 특검제는 양보 못한다 여권, 조폐청 파업유도 의혹 관련 특별검사제 법안 단독으로 국회 제출하기로 결정(21일) 정부의 한시적 도입에 맞서 역대 최대 규모의 195개 시민·사회단체 ‘특별검사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국민행동’ 결성(24일), 전국 규모의 국민서명운동 돌입(28일)

3. 이제야 빛보개된 의문사특별법 국민회의, 69년 이후에 발생한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특별법 시안 확정, 국회에 내기로(24일)

4. 감옥에서 고용해주나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구속된 노동자 291명, IMF 사태에 따른 노동쟁의 증가 폭보다 구속노동자수가 2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반면 사업주 구속은 24명에 그쳐(21일)

5. 대화는 시작하지만 민주노총 14일부터 진행해온 단식 농성 풀고 정부와의 대화 나서(26일), 금주 중 민주노총 대통령 면담 예정, 한국노총·노동부장관·노동특위위원장 공동기자회견 ‘노-정합의문’ 발표(25일)

6. 연극이었나 손숙 환경부 장관 불명예 퇴진(24일),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하다’ 인사청문회 도입 주장 재계

7. 남북, 아슬아슬한 줄타기 ‘이산가족 성과 있어야 비로 보내겠다’ 김대통령 발표(25일), 남북 차관급 회담 난항, 이산가족 논의 구체적 합의점 못찾아(22-26일) 금강산 관광객 민명미씨 억류 및 석방(20일-25일)

8. 작은학교는 살고 싶다 21개 교육·사회단체,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기자회견(25일), 7월 2일부터 50여개 초등학교 등교거부운동 전개예정

9. 경찰관, 총기사용 허용범위 제재 단순도주범 총기치사 관련, 대법원 ‘국가에 배상책임’ 판결(27일)

특별기고

왜 작은 학교를 지켜야 하는가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작은 학교를 지키는 사람들 대표)

99년 2월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총 6518개였다. 이중 전교생이 백명 이하인 학교가 전체의 40퍼센트인 2594개이다. 대부분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학교들이다. 교육부는 이중 2077개교를 앞으로 3년간 모두 통폐합할 작정이다. 올해 2월 28일자로 544개 학교를 이미 폐교시키거나 분교로 격하시켰고, 8월31일까지 591개 학교를 추가로 통폐합할 예정이다. 1982년부터 1996년까지 16년 동안 3043개교, 1년 평균 127개교를 통폐합한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늘었다.

농어촌 작은 학교의 통폐합 정책은 결국로 교육부가 통폐합의 당위성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교육제정의 효율적 운용과 농어촌 교육 환경의 개선이다. 일단 학생수가 적은 곳에서 학교를 유지하자니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논리이다. 교육부는 교육논리에 따라 농어촌 작은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작은 학교의 학생들은 경쟁심 부족으로 성적이 대도시 과밀학급 아이들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또한 학생수가 적어 사회적 형성이 잘되지 않는다고도 한다. 교육부의 말대로라면 시골의 작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도시의 아이들에 비해 성격도 불량하고 공부도 못하는 아이들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올해들어 갑자기 농어촌 작은 학교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작은 학교 아이들의 교육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무리하게 추진한 교원정년 단축 때문이다. 8월 말까지 5590명의 초등학교사가 명예퇴직을, 4557명이 정년퇴직을 하게된다. 이중 임용교사를 통해 교사로 발령할 수 있는 숫자는 불과 천명이다. 나머지 9000명중 3800명을 소위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채울 예정이다. 정부의 실수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피해를 겪어 수십년 동안 가꾸어온 학교를 빼앗기고, 아이들은 통학버스를 타고 콩나물교실을 찾아가야한다.

교육부가 이렇게 무리한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 무마를 위해 교육부는 최고 10억까지 통합학교에 지원하겠다는 당근을 제시했다. 대신 작은 학교로 계속 남는 학교에는 지원의 중단, 그리고 통폐합실적이 부진한 각 시도 교육청에 배분하는 지원금을 줄이겠다고 했다. 결국 일선 시군 교육청은 무리하게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할 수 밖에 없었고 당연히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농어촌 작은 학교의 통폐합 정책은 근 20년 가까이 시행되었지만 농어촌의 학교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대한민국 학부모들중에서 자기 자식이 더 좋은 학교로 옮겨가는데 반대한 학부모들이 어디 있었는가? 더욱이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반발에 거세지자 ‘반발이 극심한’ 학교는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유보시키려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내보냈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 학교는 통폐합을 강행하고, 집단시위나 등교거부등 강경한 대응을 한 학교는 살려놓으라는 것이다.

농어촌 작은 학교의 통폐합은 가장 순수하고 인간적인 교육환경을 스스로 파괴하는 우매한 짓이다. 교육부가 나서서 해결할 문제는 한 학급에 40-50명을 집어넣는 사육장 같은 콩나물 교실로 가득한 수 천명의 거대학교이지, 한 학급에서 15-20명의 학생들이 교사들과 자연스럽게 수업을 하는 농어촌의 작은 학교가 아니다. 공존은 없이 경쟁만 있고, 신뢰는 없이 불신과 냉소로 가득찬 도시의 거대 과밀학교를 농촌의 작은 학교처럼 열린 교육, 인간 교육, 자연 교육이 가능한 환경으로 바꾸는 게 교육부의 책임이다.

농어촌 작은 학교들은 대부분 60년대 박정희 정권 당시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직접 지은 학교들이다. 보릿고개 넘던 시절 나물죽과 썩거먹으로 연명

하면서도 학교를 짓기 위해 콩과 쌀을 아껴모아 학교터를 마련했다. 농촌의 작은 학교는 지역주민들의 인고와 교육에 대한 열정이 담긴 살아있는 역사인 것이다. 교육개혁을 한다며 호들갑 떨던 사람들이 결국 저지른 일은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자신들의 행정적 실수를 가리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마구 유린한 것이었다.

교육부가 사설 학원을 경영하는 것처럼 공교육에 접근한다면 우리사회의 미래는 없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교육법은 ‘학교의 지역별, 종별의 공정한 배치’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는 현재의 교육행정, 특히 도시 중심적 교육행정은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가 없게 만들고 있다.

교육부의 일방적인 농어촌학교 통폐합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지역여건에 맞게 지역주민,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고려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반대가 극심한 학교’만 통폐합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국 수백개 학교의 학부모들이 교육청, 교육위원회, 시도의회, 교육부, 농림부, 청와대 등지에 탄원서, 진정서를 보냈다.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도 무수히 치렀다. 그렇지만 누구도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마지막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극심한 반대’를 보여주어야만 학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국정운영’을 약속했다. 이제 농어촌 학부모들이 교육부에 자신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극심한 수단을 동원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는 커녕, 과격화를 부추키는 것이 교육부의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6월 30일(수)
제 1401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멀고 먼 에바다 정상화

비밀합의서 발각, 농아원생 천막농성 돌입

에바다 농아원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원생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다. 이번 농성은 최성호 전 에바다복지회 대표 이사를 다시 에바다 대표이사로 선임 한다는 내용의 비밀합의서가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 합의서는 지난 97년 12월 김선기 평택시장과 최 전 대표이사 간에 작성된 것으로, 지난 6월 이성재 의원의 이사장 효력정지 소송 중 공개됐다.

합의서는 "관선대표이사는 임기종료 이후에 대표이사를 최성호 이사로 동의하고 평택시는 이를 승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상임이사를 최성호 이사로 해 관선 대표이사 승인시 같이 한다"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관선대표이사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의서가 작성된 시점은 농아원생들이 에바다 정상화 투쟁이 1년이 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자 평택역 앞 천막농성을 시작했던 때다. 따라서 이 합의서는 평택시가 앞에서는 에바다 문제를 해결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최 전 대표이사와 밀착했다는 것을 보여준 기만적인 이번 합의서로 평가된다.

합의 내용이 확인되자 농아원생들은 "평택시와 최 전 대표이사측 간의 유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아무 조건 없는 최 전 대표이사의 복귀는 이러한 유착관계에서 비롯된 굴욕적인 합의"라며 분노했다. 이들은 28일부터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김대중 정부의 특단'을 요구하며 평택역 천막농성에 돌입했으며 7월 1일부터는 명동성당에서 항의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농아원생들의 에바다 정상화 투쟁은 오늘로 946일째 계속되고 있다.

시청측은 해명서를 작성, "에바다복지회 정상화를 위한 관선이사 조기 파견을 위하여 시와 재단측간에 향후 정상화시 운영방안을 합의서로 작성한 것일 뿐"이라며 "아무 의미 없는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에바다 사태는 96년 11월 27일 농아원생 60여명이 처우개선과 강제노역, 공금횡령 등에 관한 농성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이후 수사와 감사 등을 통해 재단 비리사실이 확인돼 최 전 대표이사 등이 구속되는 한편 이사진 전

원 개편과 관선이사장 파견 등이 이뤄졌다. 하지만 집행유예로 나온 최 전 대표이사 등은 측근 이사진들을 동원해 에바다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해 왔으며, 지난 4월 이성재의원(국민회의)의 관선이사장 취임을 방해하기도 했다. 또한 법원에 이성재 신임이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수원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이성재 신임이사의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에바다 사태는 사회복지시설내의 비리와 원생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부분의 시설 비리사건이 한때 문제가 되다가도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는 실정을 본다면 에바다 사태와 정상화를 요구하는 농아원생들의 끈질긴 투쟁은 그 추이가 주목되는 상징적 사건이다.

"뚝바로 해라"

서울시경, 수배자 착각 불법연행

서울시경 홍제동 대공분실 요원들이 일반시민을 수배자로 착각해 불법 연행한 뒤 신분을 확인한 후에도 한시간 넘게 붙잡고 있던 사실이 밝혀졌다.

26일 친구 결혼식에 참가했던 박관조(서울 한남동, 29) 씨와 김태훈(29) 씨는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 장소로 가던 중 갑자기 달려든 4-5명의 남자들에 의해 납치됐다. 낯선 남자들은 아무런 고지도 없이 박 씨의 목을 휘감고 김 씨의 팔을 뒤로 꺾은 뒤 경찰차에 태웠다. 박 씨 등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며 강력히 항의하자 낯선 남자들은 그제서야 "수배자 유병문, 이창희, 너희는 국가보안법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들을 홍제동 대공분실 요원이라고 밝혔다. 박 씨 등은 신분증을 내밀며 "수배자가 아니니 빨리 내려달라"고 주장했지만 요원들은 신분증을 확인한 뒤에도

박 씨등을 중부경찰서로 연행했다. 수배자 유 씨의 얼굴을 아는 중부서 경찰관들이 유 씨 등이 아님을 증명했지만 요원들은 박 씨 등을 풀어주기는 커녕 오히려 "전과 기록을 확인해 봐야한다"며 지문을 채취했다. 요원들은 전과기록 조회로 박 씨가 한차례 구속된 사실이 확인되자 지난 사건기록을 캐묻기도 했다. 결국 박 씨 등에게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요원들은 한시간이 넘게 경찰서에서 불법 구금해놓고 있다가 풀려났다.

이에 차병직 변호사는 "체포시 이유와 소속 등을 밝히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불법체포임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불법적 행태를 고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유병문, 이창희 씨 등은 김영삼 정권 시절 수배자로 현재 조계사에서 '수배 해제 촉구'를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평화와 인권 ③

피의 산업 언제까지나

98년 한해 동안에만 벌어진 주요한 군사 분쟁이 세계적으로 28건에 달하여 지구상의 포성은 멈추지 않고 있다. 생명 파괴, 가족 해체, 난민 양산 등 전쟁의 폐해는 한 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전쟁으로 인한 인류의 재원 상실도 만만치 않은 문제이다.

95년, 영국의 한 평화단체는 지구상의 모든 인류, 즉 성인 여성과 남성, 어린이를 모두 포함하여 인구 1인당 연간 180달러(한화 약 20만원)를 군비에 사용하고 있는 꼴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적이 있다.

최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99년 군비연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세계의 군비지출은 87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이는 주로 러시아의 군비지출이 대폭삭감(98년 55%)된데 기인한 것으로, 전세계 군비지출은 여전히 엄청난 규모로 진행되어 약 7천4백5십억 달러(한화 약 81조9천5백억원)에 달한다.

또 다른 문제는 세계 무기 생산이 소수 선진국에 편중돼 있다는 사실이다. 주요 선진국의 10대 무기생산국이 전 세계 무기의 90%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중 미국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그 무기를 사들이는 국가는 제 3세계들로 오늘날 제3세계에는 의사의 숫자보다 8배나 많은 군인들이 첨단무기를 팔려 안고 있다. 인류의 군사비 지출이 세계 인구의 절반이 벌어들인 소득과 맞먹는다는 보고에서 가장 큰 산업이라는 무기 산업에 인류는 귀중한 자원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이다.

남북 분단과 대치라는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로서 그 정도가 더하면 더했지 결코 예외일 수 없다.

국방부가 발표한 2천년도 국방요구에 산(안)은 금년도 국방예산보다 12.1% 증가한 15조4천1백2억원이다. 이는 5천만 국민 1인당 약 30여만원을 한해 군사비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우리 나라는 매년 5조원 가량을 무기 구

입에 쓰고 있으며, 한-미 공동작전 때문에 그 80%를 미국에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방위를 위한 지출은 어찌보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그 부정적 요소에 대한 비판이나 대안적인 노력에는 쉽게 다가서 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미명하의 군비확보가 오히려 평화를 위협하고, 긴급 수혈이 필요한 사회의 여러 부분을 제쳐두고 피의 산업이라는 무기생산과 구매에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는 오랜 지적으로부터 우리는 분단과 대치를 방패로 '예의'임을 늘 자처하며 거리를 유지해 왔다.

일례로, 99년 3월 1일로 발효에 들어간 국제대인지뢰금지협약은 여전히 먼 세상의 일이다. 지난 26일 충남의 한 민가에서 대인지뢰가 폭발해 9살 소아가 오른쪽 발목이 잘리는 사고가 일어났다. 여기서 드러나듯 지뢰는 전방지대만이 아니라 후방의 민간인을 위협하고 있다. 국방부는 부산, 울산 등 후방에만 7만5천여개의 발목지뢰가 묻혀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지뢰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과 더불어 대인지뢰금지협약을 무시하고 있는 우리로서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다.

안보는 생명이라며 군대가 뭘 사겠다고 하면 국민은 어쩔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다. '안보'를 이유로 한 철저한 정보 미공개는 국민에게 '피의 산업'을 감시하고 판단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일례로 지난해 감사원이 군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한 특감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당 64센트짜리 헬기 부속을 2,317개나 비싸게 도입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사실은 23배'라고 주장하였다. 어느 쪽 얘기를 들어도 고개가 내저어지는 대목이다.

국민 1인당 30만원! 적어도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머리를 맞대고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의료보험 등에 쓸 수 있기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대하합섬 노조 자민련 농성 당 차원의 진상조사반 구성 합의

대구 대하합섬 민주노조가 29일 오후 5시 자민련 당사 앞에서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진 데 이어 노조 간부들이 당사를 점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민주화학생유연맹 사무처장 정종상씨를 비롯한 최영술 대하합섬 노조위원장 등 5명은 "유령노조를 설립, 노조활동의 자유를 가로막아온 자민련 대구 북구갑 위원장 채병하씨의 구속"을 요구하면서 이날 집회 직후인 오후 5시 30분부터 자민련 당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자민련 당사에서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농성을 벌이기는 처음 있는 일이다.

대하합섬 노동조합에 따르면, 대하합섬 대표이사인 채병하씨가 지난 94년 조·반장 5명, 조합원 245명으로 조합 설립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 노조에는 현장에 있는 300여 노동자 중 아무도 가입한 사실이 없으며, 대의원대회나 총회도 열린 적이 없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5년간 '휴면' 상태인 유령노조 때문에 지난 5월 30일 설립된 민주노총을 상급조직으로 한 노조 설립 신고서가 구미시에 의해 반려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노조측은 농성과 집회 등을 벌여 유령노조의 해체와 노조를 탄압하는 자민련 지구당위원장이자 회사 대표이사인 채병하씨의 구속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한편, 자민련의 박세지 의원은 농성단과 29일 만나 △자민련 당 차원의 진상 조사반을 구성, 현장 조사 실시할 것 △채병하 대표이사와 민주노조와의 직접 협상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에 상경했던 대하합섬 노동자들은 현장으로 돌아갔으며, 농성단은 자민련측이 약속을 지켜 진상조사반을 구성, 파견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기로 했다.

구독료 납부로
<인권하루소식>에 힘을
전국 어디서나
지로번호 7618848

<인권하루소식> 99년 6월분 총목차(1380-1401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380	6/1	1	새벽 상경 농민 날벼락 - 불심검문 혐의하다 강제연행/ 또아리 뜬 개정 집시법 - 전해주 집회금지 번복/ 주요공판 안내
		2	영남위 구속자 강제이감 - 구속자 가족 폭력사태 주장/ 뚝다 하면 퇴진 대상 - 법무장관 퇴진 및 검찰개혁 촉구대회
1381	6/2	1	사람 죽이려나 - 부산구치소, 단식 구속자에 식수 중단/ '노동계 요구 경청하라' - 민변, 시국에 대한 견해 밝혀/ "또 다시 죽이지 마라" - 시민단체, 군의문사 유가족지지 집회
		2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집시법, 국민 기본권 침해/ 행정법은 고무줄 - 면회 담당자 근거없는 판단
1382	6/3	1	군의문사 가족 심장에 못질 - 한밤 경찰 수백명 동원 강제연행 /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 유가족 등 국민회의 점거농성/ 군에서 온 편지
		2	조용히 넘길 일 아니다 - 여기자 성추행 검사 징계 제자리 / <국제인권소식> ① 동티모르 먹구름 여전 ② 버마 인권문제를 고려하라
1383	6/4	1	'알 권리' 막는 부실운영 - 참여연대 실태조사, 정보공개제도 시늬 뿐/ 고문 국회의원 수사 촉구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①/ 주거기본법 제정 촉구 - 무주택자의 날 집회/ 만화사랑방 - 군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농성에 전투경찰 난입
		2	전쟁, 남의 문제가 아니다 - 평화를 위한 세계행동의 날, 유고공승 규탄/ 민주열사·희생자 추모 기간 - 7일부터 일주일간/ <추모제 행사 일정>
1384	6/5	1	전쟁, 남의 문제가 아니다 - 평화를 위한 세계행동의 날, 유고공승 규탄/ 민주열사·희생자 추모 기간 - 7일부터 일주일간/ <추모제 행사 일정>
		2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라 - 32개 시민사회단체, 군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집시법 재개정 촉구 - 범국본, 집시법 개악 규탄 집회/ 행사와 동정
1385	6/8	1	매 맞는 것도 죄인가 - 철거민 폭행·강제연행, 성추행 의혹/ 얼굴 내보인 국방부 - 전군협, 국방부 장관 면담
		2	반개혁 세력을 가져보자 - 국정개혁 촉구 국민연대행동주간 선언/ 남북교류 활성화의 두 얼굴 - 용정 방문 전국연합 대표단 연행/ 주간 인권호름(5월 31일 - 6월 7일)
		3	<인권시평> 군사대국으로의 숨죽인 발걸음 - 일본의 주변사태와 평화 그리고 인권, 이경주(경북대학 법학과 교수)
1386	6/9	1	아셈 2000에 도전한다 - 한국민간단체포럼 준비위원회 결성/ <현장스케치> 강제철거는 인권침해는 행위라더니 - 정릉 4동 강제철거 현장을 찾아
		2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②/ 조자 사건, 다시 기지개 - 이적단체 혐의, 대학생 대거 연행
1387	6/10	1	피리 잡힌 공작의혹 - 공안대책협의회 해체 새 쟁점화/ "취중진언" 규명하라 - 계속되는 국민행동 주간
		2	철거민, 계속되는 수난 - 경찰 조사시 강제활영 당해/ 국제금속노련, 법무부에 공개서한/ <현장스케치> 범국민 추모제 -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 주간
1388	6/11	1	이래서 안되 저래서 안돼 - 집회방해 부추기는 개정 집시법/ 또 IS 연행 - 국제사회주의자, 긴급체포/ 만화사랑방 - 검찰, 조폐창 파업 유도
		2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③/ <인터뷰> 동티모르를 카메라에 담은 금강석PD - "학살의 땅에 봄을"
1389	6/12	1	제동 걸린 불법 사찰 - 정보사찰 뿌리뽑기는 미지수/ 노동계 대정부 투쟁 고조 - 청와대 항의 서한 전달
		2	주민전산화 어떻게 불것인가 - 정보통신연대 INP 심포지엄/ 행사와 동정
1390	6/15	1	영남위 구속자 단식 풀어 - 부산구치소장 사과, 폭행 진상 밝혀야/ 민주노총, 단식농성 돌입 - 대통령 책임져라/ 주요공판 안내
		2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④/ 주간인권호름(6월 8일 - 6월 14일)

<인권하루소식> 99년 6월분 총목차(1380-1401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391	6/16	1	문턱 안가리는 경찰 - 학원담당 경찰, 새벽 도서관 난입/ 서준식 씨 결심 공간 -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구형
		2	진단! 공안대책협의회(1) - 조폐공사 사건, '빙산의 일각'/ 여성 고용 위험 수위 - 여성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토론회
		3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최후진술 요지
1392	6/17	1	행정법 제대로 고쳐라 - 인권단체 워크샵 개최/ 김대중 정권은 '배반의 정부' - 각계대표 총체적 개혁 촉구
		2	진단! 공안대책협의회(2) - 한총련 탄압부터 노숙자 단속까지/ '좋은 벗들' 설립 기념식 - 남과 북이 친구되자
		3	<특별기고> 홍세화 씨의 귀국, 그리고 또 한 번 잊혀진 사람들, 이우갑(신부)
1393	6/18	1	대법원도 한재도 막혔다 -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 불심검문은 계속된다 - 기소증지자 검거대책, 불검 개선 등감
		2	진단! 공안대책협의회(3) - '계약사 합동수사본부' 그 뿌리/ 울산대 혁신위 전원 유죄 - 이적단체 구성 혐의/ 만화사랑방 - 서준식, 검찰 5년 구형
		3	<자료> 1999년 국제 엠네스티 연례 보고서 - 남·북한 보고서
1394	6/19	1	풀리지 않은 매듭, 양지마을 - 노재중 전 이사장 징역 3년 선고/ "자본의 자유화를 반대한다" - 6·18 국제민중행동의 날
		2	진단! 공안대책협의회(4) - '민주주의와 인권의 적' / "단식농성 중" 기자회견 - 노조대표자 단식농성 돌입/ 행사와 동정
1395	6/22	1	공안유령 돌아왔다 - 국정원, 서울대생에 프락치 감요/ 주요공판안내
		2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⑤/ 주간인권호름(6월 14일 - 6월 21일)
1396	6/23	1	사제총포에 언론 집중포화 - 철거민, 내 얘기도 들어달라/ 감옥에서 교단으로 - 안재구 교수 석방 추진위원회 결성
		2	프락치 매수공작 폭로 - 서울대생 양심선언, 책임자 처벌 촉구/ 인권영화제 탄압 계속 - 인천영화제 벌금 구형
1397	6/24	1	삼킨 세금 내놓아라 - 국민환수 소송단 되찾기 나서/ 농림부법안에 반발 - 협동조합개혁 법안 마련 공청회
		2	'초대받지 않은 손님' 거부 - 미군기지 국제회의/ 긴급체포 무자격 논란 - 영남위 긴급체포 위법 사례 수집/ 새로운 책 '역사 속의 성적소수자'
1398	6/25	1	통신공간에도 감시의 눈 - 경찰청, 게시물·ID 삭제/ "행정법을 바꿔라" - 서울구치소, 재소자 폭행/ 미봉책은 필요없다 - 특검제·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2	평화와 인권① - 어떤 평화를 꿈꾸는가? / "친구가 의심된다" - 국정원 프락치 감요 규탄 집회 / 만화사랑방 - 국정원, 서울대생에 프락치 감요
1399	6/26	1	작은 학교는 살고 싶다 - 학교문을 위한 등교거부 운동/ 행사와 동정
		2	평화와 인권② - 가족 재결합은 기본적 권리/ 대인지되는 없다? - '끝나지 않은 전쟁 - 대인지뢰' 사진전/ 퇴출도 억울한데 폭력행사 - 현대본사 앞 경찰은 수수방관
1400	6/29	1	금융시장의 독재를 막자 - ATTAC 국제회의, 한미투자협정 반대/ 미봉책으로 포장말라 - 지역의보 국고지원 확대가 본질/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 - 특검제도입 국민행동 돌입
		2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⑥/ 주간인권호름(6월 21일 - 6월 28일)
		3	<특별기고> 왜 작은 학교를 지켜야 하는가, 장호순(순천향대 신방과 교수)
1401	6/30	1	멀고 먼 예바다 정상화 - 비밀합의서 발각, 농아원생 천막농성 돌입/ 폭바로 해라 - 서울시경 수배자 착각 불법연행
		2	평화와 인권③ - 피의 산업 언제까지나/ 대하합성 노조 자민련 농성 - 당 차원의 진상조사반 구성 합의
		3·4	99년 6월분(1380 - 1401호) 총목차